

현대정치연구

2022년 겨울호 (제15권 제3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차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주택소유와 투표선택: 회고투표 vs. 자산투표 신정섭	5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유권자의 투표선택 : 후보자의 도덕성 요인을 중심으로 김진주	35
투표 참여를 통해 본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징 가상준	65
한국의 여론과 정책 연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광은	99
능력주의, 체제 정당화, 그리고 정부신뢰 오하석 · 한성민	139
탈서구중심주의 비교정치이론 방법론의 모색 : 강정인의 ‘상사성’ 비유와 ‘개념적 중립성’ 이관후	187

■ CONTENTS

The Effects of Homeownership on Vote Choice in the 20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Retrospective Voting vs. Patrimonial Voting <i>Shin, Jungsub</i>	5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nd Voting Choice in the Korean Electorate: Focusing on the Candidate's Morality <i>Kim, Jinju</i>	35
Characteristics of Korean Independent Voters <i>Ka, Sangjoon</i>	65
An Exploratory Study on the Opinion-Policy Link in South Korea <i>Choi, Gwang-Eun</i>	99
Meritocracy, System Justification, and Governmental Confidence <i>Oh, Ha Seok-Han, Sung Min</i>	139
Analogy of 'Analogous Organ' of Kang Jung-In and 'Conceptual Neutrality' in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Methodology <i>Lee, Kwanhu</i>	187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주택소유와 투표선택: 회고투표 vs. 자산투표

신정섭 | 숭실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폭발적인 주택 가격 상승 시기에 주택소유자들이 전통적으로 보수성을 보이는 자산투표 행태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보답으로 집권당에 보답을 하는 회고적 투표행태를 보일 것인지를 개인수준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3개월 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사전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들은 유주택자보다 진보정당 후보이자 집권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주택자들은 무주택자보다 보수정당 후보이자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계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주택소유자들은 회고투표보다는 자산투표에 더 가까운 투표행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주택소유, 회고투표, 자산투표, 한국 대통령 선거

1. 서론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몇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 선거였다. 첫째,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라는 점, 둘째 주요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이 출마한 선거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가 0.73% 차이로 역대 가장 적은 차이였다는 점 등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이슈들이 등장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 정부 시기 폭등한 부동산 가격과 이에 따른 부동산 세금 문제였다(조영호 2022; 송경재 2022). 특히 문재인 정부시기에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급등하면서 소득을 축적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이전보다 몇 배로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택 점유 형태 간의 이동이 제한되어 평생 남의 집에서 사는 세대(*generation rent*)가 늘어나게 되면서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정준호 2021, 4).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부동산 세금 문제에 주목하여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주택소유 여부와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계경제 변화가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주택소유자는 보수적 이념성향을 가지며,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반면에 무주택자들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낙구 2010; 서복경 2014; 김도균·최종호 2018; 최종호 2020). 그러나 경제회고투표(*retrospective economic voting*) 이론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손해를 본 무주택자들이 야당이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이득을 본 주택소유자들이 여당이자 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박원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소유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집권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으며, 김지혜·권혁용(2020)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경우에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좌파 성향을 가진 집권당에 대해서 회고적 투표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은 투표행태에 있어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폭발적인 주택 가격 상승 시기에 주택소유자들이 전통적으로 보수성을 보이는 자산투표 행태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보답으로 집권당에 보답을 하는 회고적 투표행태를 보일 것인지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설문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더불어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주택소유 여부 자체에 주목을 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개인수준에서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경제에 미친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하고, 이러한 가계경제 변화가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주택소유자의 경우 완전히 동질성을 가지는 집단이 아니며 소유한 주택의 형태나 위치, 가격, 소유시기 등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 가격 변화 상황에서도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이질적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소유 여부로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이익과 손해를 가정하는 것보다 주택가격 변동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었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유권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주택가격 폭등 시기의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분석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3개월 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사전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들은 유주택자보다 진보정당 후보이자 집권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주택자들은 무주택자보다 보수정당 후보이자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소유 여부와 달리 다주택자 여부는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 소유가 1채 이상인 경우에 소유한 주택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여 보수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계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가격 변동으로 이익을 보았다고 응답한 유권자나 손해를 보았다고 응답한 유권자 간에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주택소유자들은 회고투표보다는 자산투표에 더 가까운 투표행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기존문헌 검토

유권자의 투표선택 요인(voting behavior)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경제는 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투표선택 연구의 오랜 전통은 주로 계급(직업이나 소득으로 구분되는)으로 대변되는 개인의 경제적 위치의 차이가 투표선택이나 정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Lipset 1960)이나, 경제정책을 쟁점이슈(positional issue)로 보고 경제정책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Kiewiet 1983, chp.2; Stokes 1963), 혹은 경제성장, 실업률, 물가상승률과 같은 합의이슈(valence issue) 정책을 정부와 후보가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Finorina 1981; Kinder and Kiewiet 1981)을 주로 분석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산수준과 소유자산의 형태가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투표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자산투표(patrimonial voting)라는 이름 아래서 정리가 되었는데 2010년부터 발표된 리처드 나두(Richard Nadeau), 마샬 푸코(Martial Foucault), 그리고 마이클 루이스벡(Michael Lewis-Beck)의 일련의 논문들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유권자는 단순히 경제상황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아닌 경제에 참여하는 참여자이며, 자신의 경제적 위치에 따라 정치적 선택을 달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주장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매우 고전적인 계급투표 이론을 답습한 것이었다. 다만 이들은 기존의 계급투표 이론들이 주목하는 직업이나 소득이

아닌 자산(property)이라는 변수에 주목을 하였다. 이들은 자산을 주택이나 예금과 같은 저 위험 자산(low-risk patrimony)과 주식과 같은 고 위험 자산(high-risk patrimony)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첫 번째 연구에서 1978, 1988, 2002년 프랑스 의회 선거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고위험 자산을 가진 유권자들은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을 선호하였으며, 투표선택에서도 일관적으로 보수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adeau et al. 2010).

이후 다양한 연구들에서 자산이 정치적 성향이나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영국(Lewis-Beck et al. 2013), 미국(Lewis-Beck and Nadeau 2011), 호주(Hellwig and McAllister 2019), 덴마크(Stubager et al. 2013), 스페인(Fraile and Lewis-Beck 2013), 스웨덴(Persson and Martinsson 2018), 포르투갈(Costa-Lobo 2013)에서 공통적으로 자산을 소유한 유권자들이 자산이 없는 유권자들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보수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최근 퀸란과 오클릭(Quinlan and Okolikj 2022)은 CSES(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모듈4 데이터를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하여 분석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산투표행태는 국가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데, 자유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s)와 투자에 대한 세금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은 다양한 자산의 종류와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몇몇 연구들은 자산 종류 중에서도 특히 주택에 초점을 맞추었다. 앤셀(Ansell 2014)은 주택소유가 사회복지정책 선호와 이념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의 경우 주택소유자일수록, 소유한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할수록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약하였으며 보수성을 띄었는데, 영국과 다국가 비교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라센 등(Larsen et al. 2019)은 덴마크 선거에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정부여당에 대한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할수록 정부여당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몇몇 연구들은 주택소유와 주택가격 상승은 비단 정부여당에 대한 투표선택뿐만 아니라 영국에서의 브렉시트(Brexit)나 프랑스에서의 포퓰리즘(populism) 정당에 대한 투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Adler and Ansell 2020), 네덜란드와 같은 다당제 국가에서도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André et al. 2018). 한편, 한성민과 신미정(Han and Shin 2021)은 자산 종류 중 주택소유에 초점을 맞추어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과 최고지도자 지지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최고지도자의 지지율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집권당이 우파 정당일 경우에만 나타났으며 좌파인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산과 주택소유가 정치적 성향이나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집합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박원호(2009)와 손낙구(2010)가 있다. 박원호(2009)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치러진 선거들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선거 직전 6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변동율, 자가소유 비율, 정당득표율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자가소유자들의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소유자들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집권당에 대한 보상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손낙구(2010)는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자가주택 소유와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지역에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연구로는 경제투표의 관점에서 주택자산과 투표선택의 관계를 분석한 김지혜·권혁용(2020)이 있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집합자료를 사용하여 지방선거의 광역비례대표 선거에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이 집권당 득표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수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집권당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진보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자가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집권당의 득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혜·권혁용(2020)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주택 유권자들이 거주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진보 집권당에 반대하는 회고적 투표 경향을 보였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집합수준이 아닌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개인수준에서 주택보유가 주택정책인식과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서복경(2014)은 2014년 지방선거 수도권 유권자 조사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가 거주자는 차가거주자보다 주택정책에서 개발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차가거주자는 자가 거주자보다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권자일수록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투표에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재욱·권혁용(2019)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실시된 네 번의 선거에 관한 패널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소유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주택소유자들은 무주택자와 비교하여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정부여당이 진보인지 보수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에서 주택소유자들은 무주택자와 비교하여 보수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균·최종호(2018)는 17대, 18대, 19대 대통령 선거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주택소유가 이념성향, 정당지지, 보수정당에 대한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택소유 여부가 보수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17대 대선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주택소유 여부가 보수 정당지지와 보수 이념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 번의 대선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최종호(2020)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주택소유와 주택소유 가격이 높을수록 유권자의 보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는 다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김대환·김보경 2021; 민인

식 2022). 이러한 맥락에서 김수인·강원택(2022)은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였는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보수정당 득표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에서는 자산이 높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자산, 특히 주택소유가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주택소유 여부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유한 주택의 가격변동에는 비교적 적은 관심을 두어왔다. 또한 소유한 주택의 가격변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개인수준이 아닌 집합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이와 달리 개인수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소유한 주택의 가격변동까지 측정하여 개인수준에서 주택소유와 소유주택의 가격변동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진보 정당 집권기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환경 속에서 주택소유자들이 자산투표와 회고투표 행태 중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I. 이론적 논의

1. 주택소유와 자산투표

경제적 계급이 정당정치와 투표선택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생각은 근대 정치학에서 매우 큰 믿음이었다(Bendix and Lipset 1957; Lipset and Rokkan 1967). 계급에 따라 정당지지와 투표선택이 달라진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계급을 어떻게 측정하고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다. 고전

적으로 계급은 주로 직업을 중심으로 측정되었는데 1950-60년대의 육체노동과 비육체노동(manual versus non-manual workers)으로 구분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라이트(Wright 1985)나 골드소프(Goldthorpe)의 좀 더 발전되고 세분화된 직업 분류 방식(Erikson and Goldthorpe 1992)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다층화 되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주요 노동자들의 일터가 되면서 기존의 직업을 중심으로 한 계급투표 현상은 점점 약해지거나 사라져가게 되었다(Clark and Lipset 1991; Nieuwbeerta 1995; Jansen et al. 2013). 한편, 일각에서는 직업 대신에 소득을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주는 계급적 요인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사용돼 오고 있다(Stonecash 2000; Bartels 2008). 그러나 최근 들어 계급과 경제적 양극화를 보여주는 자산의 중요성이 소득이나 직업과 같은 전통적인 변수만큼 혹은 더 높게 여겨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Piketty 2013). 그리고 위의 기존문헌 검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산은 다양한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과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정치적 태도와 정치적 지지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사실 이 논리는 정치경제학 이론의 고전인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이론과 매우 닮아있다. 경제적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로 계급이 나뉘고 이러한 계급적 토대 위에서 정치적 대립이 발생한다는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자산소유 유무에 따라 투표선택이 결정된다는 자산투표 이론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물질적 이익(material interests)의 토대가 달라지고 이러한 물질적 이해관계의 대립은 결국 정치적 태도와 투표선택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Foucault et al. 2013, 558). 물론 자산 역시 종류가 다양하며 어떤 종류의 자산이 계급적 위치를 나타내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국가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Quinlan and Okolikj 2022).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주택자산이 자산 중 매우 지배적

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날 한국인들의 자산 중 약 75%가 주택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재욱·권혁용 2019). 그만큼 주택은 한국인들의 자산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들에게 주택은 자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investment) 수단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정준호 2021). 더욱이 주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과 다르게 매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자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자산인 주택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특징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이재욱·권혁용 2019, 126).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문헌 검토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적 맥락에서의 자산투표 연구는 대부분 주택소유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전통적인 계급이론에 기초해 보았을 때도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유권자들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경제적으로 보수적 성향(부동산 규제 철폐와 부동산 세금 인하 등)을 가지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경제적으로 진보적 성향(주거안정 정책강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가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기존연구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다(서복경 2014).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을 예측해 보면, 유주택자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무주택자는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재명 후보가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유주택자들보다는 무주택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 기간 주택 가격 상승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주택자들에게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예측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

가설 1: 무주택자들은 유주택자들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보다 진보정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더 높을 것이다.

2. 주택소유와 회고투표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설명하는 모델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경제회고투표(retrospective economic voting) 모델이다. 경제회고투표 모델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현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경제가 좋았다고 판단을 하면 다음 선거에서 현 집권당의 후보들에게 표를 던지고, 좋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면 기권을 하거나 다른 정당 후보에게 표를 준다는 것이다(Lewis-Beck and Stegmaier 2000, 183). 이러한 경제투표 이론은 이후 다양한 국가와 정치·경제적 환경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Lewis-Beck and Stegmaier 2000; Duch and Stevenson 2008).

경제회고투표는 개인수준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투표선택(sociotropic economic voting)이고, 다른 하나는 유권자의 가정경제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투표선택(pocketbook economic voting)이다. 경제회고투표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가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할 때는 국가경제와 가정경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며, 두 가지 모두 투표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Kinder and Kiewiet 1981). 비록 기존연구들 중 많은 연구들이 유권자의 가정경제에 대한 평가보다는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가 더 강하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Fiorina 1981; Kiewiet 1983; Lewis-Beck and Stegmaier 2000 등), 유권자의 개인경제에 대한 평가 역시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존재하고 있다(Markus 1992; Lanoue 1994).

이러한 경제회고투표 이론을 주택소유와 자산투표에 적용을 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유주택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집권

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주택소유자들은 현 정부가 자신의 주택 가치를 상승시켜주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집권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은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박원호 2009; 김지혜·권혁용 2020; Larsen et al. 2019; Han and Shin 2021)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 다만 국내 연구들의 경우 이러한 연구가 집합수준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가격 상승이 유권자 개인의 투표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택소유에 따른 집권당에 대한 투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가격 상승률은 통계 데이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¹⁾ 따라서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자산가치의 상당한 상승을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집권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무주택자들의 경우 유주택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향후 주택 구매에 있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잠재적인 경제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로 집권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확률이 낮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상에 근거해 보면 위의 자산투표 이론에 따라 도출된 가설1에 반대하는 다음과 같은 대립가설이 세워질 수 있다.

가설 2: 유주택자들은 무주택자들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보답으로 투표할 의향이 더

1) 물론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이며, 특히 집값이 원래 비싼 지역이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게 상승하였다. 정부 시기별 주택가격 상승률과 지역별 상승률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경집코노미: <https://www.hankyung.com/realstate/article/202112159383e>)

높을 것이다.

가설2는 가설1에 대한 대립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설1과 가설2는 주택 소유자들이 자산에 기초한 자산투표행태와 회고적 평가에 기초한 회고투표행태 중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동일한 이득이나 손해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을 모두 동일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해도 주택가격의 상승은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도 오히려 지역에 따라 무주택자와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주택 소유자도 있을 것이다. 특히 1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집값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집값보다 크게 상승하였을 때, 집값 폭등으로 인하여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로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계경제에 대한 평가가 집권당 후보에 대한 회고적 투표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넘어, 실제로 주택가격 변동이 가계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개별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즉 실제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이득과 손해를 평가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계경제회고투표 (pocketbook economic voting)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택가격 변동이 가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을 주요 독립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지고 주택가격 상승이 집권당 후보에 대한 회고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가설3: 문재인 정부 기간 주택가격 변동이 가계경제에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하는 유권자들은 손해를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하는 유권자들보다 집권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IV.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한국선거학회와 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하여 실시한 “제20대 대선 사전 인식조사”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제20대 대선 사전 인식조사는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실시되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였으며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웹조사로 진행되었다. 표집 틀은 엠브레인 자체구축패널이었으며, 최종 표본 수는 1,800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3\%$ 포인트였다.

종속변수는 기본적으로 집권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이다. 본 연구가 분석한 설문조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이전에 실시된 사전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실제 투표 선택을 변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투표 의향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질문은 “3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할 예정입니까?”였다. 만약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응답하였으면 1, 아니면 0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가설1의 경우 집권당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을 보는 것이 아닌 진보정당 혹은 보수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나누어서 변수를 조작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을 진보정당, 국민의힘을 보수정당으로 상정하고, 두 정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들은 변수조작의 편의를 위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자를 제외한 전체 1,177명 응답자 중 44.6%인 525명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하였으며, 42.0%인 494명이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외에 심상정 후보 6.2%, 안철수 후보 5.7%, 기타 후보 1.5%였다.

주요 독립변수는 가설에 따라서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첫째, 가설1과 가설2

중 어떤 가설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측정하였다.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비율은 주택 소유가 79%, 주택 없음이 21%로 나타났다.²⁾ 둘째,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기간 주택가격 변동이 가계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유권자 평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변수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큰 손해를 보았다,’ ‘손해를 보았다,’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득을 보았다,’ ‘크게 이득을 보았다’의 순이었다. 응답 분포는 ‘크게 이득을 보았다’ 2.44%, ‘이득을 보았다’ 16.39%, ‘별다른 차이가 없다’ 64.94%, ‘손해를 보았다’ 9.72%, ‘큰 손해를 보았다’ 6.5%였다.

본 연구는 주요 독립변수 이외에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들을 통계검증 모델에 포함하였다.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문재인 정부 정책평가 변수들, 이념, 정당일체감, 출신지역으로 구성되었다.³⁾ 우선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로는 성별, 학력(전문대 교육 이상 유무), 연령(세대로 구분), 그리고 가구 월 평균 소득을 포함하였다. 문재인 정부 정책평가 변수들은 전통적인 경제투표 변수인 국가경제 변동 평가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정책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 평가를 포함하였다. 각 평가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낮은 숫자에서 높은 숫자로 갈수록 부정적에서 긍정적 평가로 구성되었다. 이념은 0(진보)에서 11(보수)까지 자카이념평가(ideological self-placement)로 측정하였고, 정당일체감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2)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주택소유 가구 비율은 56%로 본 표본의 주택소유 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처: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3) 본 연구는 자산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특히 주택)은 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주택소유 여부와 주택가격은 개인의 자산수준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자산의 75%를 부동산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산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하게 되면 주요 독립변수들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상승정도와 자산수준 사이의 상관관계는 0.7 정도로 매우 높았다.

주당에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여부의 이항변수로 측정하였다.

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주택소유 여부와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계경제 변화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표1>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설문 조사에서 주택소유 여부와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계경제 변화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 의향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모델1의 종속변수는 진보정당(이재명 후보) vs. 보수정당(윤석열 후보) 사이의 투표선택이었으며, 모델2, 모델3, 모델4의 종속변수는 집권당에 대한 회고투표 분석을 위하여 집권당 후보(이재명 후보) vs. 다른 모든 야당 후보이었다. 모든 모델들의 종속변수가 이항변수로 측정되었기에 통계분석은 이항로짓모델(Binary Logistic Regression)로 추정되었다.

<표1>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투표선택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주택소유 여부	-.909* (.364)	-.639* (.269)		-.751** (.293)
부동산 가격변동으로 인한 가계경제 변화			.008 (.136)	.147 (.145)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646*** (.181)	.493*** (.132)	.497*** (.131)	.484*** (.132)
성별(남성)	.357 (.288)	.782*** (.221)	.777*** (.220)	.776*** (.221)
교육(전문대교육 이상)	-.549 (.368)	-.703* (.296)	-.707* (.294)	-.685* (.297)
이념	-.483*** (.072)	-.212*** (.052)	-.218*** (.052)	-.210*** (.052)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정당일체감(더불어민주당)		3.800*** (.443)	3.169*** (.261)	3.150*** (.260)	3.169*** (.261)
코로나19 방역 정부 평가		.879*** (.134)	.666*** (.104)	.659*** (.104)	.678*** (.105)
국가경제 평가		.443* (.197)	.436** (.138)	.421** (.136)	.427** (.138)
가계소득수준		-.026 (.060)	.006 (.047)	-.018 (.047)	-.002 (.048)
세대	만18-29세	준거집단			
	만30-39세	.528 (.517)	1.182** (.376)	1.149** (.378)	1.203** (.380)
	만40-49세	.613 (.516)	1.003** (.365)	.960** (.363)	1.015** (.365)
	만50-59세	.109 (.501)	1.062** (.355)	1.038** (.354)	1.082** (.356)
	만60세 이상	-.909 (.475)	.306 (.343)	.269 (.342)	.320 (.344)
	출신지역	서울/경기	-.059 (.507)	.056 (.345)	.001 (.343)
광주/전남/전북		준거집단			
대구/경북		-.888 (.595)	-.449 (.422)	-.503 (.421)	-.450 (.423)
부산/울산/경남		.463 (.591)	.182 (.407)	.122 (.403)	.186 (.407)
기타		-.622 (.597)	-.443 (.418)	-.497 (.415)	-.428 (.418)
절편		-1.282 (.999)	-3.965 (.774)	-4.202 (.854)	-4.332 (.418)
표본 수		999	1,151	1,151	1,151
Pseudo R^2		.737	.610	.607	.611

참고: * $P < 0.05$, ** $P < 0.01$, *** $P < 0.001$

<모델1>을 보면 주택소유 여부 변수는 음의 방향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무주택자보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유주택자는 무주택자보다 보수정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확률이 높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수요 변수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는 -0.052 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권자보다 주택을 소유한 유권자가 다른 통제변수들이 동일한 조건을 가질 때 진보정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보수정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보다 약 5%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집권당 후보 대 야당 후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델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집권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보다 다른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유권자들의 주택소유와 투표선택 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회고투표 가설(가설2) 보다 자산투표 가설(가설1)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주택을 소유한 유권자들은 보수성을 가지며 진보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경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델3>은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계경제 변화가 집권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을 보여준다. 가설3의 예상과 달리 변수는 비록 양의 계수 값을 가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번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주택가격 변동이 자신의 가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투표선택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모델3>과 같은 발견은 기존 경제회고투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는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지만 개인경제에 대한 평가는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Shin 2018).

이러한 현상들은 주택소유 여부 변수와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계경제 변화 변수를 동시에 포함한 <모델4>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난 제20대 대통

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주택가격의 변화(대부분은 급격한 상승)로 나타난 개인 경제의 유불리를 투표선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주택소유자들은 무주택자들보다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 수요 변수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는 -0.062 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권자보다 주택을 소유한 유권자가 다른 통제변수들이 동일한 조건을 가질 때 집권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야당 후보들에게 투표할 의향보다 약 6%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 정책평가와 관련된 변수들은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⁴⁾ 즉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개인 가계의 이익과 손해와 관계없이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는 집권당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한번 한국의 경제투표 유권자가 정책이 개인경제에 미친 영향보다는 국가경제나 사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집권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소유와 달리 국가경제나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전통적인 회고투표 대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회고투표 행태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념이나 정당일체감 변수도 예상한 것과 같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세대의 경우에는 18세-29세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유권자가 이전과 달리 보수화 되었다거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높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최근의 주장들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교육은 고

4)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회고적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매우 잘못했다. 60.83%, 잘못했다. 23.34%, 보통이다. 11.92%, 잘했다 3.41%, 매우 잘했다. 0.5%였다.

졸 이하인 유권자가 전문대 교육 이상 받은 유권자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모델1>과 같이 투표선택을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거대 양당의 양자대결로 압축했을 때는 세대 간 차이, 성별, 교육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다주택자 여부가 유권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선택 의향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델 5
주택 보유 숫자	무주택	.649 (.274)*
	1주택	준거집단
	다주택	.058 (.295)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494 (.132)***
성별(남성)		.785 (.221)***
교육(전문대교육 이상)		-.702 (.296)*
이념		-.212 (.052)***
정당일체감(더불어민주당)		3.170 (.261)***
코로나19 방역 정부 평가		.665 (.104)***
국가경제 평가		.436 (.138)**
가계소득수준		.004 (.048)
세대	만18-29세	준거집단
	만30-39세	1.184 (.379)**
	만40-49세	1.004 (.365)**
	만50-59세	1065 (.355)**
	만60세 이상	.307 (.342)
출신지역	서울/경기	.053 (.345)
	광주/전남/전북	준거집단
	대구/경북	-.450 (.422)
	부산/울산/경남	.177 (.407)
	기타	-.444 (.418)
절편		-4.604 (.796)***
표본 수		1,151
Pseudo R^2		.610

참고: * $P < 0.05$, ** $P < 0.01$, *** $P < 0.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만약 주택소유 여부가 보수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을 높인다면, 보유한 주택의 숫자가 많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높아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다주택자들의 경우 1주택자와 비교하여 진보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낮아지고, 보수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높아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표2>는 다주택자 여부가 유권자의 투표선택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종속변수는 윤석열 후보와 비교하여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다. <표2>의 결과를 보면 1주택자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투표의향 확률이 무주택자에게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와 비교하여 진보정당보다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주택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서 이러한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VI. 결론

본 연구는 주택가격 폭등 시기 주택소유자들의 투표행태를 추적한다. 전통적으로 주택소유자들은 보수적 이념성향을 가지며 보수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태는 서구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권자들은 주택가격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손해를 투표행태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집권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집권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서로 다른 투표행태가 충돌할 때 어떤 행태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엄청난 폭등을 기록하였으며, 부동산세 역시 상향되었다.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자들은 진보정당보다는 보수정당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산투표 성향에 기초하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경제회고투표 이론에 의거해서 생각해 보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세금이 오르는 하였지만 자산 상에 큰 이익을 본 주택소유자들이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보상 투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설문조사 데이터에 기초해서 분석한 결과 유권자들은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소유에 있어 회고적 투표행태를 보이기보다는 자산투표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보상으로 집권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자산소유에 기초한 계급적 성격의 자산투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집합자료 수준에서만 분석하던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해와 투표선택 사이의 관계를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연구들의 경우 주택소유자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이득을 볼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주택소유자 모두가 주택가격 변동기에 동일한 이익과 손해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유권자가 주택가격 변동으로 어떠한 이익과 손해를 보았는지를 직접 유권자에게 물어보고, 이를 토대로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손해가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회고투표 연구에 있어서 좀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수준에서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손해가 집권당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손해는 집권당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한번 주택가격 변동이 한국에 있어 유권자의 회고투표 대상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기존의 경제투표연구에서 나

타나듯이 유권자들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손해를 회고투표를 위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다시 한번 발견되었다고 하겠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산, 특히 주택소유를 기반으로 한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개인수준에서 분석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 달리 주택소유 여부 자체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개인 경제의 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여 주택가격 변동이 경제적 회고투표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계급 투표와 경제투표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이라는 자산이 한국 사회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단 한 번만을 분석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집권당이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집권당이 주택가격 상승을 주요 공약이나 정책으로 내세우기 보다 오히려 주택가격 하락 혹은 안정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본 유권자들의 경우 이를 집권당의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선거에서 투표로 보상할 이유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보수 정권이 집권당인 경우에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집권당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실제 투표선택이 아닌 투표의향을 종속변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투표의향과 투표선택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투표의향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면서 아직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를 분석에서 제외하게 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분석한 데이터의 경우 주요 변수인 주택소유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실제보다 표본에 있어 주택소유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주택소유자들의 과대대표되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대환·김보경. 2021. “주택보유와 정치적 성향 간 관계연구.” 『부동산연구』 31집 3호, 29-43.
- 김도균·최종호. 2018. “주택소유와 자산기반 투표 : 17대~19대 대통령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7집 5호, 57-86.
- 김수인·강원택. “자산과 투표선택: 수도권 지역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6집 1호, 187-215.
- 김지혜·권혁용. 2020. “아파트 가격상승과 집권당지지: 2006-2018 한국 지방선거 분석.” 『동북아연구』 35집 1호, 305-338.
- 민인식. 2022. “주택소유 유형이 정치적 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할 잠재성장모형 활용.” 『한국정책학보』 31집 1호, 231-253.
- 박원호. 2009. “부동산 가격 변동과 2000년대의 한국선거: 지역주의 “이후”의 경제 투표에 대한 방법론적 탐색.” 『한국정치연구』 18집 3호, 1-28.
- 서복경. 2014. “2014년 지방선거와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지방정부연구』 18집 3호, 313-333.
- 손낙구. 2010.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서울: 후마니타스.
- 송경재. 2022.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 4집 3호, 5-28.
- 이재욱·권혁용. 2019. “주택소유와 투표선택: 한국의 선거, 2007-2012.” 『오토피아』 34집 2호, 121-155.
- 조영호. 2022. “문재인 정부 평가: 정치, 경제, 사회.” 『의정연구』 28집 1호, 6-40.
- 정준호. 2021. “주택자산 가치와 정치적 선택의 역학.” 『KDF Report: Issue & Reivew on Democracy』 62, 1-12.
- 최종구. 2020. “소득, 주택소유 그리고 투표선택: 19대 대선의 사례.” 『비교민주주의연구』 16집 1호, 189-221.
- Adler, David and Ben Ansell. 2020. “Housing and Populism.” *West European Politics*

43(2): 344-365.

- André, Stéfanie, Caroline Dewilde, Ruud Luijkx, and Niels Spierings. 2018. "Housing Wealth and Party Choice in a Multiparty System." *Comparative Politics* 50(4): 565-585.
- Ansell, Ben. 2014. "The Political Economy of Ownership: Housing Markets and the Welfare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8(2): 383-402.
- Bartels, Larry. 2008.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ndix, Reinhard and Seymour M. Lipset. 1957. "Political Sociology: An Essa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velopment of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stern Europe." *Current Sociology* 6: 79-99.
- Clark, Terry N. and Seymour M. Lipset. 1991. "Are Social Class Dying?" In *The Breakdown of Class Politics* eds. Terry N. Clark, and Seymour M. Lipset.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9-38.
- Costa-Lobo, Marina. 2013. "Dimensions of the Economic Vote: Valence, Positional, and Patrimony Voting in Portugal's 2011 Elections." *Electoral Studies* 32(3): 460-464.
- Duch, Raymond and Randy Stevenson. 2008. *The Economic Voting: How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Condition Election Resul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ikson, Robert and John H. Goldthorpe. 1992.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Oxford: Clarendon Press.
- Fin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oucault, Martial, Richard Nadeau, and Michael S. Lewis-Beck. 2013. "Patrimonial Voting: Refining the Measures." *Electoral Studies* 32(3): 557-562.
- Fraile, Marta and Michael S. Lewis-Beck. 2013. "Multi-Dimensional Economic Voting in Spain: The 2008 Election." *Electoral Studies* 32(3): 465-469.

- Han, Sung Min and Shin Mi Jeong. 2021. "Housing Prices and Government Approval: The Impact of Housing Booms on Left- and Right-Wing Governments in 16 Advanced Industrialized Countrie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 163-185.
- Hellwig, Timothy and Ian McAllister. 2019. "Party Positions, Asset Ownership, and Economic Voting." *Political Studies* 67(4): 912-931.
- Jansen, Giedo, Geoffrey Evans, Nan Dirk De Graaf. 2013. "Class Voting and Left-Right Party Positions: A Comparative Study of 15 Western Democracies, 1960-2005." *Social Science Research* 42: 376-400.
- Kiewiet, Roderick 1983. *Macroeconomics and Micropolitics: The Electoral Effects of Economic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nder, Donald R., and Roderick Kiewiet. 1981. "Sociotropic Politics: The American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2): 129-161.
- Larsen, Martin V., Frederik Hjorth, Peter T. Dinesen, and Kim Mannemar Sønerskov. 2019. "When Do Citizens Respond Politically to the Local Economy? Evidence from Registry Data on Local Housing Marke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3(2): 499-516.
- Lewis-Beck, Michael S. and Mary Stegmaier. 2000. "Economic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183-219.
- Lewis-Beck, Michael S. and Richard Nadeau. 2011. "Economic Voting Theory: Testing New Dimensions." *Electoral Studies* 30: 288-294.
- Lewis-Beck, Michael S., Richard Nadeau and Martial Foucault. 2013. "The Compleat Economic Voter: New Theory and British Evide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2): 241-261.
- Lipset, Seymour M. 1960.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Doubleday.
- Lipset, Seymour M. and Stein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In S. M. Lipset and S. Rokkan, eds. *Party*

-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1-64. New York: Free.
- Nadeau, Richard, Martial Foucault, and Michael S. Lewis-Beck. 2010. "Patrimonial Economic Voting: Legislative Elections in France." *West European Politics* 33(6): 1261-1277.
- Nieuwebeerta, Paul. 1995.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in Twenty Countries 1945-1990*. Amsterdam: Thesis Publishers.
- Persson, Mikael and Johan Martinsson. 2018. "Patrimonial Economic Voting and Asset Value-New Evidence from Taxation Register Dat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3): 825-842.
- Piketty, Thomas.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Quinlan, Stephen and Martin Okolikj. 2022. "Patrimonial Economic Voting: A Cross-National Analysis of Asset Ownership and the Vote."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32(1): 193-213.
- Shin, Jungsub. 2018. "Comprehensive Retrospective Voting in Mixed Electoral Systems: Evidence from the 2016 Korean Legislative Election."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2): 250-268.
- Stokes, Donald E. 1963. "Spatial Models of Party Compet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2): 368-377.
- Stonecash, Jeffrey M. 2000. *Class and Party in American Politics*. Boulder: Westview Press.
- Stubager, Rune, Michael S. Lewis-Beck, and Richard Nadeau. 2013. "Reaching for Profit in the Welfare State: Patrimonial Economic Voting in Denmark." *Electoral Studies* 32(3): 438-444.
- Wright, Erik Olin. 1985. *Classes* London: Verso.

인터넷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2. 08. 21)

한경집코노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12159383e> (검색일: 2022. 08. 21.)

투고일: 2022.10.11. 심사일: 2022.11.24. 게재확정일: 2022.11.24.

The Effects of Homeownership on Vote Choice in the 20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Retrospective Voting vs. Patrimonial Voting

Shin, Jungsub |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Korean voters make vote choices based on the retrospective economic voting or patrimonial economic voting in the time of housing boom. By analyzing a survey conducted three months before the 20th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is study finds that those who have not homeownership are more likely to vote for the candidate of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right party (People Power Party) than one of the government party and the left party (Minju Party). Furthermore, the pocketbook evaluation of housing price changes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vote choice. This result implies that Koreans are not retrospective voters but patrimonial voters in terms of homeownership and housing price change.

Key Words | Homeownership, Retrospective Voting, Patrimonial Voting,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유권자의 투표선택: 후보자의 도덕성 요인을 중심으로

김진주 | 명지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후보자의 도덕성 평가를 중심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후보자 요인은 다른 투표행태 요인에 비해 주목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은 중요하며, 특히 제20대 대선은 두 거대 정당 후보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후보자 요인이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선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후보자 도덕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능력과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으로 대표되는 후보자 요인은 투표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소속 정당에 대한 고려와 비교하였을 때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경우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이재명 후보의 경우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능력에 중점을 두어 투표선택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데이터에 있어서 다소 한계를 가지지만 제20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 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내었으며, 특히 많은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선택, 투표행태, 후보자 요인, 후보자 도덕성

I. 서론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근소한 0.73%p 차이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후보자 간의 득표율 격차가 가장 적었던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의 1.53%p보다 작은 수치로, 국민의힘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두 후보 간 선거경쟁이 매우 치열했음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는 몇가지의 특징적인 부분이 존재했다.

우선 주요 거대 정당의 후보 모두 여의도 경험이 전무한 법조계 출신이었다. 과거 1987년 민주적 선거가 시행된 이후 주요 대통령 후보자들은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라든가 국회의원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입법부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부와의 관계를 인지하고 더 나아가 주요 정당의 경선을 거쳐 국가 행정부의 수반직인 대통령직에 후보자로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의 윤석열 두 후보는 국회의원의 경험이 없었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고시를 치르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경기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행정적 경험을 쌓아왔고, 윤석열 후보는 약 27년간 검사로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계 인물로 정계에 입문한 지 약 8개월에 불과한 신인이었다. 이렇듯 두 후보는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법조계 인사이며, 동시에 입법부 중심의 정치적 경험은 다소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두 후보가 대한민국 주요 두 정당의 경선을 치르고 대통령 후보자가 된 데에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뒷받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의 갈등과 균열이 두드러지는 선거였다. 투표행태 연구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은 대체로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의 사회균열이론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적 배경, 캠벨 외(Campbell et al. 1980)를 중심으로 진행된 미시간학파의 연구로 정당일체감에 대해 강조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 그리고 다운스(Downs 1957)의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투표하는 정책이나 이슈로 여겨져 왔다. 이 중 정당일체감으로

대표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유권자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은 지금까지 중요한 투표행태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사회적 균열의 경우 과거 서구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국가와 교회 등 다양한 사회적인 균열이 집단의 정체성과 맞물려 유권자의 투표행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는 다소 주목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20대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젠더 갈등과 민주화 세대와 그 외 세대 간의 갈등이 선거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났다.

셋째, 그 외에도 후보자 요인이 선거과정에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앞서 살펴본 투표행태 요인들 외에도 대통령선거는 상대적으로 후보자 개인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기에 후보자에 대한 요인도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투표행태에 있어서 비교적 인물 중심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욱 주목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에서 연구되었던 후보자 요인은 대체로 현직 효과나 재출마 효과, 당적 변경, 선수 등 후보자의 정치적 상황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되어왔다(김한나·박명호·김민선 2009; 박성호·최선 2018; 박원호 2016; 이갑윤·이현우 2000 등).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두 후보자가 관련되었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도덕성까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주요 후보자들의 배우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 실시한 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모든 후보자에게 낮은 호감도를 보이면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 불리우기도 하였다(백운 2021). 이에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기존 투표행태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후보자 요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증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이념에 따르기보다 중도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슈와 정책과 같은 그 밖에 요인들에 따라 투표선택을 결정하는 무당파, 부동층이 증가하고 있어 후보자 개인에 대한 요인은 앞으로도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20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특히 후보자 요인 중에서도 도덕성과 관련하여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지속하였던 만큼 실제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있어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요인은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심리학, 그리고 합리적 투표선택 이론과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해서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는데, 초기에는 계급이나 집단 간의 갈등 등에서 기인한 사회적 균열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Lipset and Rokkan 1967)으로 주목받아왔으나, 이후 정당일체감과 같은 유권자의 사회심리학적 요인(Campbell et al. 1980), 그리고 다운스(Down 1957)의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을 두고 이념이나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태도 등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다. 정부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Fiorina 1981)와 앞으로 국가의 경제적인 전망 평가(Chappell and Keech 1985; MacKuen et al. 1992) 그리고 단기적 이슈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연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정당일체감과 회고적, 전망적 투표 그리고 이슈투표 등은 오늘날 한국 유권자에게도 중요한 투표선택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그에 반해 후보자 요인은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측정과 조작적 정의가 쉽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윤종빈 2008). 후보자 요인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특성에 따라 후보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능력과 도덕성 두 가지로 구분한다(Funk 1999; Peeters 1992; Rosenberg and Sedlak 1972; Wojciszke 1997, 2005 등). 능력과 도덕성은 인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능력은 후보자 자신에게 중요한 반면 도덕성을 그것을 인식하는 타인에게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Peeters 1983). 다시 말해 유권자들에게 있어 투표선택을 하는 데에 능력보다는 도덕성이 더욱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후보자 요인 내에서도 각각의 변인들은 상이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특히 후보자의 부패나 스캔들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왔다. 대체로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후보자들은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으며(Abramowitz 1991; Alford et al. 1994; Brown 2006; Dimock and Jacobson 1995; Peters and Welch 1980; Song 2016; Stewart 1994 등), 이는 본 선거뿐만 아니라 예비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도덕성 문제가 반드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중요하지는 않다는 주장도 존재한다(Basinger 2013; Funck and McCabe 2021; Welch and Hibbing 1997). 특히 최근 이러한 후보자의 스캔들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 살펴본 펙크와 맥케이브(Funck and McCabe 2021)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투표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정보가 많은 환경에서는 그 영향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덕성이 당파성의 영향을 받아 다소 투표선택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는 당파성의 여부를 떠나서 유권자가 도덕성에 대한 평가로 후보자를 선택하여 처벌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Funck and McCabe 2021).

후보자 요인에 있어서 능력과 도덕성 외에도 국내외 연구에서는 현직자 효과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져 왔다(Alford and Hibbing 1981; Cain et al. 1987; Cover 1977; Erikson 1972; Fenno 1978; Ferejohn 1977; Mayhew 1974 등). 하지만 이러한 현직 효과는 한국 대통령의 경우 재임과 중임이 가능하지 않기에 현직 효과가 적용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은 어떻게 여겨져 왔는가. 대통령 선거와 같은 후보자 중심의 선거에서는 이러한 투표행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과거 연고주의 투표행태가 강한 영향을 미친 1960-70년대에 주목받았다(길승흠 1993; 송병권·윤지성 2016; 윤종빈 2007). 연고주의에 기반을 두어 무소속으로 당선된 지역구 후보자들도 다수 존재했고, 실제 인물을 보고 투표했다는 유권자들이 1963년에는 66%, 1973년에는 55%에 달했다(길승흠 외 1987).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 후보자 개인의 병역사항, 재산, 세금납부, 전과 기록 등 정보공개가 시행되어 확대되면서(송병권·윤지성 2016)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졌고,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한국 유권자들에게 있어 각 정당이 주요 인물을 후보자로 내세우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인물이 중요한 투표 결정요인이었다(김성연 2017; 안종기·이내영 2018; 윤종빈 2007).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후보자 요인에 대해서는 다소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종빈(2007)은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도덕성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안종기와 이내영(2018)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친근감이, 김성연(2017)은 같은 선거에서의 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이 투표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전무하다. 추측하건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였기에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후보자 요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 투표행태 연구에 있어서 후보자 요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주요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두 후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거뒀기에 후보자 요인 중에서도 도덕성

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에 덧붙여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후보자 가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까지 포함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있어서 후보자 요인, 특히 도덕성과 관련한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요인은 크게 사회경제적 배경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의 경우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소득수준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능력의 경우 후보자가 가진 대통령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도덕성은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후보자와 연관된 가족의 도덕성까지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두 주요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모두 남성으로, 1960년대생이며, 법조계 출신이고, 학력 역시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고학력에 속한다. 또한 출신 지역도 각각 서울특별시와 경상북도 안동으로 경상북도 안동의 경우 지역주의적 성향을 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하게 표출되는 지역은 아니다. 그렇기에 이 두 후보에게 있어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후보자 요인으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동인으로 작용했음을 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후보자 요인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보다 능력과 도덕성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능력의 경우 각 후보자가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능력을 함양하고 있는지에 대해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투표선택을 함에 있어 후보자의 능력을 다른 요인에 비해 중요하게 여겼다면 행정부

에 대한 경험이 있는 후보자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에 검찰조직에 오래 근무한 윤석열 후보보다 경기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역임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덕성의 경우 제20대 대선에서 선거운동 말미까지 후보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계속 제기된 만큼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투표선택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경선 과정 제기된 대장동 개발 특혜와 그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가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그의 가족이 주가조작 등과 관련하여 구속되는 등 두 후보자 모두 본인 및 가족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는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있어 도덕성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다.

더욱이 윤석열 후보의 경우 당시 행정부 각료들에 대항하여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오면서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였고(정주신 2022), 이재명 후보는 선거과정 동안 “능력”을 주장하며 자신의 행정 능력을 내세워왔다. 그렇기에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중요한 투표선택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왔기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 투표선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앞선 후보자 요인과 관련한 변수를 주요 독립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제20대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선택에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이 클 것이다.

가설1-1. 후보자의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일수록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을 것이다.

가설1-2. 후보자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일수록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을 것이다.

가설1-3.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에서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2022년 3월 9일 선거가 끝난 익일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례 할당하였으며, 표집오차는 무작위 표집을 전제하였을 때, 신뢰수준 95% $\pm 2.8\%p$ 이다. 조사는 컴퓨터를 통한 웹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로 진행되었다.

종속변수는 제20대 대선의 투표선택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한 유권자의 약 96.4%가 거대 두 정당의 후보인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투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표선택을 더미변수화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독립변수인 후보자 요인은 능력과 출신지역,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에 대한 도덕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도덕성을 요인별로 객관적으로 평가한 변수를 활용해야 하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유권자가 여러 가지 후보선택 요인 중 후보자 도덕성과 관련한 변수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수를 보다 명확하게 비교하고자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소속 정당에 대한 고려를 기준으로 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각 변수들에 대해 얼마나 고려했는지 살펴보았다. 해당 변수의 질문을 “선생님께서 후보를 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셨습니다까? 항목별로 고려하신 정도를 0~10점 사이의 숫자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0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를, 10점은 매우 고려했다를 의미합니다.”로 소속 정당, 후보 능력, 출신 지역,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 항목이 각각 질문에 11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투표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균열, 사회심리학, 이슈투표 요인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특히 사회적 균열의 경우 과거에는 이에 대한 요인의 영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번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20대를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젠더 갈등이 표면화되어 나타났고,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지역주의적 균열이 한국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등장했기에 두 부분을 변수화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사회심리학적 요인은 한국의 경우 대통령선거가 두 거대 정당의 대표자들이 나와 선거를 하는 형태이기에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통제하였다. 정당일체감은 종속변수가 윤석열 지지 여부이기에 국민의 힘 정당일체감 여부로 더미변수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슈투표의 경우 대통령선거이기에 구정권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인 회고적 평가와 국가 경제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를 담은 전망적 평가, 국내에서 과거 대선에서 매번 주요 이슈로 등장했던 대북 안보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그리고 COVID-19가 단기적인 이슈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인 성별, 연령, 학력을 함께 통제하였다.

IV. 분석결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징을 보일지 기초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은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를 각각 선택한 유권자를 나누어 그들의 기초통계분석을 살펴본 것이다. 우선 성별, 연령, 거주지역, 이념, 지지 정당, 정당 선호도에 있어서 두 집단의 유권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윤석열 후보를, 여성이 이재명 후보를 각각 54.9%, 53.6%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연령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윤석

열 후보를, 40대, 50대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였다($p<0.01$).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투표선택의 차이가 어느 한 후보에게 현저하게 치우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볼 때, 특정 성별과 연령대의 후보자 선택이 존재하고 있었던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비율이 다소 높았고,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79.0%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고 응답하여 상당한 지지를 받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영남지역과 수도권, 호남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선택이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기존 한국 사회에 존재하던 뚜렷한 지역주의가 이번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제20대 선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민주화 이후 역대 보수 진영 대통령 당선인 중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처음으로 호남지방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두 자릿수의 지지를 받았던 당선자는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이 전북지역에서 14.13%,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전북지역에서 13.22%를 받은 게 전부였다. 그 외에 다른 보수 진영 대통령 당선자들은 이 세 지역에서 모두 한 자릿수 대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 광주광역시에서는 12.72%, 전북지역에서는 14.42%, 전남지역에서는 11.4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초로 호남지방에서 두 자릿수 대의 득표율을 받은 당선자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지역주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표 1〉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투표선택 기초통계분석(%)

	윤석열 선택	이재명 선택	n	통계량
성별				
남	54.9	45.1	543	$\chi^2=7.621$, $df=1$, $p<0.01$, N=1052
여	46.4	53.6	509	
연령대				

	윤석열 선택	이재명 선택	n	통계량
20대 이하	58.6	41.4	174	$\chi^2=78.260, df=4, p<0.01, N=1052$
30대	50.0	50.0	148	
40대	32.3	67.7	189	
50대	36.9	63.1	206	
60대 이상	66.3	33.7	335	
교육수준				
중졸 이하	53.8	46.2	26	$\chi^2=1.392, df=2, p=0.499, N=1052$
고졸	48.6	51.4	440	
대졸이상	52.2	47.8	586	
거주 지역				
수도권	47.1	52.9	529	$\chi^2=65.567, df=3, p<0.01, N=1053$
호남	21.0	79.0	105	
영남	63.9	39.1	263	
그 외 지역	61.5	38.5	156	
이념				
평균 (0=진보, 10=보수)	6.48	4.38		$t=18.400, p<0.01, N=1052$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2.8	97.2	250	$\chi^2=505.302, df=4, p<0.01, N=589$
국민의힘	97.0	3.0	302	
정의당	6.7	93.3	15	
국민의당	75.0	25.0	16	
기타	66.7	33.3	6	
정당 선호도 평균				
더불어민주당	2.12	6.38		$t=-29.326, p<0.01, N=1052$
국민의힘	6.51	2.24		$t=28.774, p<0.01, N=1052$
전체(N)	50.8(534)	49.2(518)		

한편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을 살펴볼 수 있는 이념과 지지 정당, 그리고 정당 선호도는 두 후보자 선택 집단 간의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집단의 이념적 평균은 6.48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집단의 평균은 4.38점으로 2.1점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1$). 즉, 스스로 보수적인 이념을 가졌다고 평가하는 유권자일수록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지지 정당의 경우도 명확한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7.2%는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자의 97%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한편 흥미로운 부분은 선거 직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었음에도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투표선택이 모두 윤석열 후보에게 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여론조사시기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단일화의 효과가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정도인지 후속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정당 선호도도 이념과 같이 10점 만점에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집단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집단 간의 정당 선호도의 이념 평균의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제20대 대선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남성, 20대 이하 및 60대 이상, 영남 및 그 외 지역, 보수적 이념성향,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 선호자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를 살펴보기 이전에 기존 투표행태 연구에서 주요한 선택 요인으로 여겨지는 변수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은 앞서 <표 1>에 제시하였기에, 합리적 선택에 근간을 둔 요인에 대해 종속변수와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회고적 평가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투표선택이 다른지 <표 2>에서 분석한 결과, 야당 후보자인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지지자들의 92.8%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지지자들의 경우 71.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선택 유권자들에 비해 그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었으며, 20.1%는 잘못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했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유권자들 전반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매 정권 말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집권 마지막 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5%에 달하며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집권 말 국정 지지율을 보이기에(이윤주 2022), 국정평가가 투표선택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정권 교체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구해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표 2〉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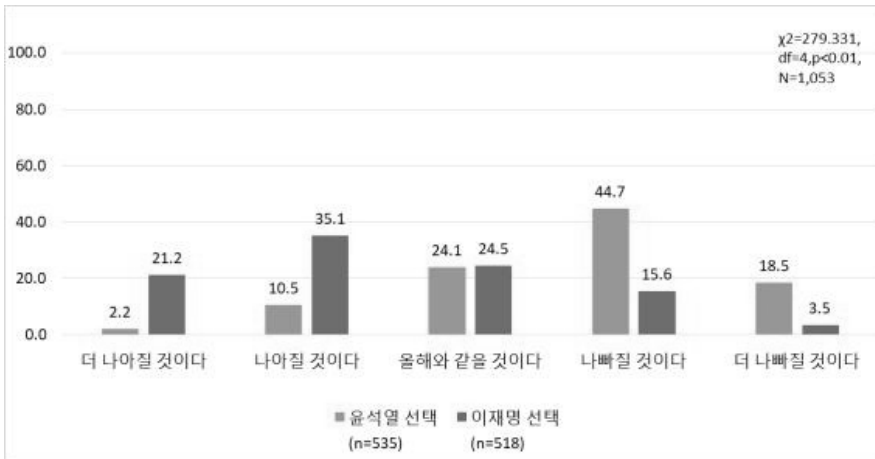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	n
윤석열 선택	64.4	28.4	5.4	1.7	517
이재명 선택	8.2	20.1	51.8	19.9	488
χ^2 검정	$\chi^2=492.748, df=3, p<0.01, N=1005$				

또 다른 합리적 선택 요인인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적 평가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63.2%가 1년 후 국가 경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부정적인 평가는 19.1%, 긍정적인 평가가 56.3%로 나타나 여당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인 만큼 앞으로의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전망적 평가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경제평가 외에도 단기적인 이슈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분단국가인 만큼 대북 안보와 관련하여 대통령선거마다 안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는 보수 진영의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그 효과가 더욱 나타나 왔으며, 보수정당에게 있어서 안보 이슈는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며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워 보수적 시각을 보여준 반면, 이재명 후보는 평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주장해왔다(BBC NEWS 코리아,

2022). 따라서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도 대북관련 이슈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20대 대선 유권자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실제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유권자들에게 북한에 위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에 달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45.2%만이 위협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자 선택 유권자들의 19.1%가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윤석열 후보자 선택 유권자들은 단 5.4%만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대북 안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 1〉 1년 후 국가 경제 상황 전망(%)



〈표 3〉 대북 안보 위협에 대한 유권자 인식(%)

	매우 위협적이지 않다	위협적이지 않다	보통이다	위협적이다	매우 위협적이다	n
윤석열 선택	1.1	4.3	21.5	48.3	24.7	518
이재명 선택	1.7	17.4	35.7	36.9	8.3	534

	매우 위협적이지 않다	위협적이지 않다	보통이다	위협적이다	매우 위협적이다	n
χ^2 검정	$\chi^2=111.702, df=4, p<0.01, N=1052$					

참고: 질문항 “선생님께서서는 현시점에서 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COVID-19는 2019년 이후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인지되어왔다. 이번 대선에서 포스트 COVID-19 시대에 앞서서 차기 정부의 방역대책 방안이 주요 관심사였던 만큼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데에 있어서 감염성 질병이 중요한 이슈로 작용했을 수 있다. 더욱이 COVID-19에 대한 대응은 각 국가의 행정부의 방역체계와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COVID-19에 대한 위협이 당시 정부에 대한 운영 평가로 이어져 여당과 야당 후보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위협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종속변수인 투표선택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표 4>에 따르면, 윤석열, 이재명 선택 유권자들 모두가 앞으로 감염성 질병 위협에 대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투표선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감염성 질병 위협에 대한 유권자 인식(%)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윤석열 선택	41.9	50.4	6.4	0.9	0.4	518
이재명 선택	41.7	51.5	6.0	0.8	0.0	534
χ^2 검정	$\chi^2=2.160, df=4, p=706, N=1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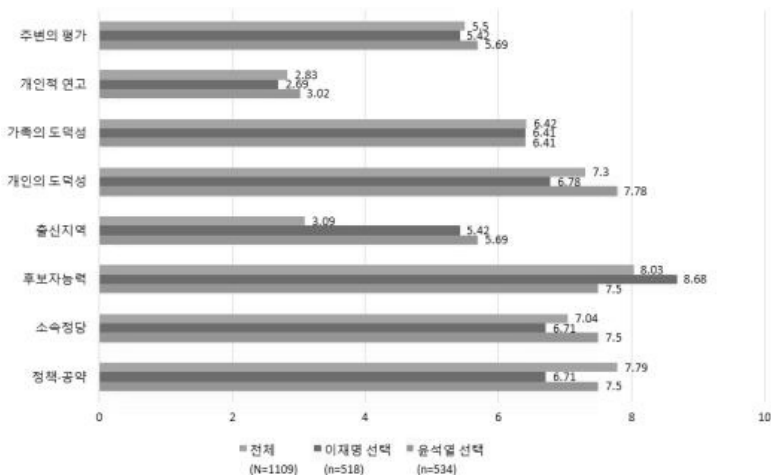
참고: 질문항 “선생님께서서는 코로나19, 메르스, SAS 등의 감염성 질병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연구들에서 검증한 주요 투표행태 요인들을 제20대 대선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회고적 평가요인과 앞으로의 국가

경제를 기대하는 전망적 요인, 그리고 대북 안보에 대한 이슈 요인이 투표선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통제된 상태에서 살펴본 결과가 아니기에 회귀분석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주요한 독립변수로 여기고 있는 후보자 요인 중 능력과 도덕성 변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에 있어 어떠한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는가. 다른 문항들과 함께 <그림 2>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제20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후보자 선택 요인은 평균 8.03점으로 후보 능력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정책·공약이 평균 7.79점, 개인의 도덕성이 평균 7.3점이었다. 하지만 선택한 후보자를 두 거대 정당 후보자로 좁힐 경우에는 후보 능력에 대한 고려가 평균 8.09점, 그리고 뒤이어 개인의 도덕성이 평균 7.28점으로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능력과 개인의 도덕성 두 가지의 후보자 요인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연구가설의 채택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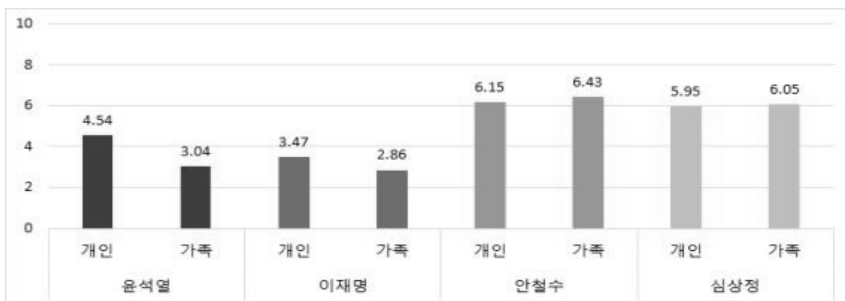
<그림 2> 제20대 대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중점 요인



또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후보자 능력(평균 8.68점), 개인의 도덕성(평균 6.78점), 정책 및 공약과 소속 정당(각각 평균 6.71점) 순서로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응답했으며,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개인의 도덕성이 평균 7.78점으로 가장 높았고, 후보 능력, 정책 및 공약, 소속 정당이 평균 7.5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이재명 후보의 행정부처 경험이 그에 대한 선택을,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대적으로 개인에 대한 논란은 적었던 도덕성 관련된 부분이 선택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덧붙여 도덕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 간의 유권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3>을 보면 제20대 대선의 주요 후보자였던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도덕성 평가가 다른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평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 평가는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3.47점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평균 2.86점에 불과했다. 이는 비록 단일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안철수 후보의 개인 평균 6.15점, 가족 평균 6.43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이재명 후보 및 가족의 도덕성 논란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으로 지속되었기에 이러한 평가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제20대 대선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한 도덕성 평가



	윤석열 선택(n=534)	이재명 선택(n=518)	통계량
윤석열	6.46	2.85	t=16.26, p<0.01
이재명	1.33	5.70	t=-30.18, p<0.01
윤석열 가족	4.30	1.79	t=16.26, p<0.01
이재명 가족	1.28	4.41	t=-22.54, p<0.01

참고: 응답 0=“매우 낮다”,..., 5=“보통”,..., 10=“매우 높다”

투표선택에 따라서도 후보자 및 가족의 도덕성 평가는 다르게 나타난다.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경우 윤석열 후보에 대한 도덕성 평가가 평균 6.46점으로 굉장히 높은 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5.13점이나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평균 5.7점을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평균 2.85점을 부여해 2.85점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투표행태를 떠나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의 도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윤석열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한 도덕성 평균이 이재명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도덕성 평균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요인과 능력 요인인 후보자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후보자의 도덕성이 영향을 미쳤을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투표선택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투표 참여에서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선거 자체가 정당을 대표한 후보자들이 출마하는 선거이기에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있어서 소속 정당의 중요성은 클 것이다. 이에 소속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선택 고려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요인의 정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후보자 요인 중에서도 어떠한 요인을 유권자들이 투표선택에 고려하였는지를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선택에 있어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친 요인은 각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었다(회귀계수 2.545, 오즈비 12.744, $p < 0.01$ / 회귀계수 3.201, 오즈비 24.562, $p < 0.01$). 이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후보자 개인이나 그 외에 다른 요인보다도 그들이 소속된 정당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후보자가 각 정당을 대표하며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들에게 있어서도 사회심리학적 요인인 정당일체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투표선택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정당일체감이 투표선택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음에도 그 외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투표선택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후보자 요인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자 선택에서 모두 소속 정당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선 윤석열 후보 선택에 경우 유권자가 투표선택에 있어서 소속 정당과 비교하여 후보자 요인에 대한 고려를 살펴본 결과, 후보자 능력에 대한 고려가 적을수록,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 더욱 고려할수록, 후보자 가족에 대한 고려가 적을수록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가족의 도덕성보다는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을, 그리고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투표선택을 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소속 정당이 그의 능력과 가족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선거 승리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반면, 후보자 도덕성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보다 투표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재명 후보 선택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 선택과 상반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소속 정당에 대한 고려에 비해 후보자 능력에 대한 고려가 클수록,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고려가 작을수록, 후보자 가족에 대한 고려가 클수록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소속 정당보다 후보자의 능력과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을 더욱 고려할수록, 후보자의 도덕성보다 소속 정당을 더욱 고려할수록 이재명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후보 선택과는

다른 결과로 윤석열 후보 선택에는 후보자의 도덕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나, 이재명 후보 선택에는 후보자의 능력과 가족의 도덕성이 중요하게 여겨진 것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한 후보자 도덕성 요인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능력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투표선택에 더욱 작용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밖에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20대 남성일수록, 호남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영남에 거주할수록,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향후 국가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할수록,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느낄수록, COVID-19와 같은 질병 위협을 느끼지 않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투표한 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호남에 거주할수록, 영남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향후 국가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을수록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제20대 대선의 투표선택에 있어서 많은 요인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제20대 대선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후보자의 도덕성 및 능력과 같은 후보자 요인을 고려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5〉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선택 요인

		윤석열 후보 선택		이재명 후보 선택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후보자 요인 ^{a)}	후보자 능력	0.432*** (0.064)b)	1.541 (0.099)	-0.523*** (0.060)	0.593 (0.036)
	후보자 출신지역	-0.021 (0.037)	0.980 (0.036)	0.025 (0.034)	1.025 (0.035)
도덕성	후보자	-0.410*** (0.072)	0.663 (0.048)	0.562*** (0.081)	1.753 (0.141)
	후보자 가족	0.175***	1.191	-0.250***	0.779

			윤석열 후보 선택		이재명 후보 선택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0.064)	(0.072)	(0.064)	(0.051)
사회 계급적 요인	경제	주관적 계층	-0.017 (0.064)	0.984 (0.063)	0.058 (0.063)	1.060 (0.067)
		젠더	20대 남성	1.183** (0.513)	3.265 (1.676)	.
	20대 여성		.	.	0.453 (0.433)	1.573 (0.682)
	지역	호남	-1.407*** (0.395)	0.245 (0.097)	0.0853** (0.357)	2.347 (0.836)
		영남	0.519** (0.255)	1.680 (0.429)	-0.705*** (0.234)	0.494 (0.115)
사회심리학적 요인	국민의힘 정당일체감		2.545*** (0.393)	12.744 (5.005)	.	.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		.	.	3.201*** (0.480)	24.562 (11.779)
보수적 이념			0.346*** (0.061)	1.414 (0.087)	-0.340*** (0.061)	0.712 (0.043)
합리적 선택 요인	회고적	문재인 정부 평가	-0.952*** (0.105)	0.386 (0.041)	0.560** (0.098)	1.751 (0.172)
	전망적	국가 경제 전망(비관)	0.790*** (0.112)	2.204 (0.247)	-0.612*** (0.102)	0.542 (0.055)
이슈 요인	대북 안보 위협		0.291** (0.129)	1.338 (0.173)	-0.380*** (0.125)	0.684 (0.085)
	COVID-19와 같은 질병 위협		-0.366** (0.161)	0.693 (0.111)	0.059 (0.160)	1.060 (0.169)
통제 변수	남성		-0.035 (0.215)	0.965 (0.207)	-0.031 (0.206)	0.969 (0.199)
	연령		0.019** (0.009)	1.020 (0.009)	-0.031 (0.008)	0.995 (0.007)
	학력 수준		0.382* (0.206)	1.465 (0.302)	-0.046 (0.190)	0.955 (0.182)
상수항			-4.978*** (0.983)	0.007 (0.007)	2.920*** (0.967)	18.543 (17.930)
Chi-square			243.16***		223.46***	

	윤석열 후보 선택		이재명 후보 선택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Log Likelihood	-301.969		-327.996	
Pseudo R ²	0.6067		0.5719	
N	1108		1108	

참고 : * p<0.1, ** p<0.05, *** p<0.01

a) 후보자 요인은 이번 선거에서 소속 정당에 중점을 두어 투표했다는 응답의 정도를 기준으로 각 후보자 요인에 중점을 두어 투표했다는 응답과의 차이를 살펴봄. 이에 해당 변수들은 “소속 정당 중점”-“각 후보자 요인”으로 변수 계산하여 코딩함.

V. 결론 및 함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이를 선출하는 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를 이룩한 뒤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해 왔고,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대통령 선출에 있어서 유권자는 더욱 다양한 요인에 주목하여 투표선택을 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헌정사상 가장 적은 득표율 차이를 기록하였고, 이에 여느 선거보다 유권자가 어떠한 요인에 기반을 두고 투표를 했는지가 현실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선거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두 후보자의 도덕성이 논란이 된 만큼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고, 본 연구는 제20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서의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20대 대선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은 중요한 유권자의 투표선택 요인이었다.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변수에 대해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유권자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에게 있어서는 후보자의 능력이 많이 고려되었으나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더욱이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서도 후보자 요인이 투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 결과에 덧붙여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성이 제20대 대선에서도 중요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제20대 대선 후보자 투표선택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주요 후보자 선택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이 다른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나타났으며, 특히 소속 정당에 대한 고려와 비교하였을 때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경우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이재명 후보의 경우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능력에 중점을 두어 투표선택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후보자 요인이 실제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이 내세운 강점이 유권자들에게도 전달되어 투표선택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0대 대선은 두 거대 정당의 후보자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마무리되었다. 여의도 경험이 전무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호감이 높지 않은 두 후보자의 경쟁은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을 누구로 선출할지 더욱 큰 고민을 하게 만든 선거이기도 하다. 선거에서 투표행태에는 여러 요인이 논의되지만,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는 대다수 유권자의 후보선택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제20대 대선의 결과는 실제적, 학술적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에 있어서 다소 한계를 가지지만 제20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 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내었으며, 특히 많은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행태 요인 중 후보자 요인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지속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길승흠. 1993.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26집 3호, 133-152.
- 길승흠, 김광웅, 안병만. 1987. 『한국선거론』. 서울: 다산출판사.
- 김성연. 2017.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정치연구』 26집 3호, 175-204.
- 김한나·박원호. 2016. “제20대 총선의 후보자 당선결정요인: 정당의 공천방식과 후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26집 2호, 51-76.
- 박명호·김민선. 2009. “후보자 요인, 현직 효과 그리고 정치적 경쟁.” 『정치정보연구』 12집 1호, 165-179.
- 박성호·최선. 2018.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요인: 재출마 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8집 1호, 87-115.
- 백운. 2021. “[여론조사] 대선후보 호감도…이재명 37.9% 윤석열 43%.” 『SBS 뉴스』 (11월 8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696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
- 송병권·윤지성. 2016. “후보자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9~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5집 3호, 85-107.
- 안종기·이내영. 2018. “투표선택에 미치는 정치후보자 이미지의 효과와 역할: 한국의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 분석.” 『한국정치연구』 27집 1호, 281-314.
- 윤종빈. 2008. “17 대 대선과 후보자 요인.” 『현대정치연구』 1집 1호, 59-83.
-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149-170.
- 이윤주. 2022. “문 대통령 마지막 국정 지지율 45%...87년 직선제 부활 후 가장 높았다.” 『한국일보』 (5월 6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_50615130005989
- 정주신.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전략과 성공요인 분석.” 『한국과 세계』 4집 3호, 55-86.

- BBC NEWS 코리아. 2022. “대선 D-40: 이재명·윤석열 대북정책 공약... '평화협력' vs 비핵화.” (1월 28일),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0137085>
- Abramowitz, Alan I. 1991. “Incumbency, Campaign Spending, and the Decline of Competition in U.S. House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53(1): 34-56.
- Alford, J. R., and Hibbing, J. R. 1981. “Increased incumbency advantage in the House.” *The Journal of Politics* 43(4): 1042-1061.
- Alford, John, Holly Teeters, Daniel S. Ward, and Rick K. Wilson. 1994. “Overdraft: The Political Cost of Congressional Malfeasance.” *Journal of Politics* 56(3): 788-801.
- Basinger, S. J. 2013. “Scandals and congressional elections in the post-Watergate er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6(2): 385-398.
- Brown, L. M. 2006. “Revisiting the character of Congress: Scandals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66-2002.” *Journal of Political Marketing* 5(1-2): 149-172.
- Cain, B., J. Ferejohn, and M. Fiorina. 1987. *The Personal Vo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Converse, P. E., Miller, W. E., and Stokes, D. E. 1980. *The American Vot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ppell, H. W., and Keech, W. R. 1985. “A New View of Political Accountability for Economic Perform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1): 10-27.
- Cover, A. 1977. “One Good Term Deserves Another: The Advantage of Incumbency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3): 523-41.
- Dimock, M. A., and Jacobson, G. C. 1995. “Checks and Choices: The House Bank Scandal's Impact on Voters in 1992.” *The Journal of Politics* 57(4): 1143-1159.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Political Action in a Democra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5(2): 135-150.

- Erikson, R. 1972. "Malapportionment, Gerrymandering, and Party Fortunes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4): 1234-45.
- Fenno, Richard F. Jr. 1978. *Home Style: House Members in Their Districts*. Boston: Little, Brown.
- Ferejohn, J. 1977. "On the Decline of Competition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1): 166-76.
-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unck, A. S., and McCabe, K. T. 2022. "Partisanship, Information, and the Conditional Effects of Scandal on Voting Decisions." *Political Behavior* 44(3): 1389-1409.
- Funk, Carolyn L. 1999, "Bringing the Candidate into Models of Candidate Evalu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61(3): 700-720.
- Lipset, S. M., and Rokkan, S. (Eds.). 1967.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Vol. 7)*. Free Press.
- MacKuen, M. B., Erikson, R. S., and Stimson, J. A. 1992. "Peasants or Bankers? The American Electorate and the US Econom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3): 597-611.
- Mahyew, D. 1974. "Congressional Elections: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Polity* 6(3): 295-317.
- Peeters, G. 1992. "Evaluative Meanings of Adjectives in Vitro and in Context: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Consequences of Positive-Negative Asymmetry and Behavioral-adaptive Concepts of Evaluations." *Psychologia Belgica* 32(2): 211-31.
- Peters, J. G., and Welch, S. 1980. "The Effects of Charges of Corruption on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3): 697-708.
- Rosenberg, S., and Sedlak, A. 1972. "Structural Representations of Implicit Personality Theory."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6), pp. 235-297.

Academic Press.

- Song, B. K. 2016. "Media Markets and Politicians Involved in Scandals." *The Social Science Journal* 53(4): 389-397.
- Stewart III, C. 1994. "Let's Go Fly a Kite: Correlates of Involvement in the House Bank Scandal."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521-535.
- Welch, S., and Hibbing, J. R. 1997. "The Effects of Charges of Corruption on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1982-1990." *The Journal of Politics* 59(1): 226-239.
- Wojciszke, B. 1997. "Parallels between Competence-versus Morality-related Traits and Individualistic versus Collectivistic Valu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3): 245-256.
- _____. 2005. "Affective Concomitants of Information on Morality and Competence." *European Psychologist* 10(1): 60-70.

투고일: 2022.10.07. 심사일: 2022.11.24. 게재확정일: 2022.11.24.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nd Voting Choice in the Korean Electorate: Focusing on the Candidate's Morality

Kim, Jinju |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voting behavior of Korean electorate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with a focus on the morality of candidates. Especially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ere was a moral controversy about the two majority party candidates and their familie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voting behavior of voters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with a focus on candidate morality, it was confirmed that candidate factors represented by ability and the morality of the candidate and the candidate's family were important factors in voting choice. Compared with the consideration of party affiliation, voters voted for Yoon Suk-yeol by the morality of the candidate and for Lee Jae-myung by their ability.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erms of data, it has the meaning of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candidate factors in the voting behavior of voters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Key Words | 20th Presidential Election, Voting Choice, Voting Behavior, Candidate Factor, Candidate's Morality

투표 참여를 통해 본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징

가상준 | 단국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정당 간 양극화 속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적 성향을 보이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정치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유권자에서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시기에서 당파적 유권자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지만 무당파 유권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정치 양극화가 불러온 반갑지 않은 결과라 하겠다. 무당파 유권자들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는 당파적 유권자와 차이가 있으며 이들의 투표 참여는 당파적 유권자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이 특정 정당에 애착감이 없다고 해서 투표 참여가 낮은 것은 아니다. 이들이 가지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애착과 혐오는 투표 참여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무당파의 영향력은 더욱 키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무당파 유권자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새롭게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당파가 어느 수준이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무당파 유권자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 무당파, 정서적 양극화, 투표 참여, 당파적 유권자

1. 서론

정당 간 선거경쟁은 당파적 지지자들의 확고한 충성심 하에 당파성이 없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선택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받아 나타나는데 무엇보다 인물 및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회고적 혹은 전망적 투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Bishin et al. 2014). 무당파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중요성이 크에도 이들의 투표참여 및 선택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당파성 지지자들에 비해 유동적 유권자와 무당파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이며, 어쩌면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설문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유권자로 구분해 낼 수 있지만 선거를 둘러싼 분위기 그리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및 평판 등에 따라 이들은 지지하는 정당을 일시적으로 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무당파를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무당파에 대한 과거 연구들은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유권자를 당파적 지지자, 편향적 무당파, 그리고 순수 무당파 혹은 무당파와 당파층으로 구분하였고 이들이 어떠한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강원택 2012; 박원호·송정민 2012; 윤종빈 외 2016; 이현출 2001; 장승진 2015; 정진민·길정아 2014; Keith et al. 1992; Lascher and Korey 2011). 그러나 모든 무당파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들을 인지적 차원에서 혹은 정당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강원택 2012; 장승진 2015; 정진민·길정아 2014; Dalton 1984). 또한, 편향적 무당파는 당파적 지지자들과도 다르지만 순수 무당파와도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장승진 2015; Keith et al. 1992; Lascher and Korey 2011).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무당파들의 정치적 특징은 당파적 유권자와 뚜렷하게 다르며, 무당파 유권자도 편향적 무당파와 순수 무당파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아직 무당파 유권자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물론 인지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지만 이들의 정치행태를 통해 이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미약한 편이다. 최근 정당 간 이념 양극화(partisan ideological polarization)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무당파가 전체 유권자 중 어느 정도이며 이들의 비율은 어느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 연구들은 전무하다. 또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치적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정당 간 양극화 심화로 유권자들은 정당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정당 간 차별적 정책과 방향에 대해 과거보다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무당파들의 투표참여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양극화 현상이 일반 유권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이견이 있다. 즉, 정당 간 양극화가 정당 간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게 만들고 있으며 당파적 유권자뿐만 아니라 무당파 유권자들도 이러한 차이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Dodson 2010; Hetherington 2008; Levendusky 2009; Smidt 2017; Wilford 2017)과 정당 간 양극화는 지지자들의 적극적 활동과 투표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초래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Fiorina et al. 2011; Rogowski 2014)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립적 주장이 무당파들에게는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무당파들의 투표참여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와 선거에 대한 외면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정당 간 양극화 속에서 당파적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는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정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무당파 유권자들과는 무관한 논의인 것인지 아니면 이들과도 관련된 것인지 파악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정당 간 양극화 속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적 성향을 보이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정치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당파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무당파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게 사실이다. 이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그리고 통시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이들은 누구이며 이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무엇인지 파악해 본다. 또한, 정당 간 양극화 속에서 이들은 정당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특히, 두 거대 정당 및 후보자(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호감도가 이들의 정치행태 구체적으로 투표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먼저 유권자 속 무당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본다. 시기별, 선거별 어느 정도 편차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본다. 두 번째로 이들이 누구인지 정치·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통해 살펴본다. 연령, 학력, 소득과 함께 이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를 비교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세 번째로 무당파의 정치적 특징을 투표 참여를 통해 알아보고 당파적 유권자들과 비교해 본다. 구체적으로 무당파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정당과 후보자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무당파에 대한 구체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무당파를 투표 참여 무당파와 투표 불참 무당파로 구분해 이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과거 무당파의 특징을 파악하는 혹은 정치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하나의 선거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김성연 2015; 윤종빈 외 2016; 이현출 2001; 장승진 2015; 정진민·길정아 2014) 투표율 감소 시기에 무당파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소순창·현근 2006; 이현출 2001). 반면 본 연구는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투표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알아보며, 하나의 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무당파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시적 접근이 필요하며 선거환경과 분위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무당파는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순수 무당파(pure independents)와 편향적 무당파(independent leaners)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측정 방식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무당파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려 한다.

무당파 특징에 대한 연구가 중요성을 띠는 것은 선거결과에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류재성 2012; 정진민·길정아 2014; Bafumi and Shapiro 2009; Girvan et al. 2010). 무당파의 투표 참여는 당파적 지지자들에 비해 낮지만 예상보다 높은 편으로 이들을 정치적 무관심 유권자로 볼 수는 없다. 무당파에 대한 연구는 정당이라는 중요 매개체가 배제된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띤다. 정당이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정당이 이념, 정책과의 연관성을 통해 유권자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Bafumi and Shapiro 2009; Bartels 2000; Luskin et al. 1989). 그러나 유권자에게서 정당이 배제되었을 때 이들의 투표 참여는 무엇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이들은 당파적 유권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띤다.

II. 무당파 관련 기존 연구

무당파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정당의 쇠퇴와도 관련이 깊다(Dennis 1988; Rosenstone and Hansen 1993; Nie et al 1993; Wattenberg 1991). 정당일체감이 약해지고 정당의 영향력이 쇠퇴함에 따라 무당파의 증가 그리고 무당파는 누구인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Keith et al. 1992). 한국 무당파에 대한 연구도 정당일체감 하락 그리고 투표율 하락과 연관 지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이현출 2001). 한국에서 무당파에 대한 연구는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당일체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무당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매우 경쟁적 선거였던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무당파에 대한 관심이 커진 편이었다. 그러나 이전 그리고 이후에 무당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는 않았다. 이는 이들을 정치적 무관심층 혹은 기권층으로 취급하면서 크게 투표

행태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무당파에 대한 연구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이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에 있다(박원호·송정민 2012; 이현출 2001). 미국과 같은 양당제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순수 무당파(pure independents)만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두 정당 외에 소정당들이 역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을 잘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무당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무당파 중에는 정당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분석을 어렵게 한다. 무당파에 대한 연구는 무당파에 대한 정의를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혹은 가까운 정당이 없는 유권자를 말한다(이현출 2001; 정진민·길정아 2014). 그러나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는 것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Miller and Wattenberg 1983). 이러한 차원에서 정치에 관심 없는 유권자가 전통적 무당파였다면 최근 무당파는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정당 및 정당체계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유권자라 말하기도 한다(정진민·길정아 2014).

한국 무당파 유권자를 구분하는데 있어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현출(2001)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한 무당파를 과거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 안정적 지지층, 준안정적 지지층, 그리고 순수 무당파층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비해 강원택(2012)은 Dalton(1984)의 인지적 동원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유권자를 인지적 동원이 된 인지적 무당파와 그렇지 못한 정치 외면층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박원호·송정민(2012)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한 응답자 중 그럼에도 약간이라도 가까운 정당이 있는지 재차 물어보았을 때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순수 무당파로 구분하였다. 정진민·길정아(2014)의 연구는 강원택(2012)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무당파를 인지적 동원이 이루어진 비당파층과 인지적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정치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반면, 윤종빈 외 2명(2016) 설문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며 또한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를 무당파로 구분하였다.

무당파를 구분하는데 있어 학자 간 차이가 발견되는 것은 다양한 설문조사 방식이 사용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당층의 정치적 행태와 연계시키며 이들을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무당파는 젊은 유권자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과 정치적 불신, 낮은 정치적 관심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류재성 2013; 박원호·송정민 2012; 윤종빈 외 2016; 이현출 2001). 이와 유사한 발견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순수 무당파는 정치 지식과 관심이 낮으며 선거참여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Keith et al. 1992; Lascher and Korey 2011). 한편, 무당파에 대한 연구들은 순수 무당파(pure independent)를 편향적 무당파(independent leaners)와는 뚜렷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편향적 무당파들의 정치행태는 당파적 유권자들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Keith et al. 1992; Lascher and Korey 2011). 그러나 장승진(2015)은 편향적 무당파들의 정치태도 및 투표선택을 보았을 때 순수 무당파뿐만 아니라 당파적 유권자들과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¹⁾ 한편, 무당파 유권자는 당파성을 지닌 유권자뿐만 아니라 편향적 무당파(independent leaners)들 과도 제도에 대한 평가, 정치 지식, 정치에 대한 관심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scher and Korey 2011). 이러한 점에서 순수 무당파만을 무당파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무당파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순수 무당파와 편향적 무당파와의 구분 외에도 이들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정치관심, 인지적 동원 등을 중심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강원택 2012; 정진민·길정아 2014).

순수 무당파 유권자를 따로 구분하더라도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물론 무당파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박원호·송정민 2012) 그럼에도 설문조사에서 무당파라고 말하는 유권자

1) 장승진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에는 없다고 말하였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 특정한 정당을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편향적 무당파(independent leaners)라는 용어보다는 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로 표현하고 있다.

의 비율은 높게 나오는 편이다. 무엇보다 조사 때마다 무당파 비율이 크게 달라지고 있어 무당파 그리고 순수 무당파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다. 미국 연구에서 순수 무당파는 약 10%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Keith et al. 1992; Lascher and Korey 2011) 이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순수 무당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유동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무당파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는 것은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정당과는 거리가 있는 무당파를 다루고 있기에 정당 간 양극화와 무당파의 투표행태는 관련성이 없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 간 양극화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정당 간 양극화가 유권자의 투표참여 및 투표율에 미치는 연구에서 보듯이 양극화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Abramowitz and Stone 2006; Béjar et al. 2018; Dodson 2010; Hetherington 2008, 2009; Moral 2017; Siaroff and Merer. 2002; Wilford 2017). 양극화로 인해 무당파들도 두 정당이 지향하는 정책 차이 및 결과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연구(Smidt 2017)는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당파 유권자들도 이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정당 간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대립은 많은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정치참여와는 거리를 두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Fiorina et al. 2011; Hibbing and Smith 2004; Rogowski 2014). 이러한 경향은 무당파 유권자들에게 더욱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반되는 두 주장을 바탕으로 무당파 유권자들은 정당 간 양극화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Ⅲ. 무당파의 사회·경제적 배경

무당파는 당파적 편견이 없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은 독립된 유권자로 정의할 수 있다(Campbell 1960; Sorauf and Beck 1988) 그러나 실제 무당파를 경험적으로 구분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파적 편견이 없는 순수한 무당파를 구분해 내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및 정당에 대한 강한 불신 풍토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표현을 꺼려하고 있으며, 당파성을 띠고 있음에도 자신을 무당파로 구분하는 유권자로 인해 무당파가 어느 정도 가늠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당파 유권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게 나오는 편이며, 무당파임에도 편향적 정치 행태를 목격할 수 있다. 당파적 유권자와 무당파를 구분하여 비율을 알아보았다. <표 1>은 제17대 대통령 선거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4번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당파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²⁾ Keith et al.(1992) 그리고 Lascher and Korey(2011)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무당파의 비율은 약 10%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무당파는 이와는 크게 차이나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네 번의 선거에서도 무당파 비율의 편차는 큰 편으로 투표율 그리고 정당 간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³⁾ 투표율이 높았던 제19대와 제20대 대통령

2) 무당파 비율은 설문문항의 차이로 인해 조금 다르게 측정되었다. 제17대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느 정당을 가장 좋아하십니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두 번 모두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를 무당파로 파악하였다. 한편, 제19대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1)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없다고 할 경우 (2)그렇더라도 다른 정당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고 결국 두 번 질문에 모두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를 무당파로 파악하였다.

3) 박원호·송정민(2012)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때 무당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유권자에게 후속 질문, 즉 약간이라도 가까운 정당이 있는 물어봐야 하며 이를 통해 조금 더 정확히 무당파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무당파를 파악했음에도 무당파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제17대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기보다 높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방식에

선거의 무당파 비율은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제17대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무당파 비율은 낮다. 정당 간 양극화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무당파 비율 상승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표 1〉 대통령선거에서 순수 무당파 비율

구분	제17대 대통령선거 (2007년)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년)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년)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년)
무당파 (%)	21.9%	19.8%	40.4%	35.9%

무당파 비율이 높은 현상이 대통령 선거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인지 알아보기 위해 국회의원선거 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3번에 걸쳐 무당파 비율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듯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과 비교해 보면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무당파 비율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비율보다 높은 편이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무당파 비율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욱 높다는 점에서 두 선거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좀 더 확고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16년과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무당파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 또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의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2004년 제17대 국회부터 국회 내 이념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에 따른 정서적 양극화도 커졌다는 점에서 무당파의 증가는 양극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표 2〉 국회의원선거에서 순수 무당파 비율⁴⁾

구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년)
무당파(%)	35.0%	46.9%	39.6%

위의 결과들은 한국 유권자 중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한국 유권자 및 선거 결과 분석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⁵⁾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대통령 선거 후 실시된 조사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표 3>은 두 유권자의 연령, 정치 효능감, 학력, 소득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네 번의 결과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두 유권자의 평균 연령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당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반면, 두 유권자 간 정치 효능감과 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파적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은

-
- 4) 세 번의 선거에서 무당파 비율은 (1)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없다고 할 경우 (2)그렇더라도 다른 정당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라는 (1)과 (2) 질문에 모두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차이점은 제19대의 경우 첫 번째 질문에 없다 혹은 모르겠다고 대답한 유권자에게 그림에도 가까운 정당이 있는지 물어본 반면,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각각 가깝게 그리고 친밀하게 느끼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유권자에게만 그렇더라도 조금 더 각각 가까운 그리고 친근한 정당이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당파 비율이 다른 선거보다 낮은 편이다.
- 5) 무당파 비율은 조사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조심성을 띠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한 자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한 외부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된 대면조사를 통해 작성된 자료들이다. 그러나 다른 조사들을 보면 무당파의 비율이 낮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SDC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무당파 비율은 각각 18.6%와 25.0%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마다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무당파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하고 있는 편이다.

무당파 유권자보다 높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는 이들을 구분하는데 있어 정치 효능감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무당파 유권자의 학력은 당파적 유권자보다 높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무당파 유권자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으로 연령은 낮지만 학력은 높은 그러나 당파적 유권자와 비교해 소득과 정치 효능감은 차이가 없는 유권자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무당파 유권자는 고학력의 젊은 유권자라 할 수 있다.

〈표 3〉 무당파/당파적 유권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치효능감 비교⁶⁾

구분		제17대 대통령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연령	무당파 유권자	36.49	37.39	44.49	43.66
	당파적 유권자	43.93	45.17	49.99	51.24
	t값	7.044 (p<0.001)	7.189 (p<0.001)	4.292 (p<0.001)	8.588 (p<0.001)
효 능 감 ⁷⁾	무당파 유권자	2.66	2.61	2.39	2.28
	당파적 유권자	2.59	2.53	2.41	2.25
	t값	1.458 (p=0.145)	2.000 (p=0.046)	0.655 (p=0.512)	1.31 (p=0.259)

6) 각 대통령 선거별 조사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어 네 번의 선거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17대와 제18대의 경우 학력을 3범주로 구분하였지만 제19대와 제20대에서는 각각 6범주, 7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가구소득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유로 각 선거별 무당파 유권자와 당파적 유권자 간 비교는 가능하지만 선거 간 비교는 불가능하다.

제19대와 제20대 대통령 선거 학력과 소득의 분석은 카이제곱과 함께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7) 정치효능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나 같은 사람에게는 투표만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구분		제17대 대통령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학 력	χ^2 값	27.355 (p<0.001)	28.783 (p<0.001)	5.416 (p=0.367)	13.196 (p=0.040)
소 득	χ^2 값	7.562 (p=0.579)	7.551 (p=0.753)	11.225 (p=0.340)	17.794 (p=0.086)

IV.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참여

기존 연구들은 무당파 유권자들은 정치적 행태에 있어 당파적 유권자와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의 정치 참여에 있어 당파적 유권자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또한, 무당파라 할지라도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있는가 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무당파가 있는데 이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다. 한편, 앞서 논의하였듯이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들의 투표참여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여 이들의 정치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투표 참여에 있어 무당파 유권자는 당파적 유권자와 차이가 있는지 4번의 선거를 통해 알아보면 <표 4>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투표 참여에 있어 두 유권자의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무당파임에도 이들의 투표 참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 선거가 지니는 중요성 때문에 이들의 관심 또한 높기 때문이라 하겠다.⁸⁾ 정당 간 이념 양극화가 무당파 유권자의 정치 및 정당 신뢰에 어

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8) 두 유권자 간 정치 관심 및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라 하겠다.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투표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투표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유권자 중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의 참여도 늘어나면서 투표율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두 유권자의 투표 참여 비교

	제17대 대통령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무당파 투표율	63.3%	78.0%	64.1%	81.6%
비무당파 투표율	83.0%	92.7%	90.9%	98.1%
카이제곱 값	46.612 ($p<0.001$)	44.767 ($p<0.001$)	129.988 ($p<0.001$)	90.238 ($p<0.001$)

무당파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특히, 정서적 양극화와 연관 지어 무당파 유권자도 당파적 유권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며 이외에도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정서적 양극화의 영향력이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들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모델을 구축해 보았다. 먼저 국회 내 의원들의 정치 양극화 그리고 당파적 유권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양극화는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가상준 2020). 정치 양극화의 영향력은 무당파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Smidt 2017).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차이, 두 정당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차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호감도 차이가 클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⁹⁾ 무당파라 할지라도 정책에 대한

9) 정당 간 호감도 차이 그리고 후보자 간 후보자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유권자의 두 정당

관심 그리고 선거에 대한 관심은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하였을 것이며, 후보자 간 정책 차이를 인지할수록 투표에 참여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정치 효능감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러한 점은 무당파 유권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정치 효능감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투표 참여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정치 요인 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은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이다. 투표 참여에 있어 연령은 중요한 요인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 참여 가능성은 큰 편이다. 이러한 점은 소득과 학력에서도 알 수 있다. 투표 참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비용은 학력과 소득이 높아지면서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득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투표 참여는 높아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독립변수를 바탕으로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다. 종속변수는 투표 참여 여부로 참여하였으며 1, 기권하였으며 0으로 하였다. <표 5>는 2017년과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통계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은 투표 참여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당파 유권자라 할지라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은 이들의 투표 참여 차이를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두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투표 참여에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차이도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두 후보자 간 호감도 차이 변수와 같이 포함되어 있을 때 통계적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두 번의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연령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당파 유권자 중에서도 연령이 높아지면 투표 참여 가능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후보자 간 정책 차이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번의 선거에서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간 정책 차이는 무당파

과 두 후보자에 대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의 정도”를 파악하여 차이의 절댓값을 계산하였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였지만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영향력을 찾을 수 없다. 이는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특징을 반영한 결과라도 할 수 있다. 즉,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후보자의 정책은 부각되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혐오와 애착만이 투표 참여 및 선택이 이루어진 선거였기 때문에 정책 선거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표 5〉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 참여 분석

변수	2017년 대선			2022년 대선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성별	.114 (.260)	.179 (.256)	.119 (.260)	.002 (.330)	.025 (.328)	.011 (.339)
연령	.025* (.011)	.020+ (.011)	.026* (.011)	.032* (.014)	.039** (.014)	.040** (.014)
학력	.085 (.154)	.085 (.151)	.092 (.155)	.257 (.204)	.272 (.203)	.334 (.209)
소득	.205* (.083)	.203* (.081)	.204* (.083)	.092 (.091)	.053 (.089)	.073 (.093)
효능감	-.111 (.211)	-.140 (.205)	-.107 (.211)	-.184 (.316)	-.061 (.315)	-.196 (.328)
선거 관심	1.719*** (.199)	1.773*** (.198)	1.718*** (.198)	1.958*** (.319)	1.939*** (.328)	1.934*** (.335)
정책 차이	.526** (.188)	.503** (.184)	.521** (.188)	-.115 (.270)	-.217 (.269)	-.142 (.276)
후보자 호감도 차이	.330*** (.057)		.371*** (.100)	.263** (.080)		.242* (.116)
정당 호감도 차이		.274*** (.059)	-.053 (.107)		.199* (.079)	.013 (.119)
상수	-8.364 (1.355)	-7.962 (1.338)	-8.409 (1.357)	-5.701 (1.880)	-5.623 (1.903)	-6.019 (1.951)
N	485	485	485	375	375	375
적중률	82.7%	80.8%	82.7%	84.0%	83.7%	84.0%
Nagelkerke R ²	0.497	0.468	0.498	0.329	0.301	0.320

+p<0.1, *p<0.05, **p<0.01, ***p<0.001

무당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비교적 차원에서 알아보기 위해 당파적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유권자 간 투표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앞선 모델에 강한 정당일체감 유권자를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와 구별하기 위해 정당일체감 변수를 포함시켰다. <표 6>은 당파적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미친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과 2022년 결과를 비교해 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무당파 유권자들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2017년 당파적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령,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 두 후보자 정책 차이, (강한) 정당일체감, 그리고 정당 및 후보자 호감도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2022년 당파적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미친 요인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후보자 호감도 차이임을 알 수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두 후보자 간 정책차이는 당파적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당 호감도 차이의 영향력도 발견할 수 없다. 이는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정책과 정당보다는 후보자에 의해 영향을 받은 선거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⁰⁾ 종합적으로 당파적 유권자이지만 두 선거에서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차이가 있지만 선거에 대한 관심과 두 후보자 호감도 차이는 항상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6> 당파적 유권자의 투표 참여 분석

변수	2017년 대선			2022년 대선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성별	.277 (.280)	.287 (.279)	.256 (.281)	-.304 (.695)	-.220 (.686)	-.360 (.697)

10) 2022년 대통령 선거 분석에서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종속변수의 문제점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즉, 분석 대상 671명 중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는 13명(1.9%)로 이럴 경우 분석 모델에 포함할 수 있는 독립변수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이 변수의 통계 유의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변수	2017년 대선			2022년 대선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연령	.027+ (.012)	.023+ (.012)	.027* (.012)	.017 (.030)	.017 (.030)	.020 (.031)
학력	.242 (.174)	.217 (.173)	.221 (.174)	.137 (.418)	.153 (.413)	.137 (.422)
소득	.072 (.099)	.076 (.098)	.082 (.099)	-.058 (.186)	-.064 (.178)	-.051 (.186)
효능감	.023 (.134)	.048 (.134)	.060 (.136)	-.026 (.695)	.057 (.679)	.020 (.691)
선거 관심	.463* (.202)	.504* (.202)	.472* (.202)	1.521*** (.469)	1.569*** (.470)	1.535*** (.469)
정책 차이	.623** (.230)	.630** (.228)	.618** (.229)	.615 (.532)	.598 (.541)	.703 (.543)
후보자 호감도 차이	.124* (.057)		.266** (.099)	.252+ (.144)		.361+ (.195)
정당 호감도 차이		.044 (.057)	-.177+ (.100)		.109 (.140)	-.163 (.201)
강한 정당일체감	.491+ (.287)	.540+ (.288)	.530+ (.289)	.737 (.638)	.833 (.639)	.822 (.649)
상수	-4.830 (1.486)	-4.531 (1.469)	-4.828 (1.482)	-3.740 (3.868)	-3.711 (3.809)	-4.024 (3.950)
N	715	715	715	665	671	665
적중률	90.9%	90.9%	90.8%	97.7%	97.6%	97.7%
Nagelkerke R ²	0.110	0.098	0.120	0.256	0.232	0.261

+p<0.1, *p<0.05, **p<0.01, ***p<0.001

<표 5>와 <표 6>의 결과는 무당파 유권자와 당파적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있어 차이점이 없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무당파 유권자에게도 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혐오와 애착이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당파적 유권자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양극화가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정당보다

는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투표 참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무당파 유권자의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당파적 유권자에 비해 소극적이지만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무당파 유권자라 할지라도 투표 참여 무당파와 투표 불참 무당파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V. 비교차원에서 본 무당파 유권자의 특징

1.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순수 무당파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 편향적 무당파와는 다르다. 특히, 편향적 무당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두 정당에 대한 호감에 있어 차이가 크지 않거나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Greene 2002; 장승진 2015).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무당파를 순수 무당파와 편향적 무당파로 구분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무당파를 투표 참여 무당파와 투표 불참 무당파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무당파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 위해 무당파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차이 편차(분산)가 당파적 유권자와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먼저 무당파 유권자와 당파적 유권자의 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차이에 대해 분산비교를 시도해 보았다.¹¹⁾ 일반적으로 무당파 유권자의 분산과 당파적 유권자의 분산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무당파 유권자는 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호감도 분산이 상대적으로 당파적 유권자의 분산보다 작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11) 분산비교는 두 분산은 같다($H_0: \sigma^2_{\text{무당파 유권자}} = \sigma^2_{\text{당파적 유권자}}$)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지 기각되지 않는지를 F 검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한다.

<표 7>은 2017년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2년의 경우 예상과 다르지 않지만 2017년은 예상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17년 조사에서 무당파 유권자의 두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호감도 분산은 당파적 유권자의 호감도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의 선거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파적 유권자들은 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구분되는 호감도 차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불만족감이 있었겠지만 상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커다란 반감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반면, 2017년 무당파 유권자들의 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는 정당일체감 유권자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당파 유권자들의 높은 비율과 관련이 있다. 즉,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당파 비율은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 높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지지하는 정당을 의도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표출하기 꺼려하는 유권자,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이 무당파로 포함되면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는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7〉 두 정당 및 후보자 호감도 차이 분산 비교

구분	2017년 대통령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호감도 차이(분산)	정당 호감도 차이(분산)	후보자 호감도 차이(분산)	정당 호감도 차이(분산)
무당파 유권자	7.072	5.687	4.845	4.380
당파적 유권자	6.877	6.399	6.929	6.077
F통계값	1.028	1.125	1.430***	1.387***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와 <표 7>의 결과를 종합해 분석해 보면 2017년 무당파 유권자들과 2022년 무당파 유권자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2017년 무당파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7년 무당파 유권자들의 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분포는 당파적 유권자와 다르지 않은데 비해 2022년 무당파 유권자는 그렇지 않았다. 한편,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당파 유권자는 두 후보에 대한 정책적 차이보다는 호감도에 따른 투표 참여 결정을 내린데 비해 2017년 무당파 유권자들은 두 후보자 간 분명하게 보이는 정책적 차이에 영향 받아 투표 참여를 결정하였다. 즉, 2017년 무당파의 투표 참여는 정당, 후보자, 후보자 간 정책차이에 영향을 받았지만 2022년 무당파는 정당과 후보자에 영향을 받아 투표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징은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 보아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으로 무당파 연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투표 참여 무당파의 특징

앞서 무당파 유권자의 정치적 특징을 투표 참여를 통해 살펴보았다. 무당파의 투표 참여에 미친 중요한 요인은 선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무당파의 정치적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먼저 투표 참여 무당파는 투표 불참 무당파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으며, 투표 참여 무당파와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무당파 유권자를 동일하게 보는 것보다는 투표 참여 무당파와 투표 불참 무당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먼저 두 무당파의 정치적 특징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8>에서 보듯이 두 유권자는 정당 및 후보자 감정적 태도에 대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선거에 대한 관심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무당파이지만 두 무당파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8〉 두 무당파 정치적 특징 비교

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정당 호감도	후보자 호감도	정치 관심	선거 관심	정당 호감도	후보자 호감도	정치 관심	선거 관심
투표불참 무당파	1.741	2.023	1.93	2.09	1.785	1.716	1.87	1.94
투표참여 무당파	3.196	3.977	2.61	2.99	2.517	2.821	2.39	2.63
평균 비교	6.732 (p<0.001)	8.288 (p<0.001)	9.856 (p<0.001)	14.077 (p<0.001)	2.577 (p=0.01)	3.783 (p<0.001)	6.010 (p<0.001)	8.075 (p<0.001)

다음으로 투표 참여 무당파는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와 정치적 특징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무당파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투표 참여 무당파와 약한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유권자 간 정치적 특징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표 9>에서 보듯이 투표 참여 무당파와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의 정치 관심 그리고 선거 관심은 투표 참여 무당파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들의 정당 및 후보자 호감도 차이(절댓값)은 투표 참여 무당파보다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투표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무당파일지라도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와는 정치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9〉 투표참여 무당파와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 정치적 특징 비교

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정당 호감도	후보자 호감도	정치 관심	선거 관심	정당 호감도	후보자 호감도	정치 관심	선거 관심
투표참여 무당파	3.196	3.977	2.61	2.99	2.517	2.821	2.39	2.63
약한 PID	4.011	4.343	2.77	3.15	3.351	3.649	2.53	2.84

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정당 호감도	후보자 호감도	정치 관심	선거 관심	정당 호감도	후보자 호감도	정치 관심	선거 관심
평균 비교	3.557 (p<0.001)	1.498 (p=0.135)	2.236 (p=0.026)	2.635 (p=0.009)	3.655 (p<0.001)	3.488 (p=0.001)	1.867 (p=0.063)	3.026 (p=0.003)

투표불참 무당파와 투표참여 무당파 유권자 간에는 뚜렷한 정치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투표참여 무당파와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 간에도 유의미한 정치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정치적 특징 차원에서 보았을 때 유권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무당파 유권자를 동일하게 보는 것보다는 투표 참여 무당파와 투표 불참 무당파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간 사회·경제적 특징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1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연령과 소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표 불참 무당파 유권자의 연령은 투표 참여 무당파에 비해 젊다. 두 유권자의 소득은 차이가 있지만 조사 시기마다 소득이 높은 유권자는 차이가 있다. 반면, 두 유권자의 성별과 학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무당파 유권자라 할지라도 연령은 두 유권자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요인이며 성별과 학력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무당파의 특징은 당파적 유권자에 비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무당파는 높은 학력 그러나 더욱 낮은 연령이라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표 10〉 두 무당파 사회·경제적 배경 비교¹²⁾

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연령	성별	학력	소득	연령	성별	학력	소득
통계값	2.044 (p=0.043)	0.059 (p=0.809)	6.663 (p=0.245)	26.927 (p=0.001)	2.810 (p=0.005)	0.952 (p=0.329)	6.263 (p=0.258)	16.912 (p=0.052)

무당파가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들의 참여와 선택이 선거 결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무당파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정당 그리고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무당파는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정치에 냉소적이기에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이들이 투표 참여 행태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투표 참여가 어떠한지 이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전 국회의원선거 참여를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표 11>은 무당파의 이전 대통령 선거 참여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무당파의 이전 대통령 선거 참여는 투표 불참 무당파보다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투표 불참 무당파의 이전 선거 투표 참여가 예상보다 높다는 점을 통해 이들이 항상 불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찾을 수 있다.

〈표 11〉 이전 대통령 선거 참여 여부

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무당파들의 2012년 대통령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무당파들의 2017년 대통령선거			
	참여	불참	투표권 없음	모름	참여	불참	투표권 없음	모름
투표불참 무당파	84 48.3%	<u>64</u> 36.8%	14 8.0%	12 6.9%	39 56.5	<u>25</u> 36.2%	2 2.9%	3 4.3%

12) 연령은 t통계값, 성별은 카이제곱 통계값, 학력과 소득은 Fisher 정확한 검정 통계값이다. 참고로 2017년 투표불참 무당파와 투표참여 무당파의 평균 연령은 42.76세 45.45세이며 2022년의 경우 39.36세, 44.64세이다.

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무당파들의 2012년 대통령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무당파들의 2017년 대통령선거			
	참여	불참	투표권 없음	모름	참여	불참	투표권 없음	모름
투표참여 무당파	238 76.5%	48 15.4%	9 2.9%	16 5.1%	263 85.9%	27 8.8%	5 1.6%	11 3.6%
χ^2 값	42.270(p<0.001)				37.124(p<0.001)			

무당파 유권자들의 국회의원선거 참여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통령 선거 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국회의원선거 참여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으로 <표 12>에서 보듯이 무당파의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는 낮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투표 불참 무당파의 국회의원선거 불참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항상 불참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율이 더 높았던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무당파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2016년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점은 투표 불참 무당파 그리고 투표 참여 무당파 모두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표 12> 이전 국회의원선거 참여 여부

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무당파들의 2016년 국회의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무당파들의 2020년 국회의원선거			
	참여	불참	투표권 없음	모름	참여	불참	투표권 없음	모름
투표불참 무당파	51 29.3%	109 62.6%	2 1.1%	12 6.9%	31 44.9%	33 47.8%	2 2.9%	3 4.3%
투표참여 무당파	211 67.8%	84 27.0%	1 0.3%	15 4.8%	225 73.5%	64 20.9%	4 1.3%	13 4.2%
χ^2 값	68.371(p<0.001)				23.403(p<0.001)			

최근 한국정치의 특징은 무당파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인 투표율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 참여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 또한 무당파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무당파 유권자 중 지속적으로 투표에 불참하는 무당파 유권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선택은 투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같이 두 후보자 간 투표 차이가 크지 않은 선거에서 무당파 유권자들의 선택은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한국 선거결과를 결정짓는 유권자들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VI.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정치는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유권자 간 정서적 양극화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극한 갈등과 대립 속 혐오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당파의 증가를 목도할 수 있다. 무당파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무당파 유권자를 정확히 구분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점도 있겠지만 지지하는 정당을 표출하지 않으려는 유권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당파적 유권자들에게 초점 맞추어져 있는 연구들이 정당과 선거 연구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크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무당파 유권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엇보다 한국 유권자에서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측정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시기에서 당파적 유권자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지만 무당파 유권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정치 양극화가 불러온 반감지 않은 결과라 하겠다. 무당파 유권자들은 연령은 낮지만 학력은 높은 유권자라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과거 연구와 동일한 결과라 하겠다(류재성 2013; 박원호·송정민 2012; 윤종빈 외 2명 2016; 이현출 2001).

무당파 유권자들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는 당파적 유권자와 차이가 있으며 이들의 투표 참여는 당파적 유권자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이 특정 정당에 애착감이 없다고 해서 투표 참여가 낮은 것은 아니다. 앞선 결과에서 보았듯이 무당파 유권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는 예상보다 높은 편이며 이들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은 당파적 유권자와 비교해 다르지 않다. 이들이 가지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애착과 혐오는 투표 참여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무당파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서적 양극화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당파를 투표 참여 무당파와 투표 불참 무당파로 구분해 살펴보면 정치 및 선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투표 참여 무당파와 약한 정당일체감 유권자 사이에도 발견되고 있다. 투표 불참 무당파는 투표 참여 무당파에 비해 연령은 낮지만 학력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무당파라 할 지라도 특히 투표 불참 무당파들도 지속적으로 투표에 불참하는 유권자는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속 혐오와 대립정치에 대해 거리감을 보이는 무당파 유권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요 선거에서 투표율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양극화는 당파적 유권자의 투표 참여 상승뿐만 아니라 무당파의 투표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치 양극화가 정치와 정당에 대한 불신을 높여 투표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보다는 두 정당에 대한 이념적, 정책적 차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투표 참여를 증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무당파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무당파의 투표 참여와 결정이 무엇보다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무당파를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본 연구는 무당파

유권자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새롭게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당파가 어느 수준이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무당파 유권자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20. “정당 간 양극화가 투표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가?” 『한국정당학회보』 19권2호, 101-129.
- 강원택. 2012. “정파적 지지와 인지적 동원.”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분석』 서울: 나남출판사.
- 김성연. 2015. “한국 무당파의 이념, 정책 선호, 그리고 정치적 태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9권 3호, 149-172.
- 김형준. 2008. “한국 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이와 원인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18권 1호, 93-122.
- 박원호·송정민. 2012. “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한국의 무당파층과 국회의원 총선거.” 『한국정치연구』 21권 2호, 115-143.
- 류재성. 2012. “중도 및 무당파 유권자 특성: 무태도(non-attitudes)인가 부정적 태도 (negativity)인가? 『대한정치학회보』 20권 1호, 101-127.
- 소순창·현근. 2006. “한국 선거에서 나타난 무당파층과 정당정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권 2호, 47-75.
- 윤종빈·김진주·정희옥. 2016. “한국 무당파의 특성과 투표행태 분석: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7권 1호, 83-109
- 이현출. 2001. “무당파층의 투표행태: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권 4호, 137-160.
- 장승진. 2015.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 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 의 특성과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4권 2호, 25-52.
- 정진민·길정아. 2014.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성과 행태: 인지적 동 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0권 3호, 135-195.
- Abramowitz, I. Alan and Walter J. Stone 2006. “The Bush Effect: Polarization, Turnout, and Activism in 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6(2): 141-154.

- Bafumi, Joseph and Robert Y. Shapiro. 2009. "A New Partisan Voter." *Journal of Politics* 71(1): 1-24.
- Bartels, Larry. M. 2000. "Partisanship and Voting Behavior, 1952-1996."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1): 35-50.
- Béjar, Sergio, Juan A. Moraes, and Santiago López-Cariboni. 2018. "Elite polarization and voting turnout in Latin America, 1993-2010."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30(1): 1-21.
- Bishin, Benjamin G., Daniel Stevens, and Christian Wilson. 2005. "Truth or Consequences?: Character and Swing Voters in the 2000 Election." *Public Integrity* 7(2): 129-146.
- Dalton, Russell J. 1984. "Cognitive Mobilization and Partisan Dealignmen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Journal of Politics* 46(1): 264-284.
- Dodson, Kyle. 2010. "The Return of the American Voter? Party Polarization and Voting Behavior, 1988 to 2004." *Sociological Perspectives* 53(3): 443-449.
- Fiorina, Morris P., Samuel J. Abrams, and Jeremy C. Pope. 2011.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 3rd ed. New York: Pearson-Longman.
- Girvan, Erik J., Jason Weaver, and Mark Snyder. 2010. "Elevating Norm Over Substance: Self-Monitoring as a Predictor of Decision Criteria and Decision Time among Independent Voters." *Analysi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10(1): 321-336.
- Hetherington, J. Marc. 2008. "Turned Off or Turned On? How Polarization Affects Political Engagement." ed. Pietro S. Nivola and David W. Brady. In *Red and Blue Nation? Consequences and Correction of America's Polarized Politic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Hibbing, John R. and James T. Smith. 2004. "Is It the Middle That is Frustrated? Americans' Ideological Positions and Governmental Trust." *American Politics Research* 32(6): 652-678.
- Keith, Bruce E., David B. Magleby, Candice J. Nelson, Elizabeth Orr, Mark C.

- Westlye, and Raymond E. Wolfinger. 1992. *The Myth of the Independent Voter*. Berkele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scher, Edward L. and Jon L. Korey. 2011. "The Myth of the Independent Voter, California Style." *California Journal of Politics and Policy* 3(1): 1-19.
- Levendusky, Matthew. 2009. *The Partisan Sort: How Liberals Became Democrats and Conservatives Became Republica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uskin, Robert C., John P. McIver, and Edward G. Carmines. 1989. "Issues and the Transmission of Partisanship."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2): 440-458.
- Moral, Mert. 2017. "The Bipolar Voter: On the effects of Actual and Perceived Party Polarization on Voter Turnout in European Multiparty Democracies." *Political Behavior* 39: 935-965.
- Nie, Norman H. Sidney Verba, and John R. Petrocik. 1993. "The Decline of Partisanship." In *Classics in Voting Behavior*. ed. Richard G. Niemi and Herbert F. Weisberg.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Rogowski, Jon C. 2013. "Electoral Choice, Ideological Conflic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2): 479-494.
- Rosenstone, Steven J. and John M. Hansen.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 Sartori, Giovanni. 1976. *Parties and Party Syst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aroff, Alan and John W. A. Merer. 2002. "Parliamentary Election Turnout in Europe since 1990." *Political Studies* 50(5): 916-927,
- Smidt, Corwin D. 2017. "Polarization and the Decline of the American Floating Vote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1(2): 365-381.
- Sorauf, Frank Joseph and Paul Allen Beck. 1988. *Party Politics in America*.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mpany
- Wattenberg, Martin P. 1991. *The Decline of American Political Parties, 1952-198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Wilford, M. Allen. 2017. "Polarization, Number of Parties, and Voter Turnout: Explaining Turnout in 26 OECD Countries." *Social Science Quarterly* 98-5: 1391-1405.

투고일: 2022.10.15.	심사일: 2022.11.22.	게재확정일: 2022.11.23.
------------------	------------------	--------------------

Characteristics of Korean Independent Voters

Ka, Sangjoon |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voters who show politically independent tendencies amid partisan polarization.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independent voters is very high. It is noteworthy that the influence of partisan voters is growing in the ideological polarization period, but the fact that independent voters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is an unwelcome result of political polarization. Independent voters have a different preference for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than partisan voters, and their voting participation is lower than that of partisan voters. However, their lack of attachment to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does not mean that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 is low. It was found that their attachment and hatred to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a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 This study can be found to contribute in that it newly raised the need for research on independent voters and identified the level of independent vot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It is hoped that research on independent voters will continue sufficiently in the future, and various and in-depth analyzes of them will be made.

Key Words | Independent Voters, Affective Polarization, Voting Participation, Partisan Voters

한국의 여론과 정책 연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광은 | 연세대학교

| 국문요약 |

정책 결정이 다수 대중의 여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작동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을 차지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탐색적 연구는 한국의 여론과 정책 사이의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여론-정책 연계에 관한 실증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정부가 수행한 여론조사를 기초로 여론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치성과 반응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사례 가운데 대략 3분의 2에서 여론과 정책 사이의 일정한 조응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은 정부 구분, 여론 지지율, 그리고 이슈 주목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책 분야별로 살펴볼 때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중의 선호가 정책 결과에 상당히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잠정적 발견은 교차타당도의 검증이나 그 메커니즘의 규명뿐만 아니라 정책 대표성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이상에 관한 충분한 논의 또한 요청한다.

주제어 | 여론-정책 연계, 정치적 대표, 정책 대표성, 정책 일치성, 정책 반응성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5946). 본 논문의 미진한 부분을 적절히 지적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해준 익명의 세 심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I. 서론

한국의 정부 정책은 여론의 흐름과 얼마나 일치하며, 또한 여론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 온갖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는 정작 그렇게 파악된 여론이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다만,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정부 정책이 시민의 바람을 좀 더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범적 인식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론과 정책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는 사실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에서 정책 대표성(policy representation)을 논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널리 알려진 민주주의 이론가 중 한 명인 달(Robert A. Dahl)은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은 정치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는 시민의 선호에 정부가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Dahl 1971, 1). 정치적 대표에 관한 논의에서 역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학자 중 한 명인 핏킨(Hanna Fenichel Pitkin)도 “대의제는 대중의 이해 관계를 살펴야 하고 여론에 반응해야만 한다”라고 언급했다(Pitkin 1967, 224). 미국 정치학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인 키(V. O. Key)는 “대중의 견해가 정책 수립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관한 모든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Key 1961, 7). 이러한 견해는 이른바 ‘여론-정책 연계(opinion-policy link)’ 연구를 이끌어온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여론과 정책 사이의 관계 문제를 일치성(congruence)과 반응성(responsiveness)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치성은 기본적으로 다수 여론과 정책 결과가 표면적으로 일치할 때 성립하는 것이고, 반응성은 표면적 일치성과는 무관하게 여론과 정책 사이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함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치성과 반응성의 고찰은 여론-정책 연계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정부가 수행한 여론조사를 기초로 이에 일대일

로 대응하는 정책 결과를 추적하여 그 상응 정도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가 여론-정책 연계에 관한 실증연구를 한국에서도 한걸음 진척시키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정부 주도의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표본인 여론-정책 연계 항목이 169건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양적 분석은 일반적 결론의 도출보다는 잠정적 발견을 위한 하나의 탐색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론과 정책 사이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흐름을 살펴본 다음 정책 대표성 논의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반응성과 일치성 개념을 정의한다. 이어서 여론-정책 연계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를 개괄하고, 한국에서의 관련 연구 현황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한국의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의 수준을 전체는 물론 정부 구분, 정책 분야, 여론 지지율, 이슈 주목도 등의 측면에서 양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발견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1. 여론-정책 연계 연구의 흐름

여론과 정책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중위 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를 정식화한 다운스(Downs 1957)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리의 핵심은 대중의 선택을 희망하는 합리적 정치인은 자신의 견해를 중위 투표자의 입장과 일치시키려는 동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유권자가 정치인의 정책 입장과 판단을 평가하여 투표로 보상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기에 가능하다. 이항 대표성(dyadic representation) 연구(Miller and Stokes 1963),¹⁾ 개별적 여론-정책 연계 연구(Monroe 1979; 1998; Page and Shapiro 1983),²⁾ 일반적 여론-정책 연계 연구(Brooks and Manza 2007; Erikson et al. 1993; Erikson et al. 2002a; 2002b; Soroka and Wlezien 2010; Stimson et al. 1995)의 상당수가 이러한 연구 흐름에 해당한다.³⁾ 이들 대부분의 양적 연구는 대체로 정책이 여론에 호응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이 여론과 정책 사이를 매개하거나 이들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론과 정책 또는 그 관계를 측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 따라서 여론이 정책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 세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그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에 관해서도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개별 정책 이슈 영역에서 여론과 정책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도 상당수 존재한다(Burstein 1998; Fording 1997). 여론과 정책의 밀접한 연계를 보여주는 이러한 연구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자체의 급격한 발전으로 여론에 관한 풍부한 정보가 생성되기에 이를 대하는 정치행위자의 반응성도 높아진다는 낙관적인 주장도 존재한다(Geer 1996).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들은 대체로 여론이 정책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

-
- 1) 이항 대표성 연구는 개별 선거구의 유권자와 대표자 사이의 관계를 의회에서의 기명투표(roll-call voting) 결과를 기초로 판단한다. 이 결과도 정책과의 관련성이 있기는 하나 시스템 수준의 정책 결과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 2) 페이지와 샤피로(Page and Shapiro 1983)는 여론과 정책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의 태동기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논문 중의 하나다. 이들은 1935년부터 1979년까지 미국의 여론과 정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고찰하여 여론과 정책 모두가 변화한 231개의 사례 가운데 66%는 여론과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3) 개별적 또는 일반적 여론-정책 연계 연구는 이항 대표성 연구와 구분되는 집합 대표성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개별 이슈 영역에 기초한 집합적 여론과 정책 결과에 기초한 연구이고, 후자는 전자를 이용하지만 이를 꿰뚫는 일반적 여론(global public opinion)과 일반적 정책 결과(global public policy)를 파악하는 연구로 볼 수 있다.

구에 속한다. 여론-정책 연계에 관한 연구를 크게 세 흐름으로 나누는 만자와 쿡(Manza and Cook 2002a; 2002b)은 위의 흐름 외에 여론이 정책에 미약한 영향을 미치지나 오히려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 연구 흐름(Converse 1964; Herbst 1998; Jacobs and Shapiro 2000)과 역사적, 제도적, 정치적 요인이 여론과 정책의 연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매개하거나 규정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연구 흐름(Cook and Barrett 1992; Soroka and Wlezien 2010)을 제시한다.⁴⁾

2. 반응성과 일치성

반응성과 일치성은 기존의 여론-정책 연계 연구에서 여론과 정책 사이의 관계를 논할 때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을 뚜렷하게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 두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추세다(Beyer and Hänni 2018; Canes-Wrone 2015; Wlezien 2017). 기본적으로 반응성은 대표자(또는 정책)와 대표되는 자(또는 여론) 사이의 상호관계를 함축하는데, 일치성은 이러한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도 대표자와 대표되는 자 사이에 형식적 일치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성립할 수 있다. 즉, 정책이 다수 여론과 부합하는 일치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론과 정책의 긍정적 상호관계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여론과 정책 사이에 긍정적 상호관계가 존재하는 반응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수 여론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는 다수 여론과 정책 사이의 일치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⁵⁾ 다만, 달(Dahl 1971)과 같이 대중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규범의 시각에서는 반

4) 최광은(2022)은 여론-정책 연계 연구의 세 흐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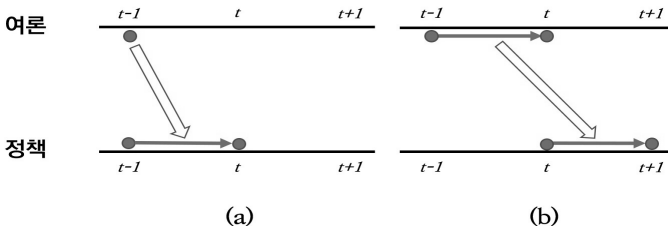
5) 랙스와 필립스(Lax and Phillips 2012)의 분석 결과는 미국 주(州)들의 정책 반응성이 정책 비(非)일치성과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여론 지지가 평균적으로 70%에 근접할 때 그 정책의 채택 확률이 50% 수준에 이르고 지지율이 이보다 조금 더 오르면 채택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유의한 반응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론의 지지가 50%를 넘어 다수 여론이 형성되었음에도 그 정책이 채택되어 일치성이 나타난 경우는 불과 2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응성과 일치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상황, 즉 대중 다수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반응성 개념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론과 정책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반응성으로 보기도 하지만(Lax and Phillips 2012), 반응성을 상호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로 규정하기도 한다(Beyer and Hänni 2018). 본 연구는 반응성을 통계적 분석 모형에서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해석하지 않고 상호관계 수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여론-정책 연계 연구의 현재 수준이 엄격한 인과관계 검증으로 나아가간 경우가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반응이라는 개념 자체는 적어도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서 인과성을 전제로 한다.

반응성은 다시 반응의 주체에 따라 크게 정책 반응성과 대중 반응성(public responsivenes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정책이 대중의 선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고, 후자는 대중이 정부의 정책이나 대표자의 태도나 행위 등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낸다. 소로카와 월레지엔(Soroka and Wlezien 2010)은 여론과 정책 사이의 피드백 관계를 강조하면서 정책 반응성과 대중 반응성을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통합적으로 탐색한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정책 대표성은 대중이 정책 입안자들의 행위를 인지하고 이에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확보될 수 있다. 대중의 이러한 반응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책 입안자들이 대중이 원하는 것을 실행할 동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림 1〉 정책 반응성의 두 유형



출처: 최광은(2022, 70)

여론과 정책의 상호관계를 전제하는 정책 반응성은 여론의 측정방식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다수 여론의 측정에 기초하고, 이를 측정할 시점이 정책 결과의 산출 시점에 선행하는 경우다. <그림 1>의 (a) 유형이 이를 표현한다. 이때의 반응성은 다수 여론과의 일치를 전제로 한다. 다수 여론의 확인 시점이 정책 결과의 산출 시점에 선행하지 않으나 그 여론이 정책 결과와 부합하는 경우는 일치성만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여론 변화의 측정에 기초하고, 이 변화가 정책 변화에 선행하는 경우다. <그림 1>의 (b) 유형이 이를 나타낸다. 이때 변화된 여론은 다수일 수도 있으며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반응성이 있다고 해서 일치성이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중심의 기존 연구에서 종종 나타난 하나의 정책 이슈에 대한 두 시점 이상에서의 여론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그림 1>의 (b) 유형과 같은 정책 반응성 형태를 탐색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책 반응성 형태를 고찰하기 어렵다.

본 연구 III장의 실증분석에 쓰인 정책 반응성 형태는 <그림 1>의 (a) 유형에 해당한다. 이 같은 유형의 반응성은 다수 여론을 전제하므로 일치성도 함께 나타난다. 본 연구의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 분석에 사용된 것처럼 한 시점의 다수 여론과 정책 결과를 각각 이진 변수로 구성한다고 가정해보자. 즉, 다수 여론을 기존 정책의 유지인지 아니면 변화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정책 결과도 기존 정책의 유지인지 아니면 변화인지에 따라 구분한다는 것이다. 여론과 정책 변수를 이렇게 정의하면 정책 일치성은 여론과 정책 변수 각각의 값이 유지와 유지 또는 변화와 변화로 상응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정책 반응성은 이러한 정책 일치성 사례 중에서 최소한 다수 여론의 측정 시점이 정책 결과 산출 시점에 선행하는 사례로 한정된다.

3. 여론-정책 연계의 실증분석

정책 대표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일반적으로 대표되는 것의 내용과 대표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대표되는 것의 내용에 따르면, 유권자와 대표자의 태도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Erikson et al. 1989; Verba and Nie 1972), 정부의 의제나 수사(修辭), 또는 정당의 선언이나 강령이 대중의 선호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살피는 연구(Cohen 1997; Klingemann et al. 2006; Soroka 2002), 유권자의 정책 선호와 대표자의 정책 판단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Miller and Stokes 1963), 유권자의 정책 선호와 정책 결과 사이의 상응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Page and Shapiro 1992) 등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대표의 주체에 따르면, 유권자와 개별 의원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Miller and Stokes 1963), 유권자와 정당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Rose 1974), 유권자와 정부 정책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Huber and Powell 1994; Page and Shapiro 1992) 등으로 나뉜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정책 대표성 연구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 결과를 여론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연구를 여론-정책 연계 연구라고 부를 수 있다.

여론과 정책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론과 정책, 그리고 그 관계의 측정이다. 먼저 여론의 측정은 주로 여론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⁶⁾ 하지만 모든 정책에 일대일로 상응하는 여론은 존재하기 어렵고 여론 모두를 일관되게 측정해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중이 구체적인 정책 현안에 관해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관심만 있다면 여론이 아예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정한 개별 정책에 관한 여론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수단이 선호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

6) 이는 방법론상의 이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지 여론조사 결과가 항상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강한 가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강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알트하우스(Althaus 2003)의 견해도 유의해야 한다.

이 있다. 첫째, 주관적인 정치적 선호를 파악하여 여론의 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Erikson et al. 1993). 둘째, 다양한 주제의 여론조사를 기초로 정책 무드(policy mood)를 측정하는 것이다(Stimson et al. 1995).⁷⁾ 셋째, 특정 이슈에 관한 여론 측정과 일반적인 여론 측정 사이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분야별 정부 지출에 관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이다(Soroka and Wlezien 2010; Wlezien 2004). 여론과 정책 사이의 연계를 개별 이슈 항목에 따라 파악하거나 일반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에는 각기 장단점이 존재하고 연구 목적에 따라 필요한 수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수단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⁸⁾ 한편, 개별 정책 이슈와 관련한 여론 측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조사에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질문이 사용된 경우는 해당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각각의 비율을 측정하고, 문항 응답의 범위가 기수나 서수인 경우는 중간값 또는 평균값을 찾거나 응답 분포의 특징을 살핀다. 정책 변화와 관련한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고, 찬성과 반대의 중간인 ‘보통’이나 ‘모름’ 또는 ‘무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사실 여론 측정보다 정책 결과 측정에 더 큰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정책 결과 측정 기준이나 방법이 각각의 연구에서 임의로 고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측정 기준이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여론과 정책 사이의 관계 양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 결과를 분야별 정부 지출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정부 지출과는 관련 없는 법과 제도의 변화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여론과 정책 사이의 관계가 다르게 표출될 수 있다. 정부 지출의 변화를 정책 결과로 간주한다면 얼마만큼의 지출 변화를 정책 결과의 변동으로 해석할 것인지의 문

7) 정책 무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화된 태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적 무드는 모든 정책 영역에서 정부 개입의 크기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수주의적 무드는 반대로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Erikson et al. 2002b). 스티imson(Stimson 1991)은 정책 무드의 측정방식을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8) 이와 관련하여 정책 영역에 따른 고유한 대표성(specific representation)과 정책 영역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대표성(global representation) 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있다(Soroka and Wlezien 2010).

제도 남는다. 하지만 정책 결과의 측정 수단에 따라 여론-정책 연계의 양상이 어떻게 변동하는지가 깊이 있게 분석된 적은 없다(Burstein 2010).

여론과 정책의 측정 문제뿐만 아니라 여론과 정책의 관계 자체를 어떻게 개념화하여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한데,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Wlezien and Soroka 2007). 첫째는 정책 일관성(policy consistency) 측정방식으로 다수 여론이 정책 변화를 원할 때 해당 정책도 함께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에는 몬로(Monroe 1979; 1998)가 있다. 본 연구의 양적 분석도 이에 기초한다. 둘째는 시공간적 비교에 기초한 공변(covariation) 측정방식이다. 이는 한 시점의 여론 파악이 아니라 두 시점 사이의 여론 변화 측정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위의 정책 일관성 접근과는 구분된다. 페이지와 샤피로(Page and Shapiro 1983)가 이 방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다. 마지막은 여론과 정책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춘 동적 대표성(dynamic representation) 측정방식이다. 대표적인 연구는 상당한 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기초로 한 스티imson 외(Stimson et al. 1995)다. 윌레지엔(Wlezien 1995)이 개발한 자동조절 모델(thermostatic model)도 정책 선호와 정부 지출 사이의 동적 상호관계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공변 및 동적 대표성 측정방식은 여론과 정책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하나의 단위에 대한 최소한 두 시점 이상의 측정을 요구한다.⁹⁾

지금까지 여론과 정책 사이의 밀접한 연계를 주장한 연구부터 이와는 다른 입장을 지닌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 정책 대표성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반응성과 일치성 개념을 고찰했다. 이어서 여론-정책 연계에 관한 실증연구의 핵심인 여론과 정책, 그리고 그 관계의 측정 문제도 검토했다. 여론-정책 연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거의 반세기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대표자와 대표되는 자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다룬 정책 대표성 연구로 시야를 넓혀야만 어느 정도의

9) 하지만 공변 측정방식에서는 한 시점에 최소한 두 단위 이상에 대한 측정을 통해 횡단면 분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구가 발견된다.

4. 한국의 정책 대표성 실증연구

〈표 1〉 한국의 정책 대표성 실증연구 사례 구분

연구영역	관계 유형	세부 유형	한국의 연구 사례
정책 일치성	대표 되는 자 -대표자	전체 유권자-전체 의원	장훈(2003), 정한울-이근수(2011), Eom and Park(2016)
		지역 유권자-지역 의원	김진국(1997)
		중위 투표자 이념-집권당 이념	현재호(2011)
		광역 유권자-광역 정당	지병근(2014)
		여론 의제-대통령 의제	신현기(2014)
	소득 계층별 유권자-전체 의원	박영환(2015)	
	여론-정책	개별적 여론-정책 일반적 여론-정책	홍승현(2007)의 양적 연구 없음
정책 반응성	여론-정책	개별적 여론-정책 일반적 여론-정책	홍승현(2007)의 사례 연구 없음
대중 반응성	여론-정책	개별적 여론-정책 일반적 여론-정책	없음 없음

출처: 최광은(2022, 82)

한국의 정치 현상을 분석한 정책 대표성 관련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표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표자와 대표되는 자의 이념과 태도, 선호, 선거강령 등에 기초한 연구는 일정하게 있지만, 정부나 의회가 결정한 구체적인 정책을 전반적인 수준에서 검토한 여론-정책 연계 연구는 홍승현(2007) 정도가 있을 뿐이다.¹⁰⁾

10)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의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정치적 대표’, ‘정책 응답성’, ‘여론과 정책’ 등의 관련 주요 키워드를 사용하여 찾아낸 연구들 가운데 여론과 정책의 직접적인 연계를 전반적인 수준에서 다룬 국내 연구자의 실증연구로는 홍승현(2007)이 유일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차원이 아닌 특정한 이슈나 분야에서 여론과 정책

II장 2절에서 다른 반응성과 일치성의 구분에 따르면, <표 1>로 요약할 수 있는 한국의 관련 실증연구는 대부분 정책 일치성을 살핀 연구다. 정책 반응성에 관한 실증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홍승헌(2007)의 사례 연구가 있고,¹¹⁾ 대중 반응성 연구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I장 1절에서 언급한 개별적 또는 일반적 여론-정책 연계 연구 구분에 따르면, 개별적 여론-정책 관계에 기초한 연구로는 홍승헌(2007)을 들 수 있고, 일반적 여론-정책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아직 한국에서 시도된 바 없다.

홍승헌(2007)은 구체적인 정책 결과와 여론 사이의 일치성을 한국에서 최초로 분석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먼저 1995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정부에서 직접 발주한 각종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여론과 정책 사이의 일치도를 시기별, 이슈별로 분석한 결과 여론과 정책 사이에 상당한 일치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실행정수도 이전 사례를 분석한 이 논문의 후반부는 여론의 변화가 정책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며 이 논문은 한국 정부의 정책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응답성은 있으나 실질적인 응답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론은 에크스타인(Eckstein 1975)의 ‘결정적 사례 연구(crucial-case studies)’ 방법에 기초하여 실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응답성이 가장 기대되는 결정적 사례로 선택한 다음 이를 반박하는 방식을 통해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 사례가 어떤 이론을 확증 또는 반증할 수 있는 결정적 사례로 적합한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게링(Gerring 200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사례 연구로부터 구체적인 이론을 검증하는 일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승헌(2007)의 전반부가 정책 일치성을 분석하는 양적 연구라면, 후반부의

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살핀 사례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존재한다.

11) 이 사례 연구는 일반화된 정책 반응성을 탐색한 시도라는 점에서 특정한 이슈나 분야를 대상으로 여론과 정책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고찰한 사례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사례 연구는 정책 반응성을 파악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일치성과 반응성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응답성으로 통칭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 II장 2절의 개념적 논의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여론 및 정책 결과 측정과 관련한 방법론상의 한계 또한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는 여론조사 결과를 측정하면서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5% 포인트 미만일 경우 여론과 정책의 일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로 간주했다. 하지만 임의성을 지닌 이러한 일률적 기준의 적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론조사마다 표본집단의 크기가 달라 최대 허용 표본오차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과반 여론을 판단하기보다 여론조사마다 각기 다른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과반 여론을 판단하는 것이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 더욱 객관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일반 여론이 아닌 특정 집단 여론의 사용, 여론조사 항목의 중복, 정책과 정책이 아닌 것 사이의 모호한 경계, 정책 결과가 아닌 정책 효과 기대의 포함, 정책 결과 판단의 오류 등과 같은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

의원이나 정치엘리트 등이 지니는 이념적 태도나 정책 선호 등을 유권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정책 대표성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대표자들이 어떻게 입법 활동을 해왔으며 의회나 정부 등의 정책 결정 단위에서 실제로 산출된 정책 결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대표성 연구에서 중요하다. 개별 의원이나 개별 정당도 정책 결과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의 태도나 선택이 곧바로 시스템 수준의 정책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스템 차원의 정책 결과가 여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 여론과 정책 사이의 일치성이나 반응성을 전반적인 차원에서 살핀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일차적으로 정책 결과를 여론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연구 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의 부족이 자료 발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분석

1.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 뉴스 포털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정책 DB’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의 연설문은 물론 여론조사를 포함한 각종 전문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론조사 자료는 각종 정부 정책 등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이 직접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 여론조사를 기초로 한다. 정책 입안과 집행의 핵심 행위자가 발주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존재할 수 있다. 장점으로는 여론과 정책의 연결 고리가 상대적으로 분명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로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단점으로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정부 기관이 정책 이슈를 선택적으로 선정하거나 질문 문항의 프레임 설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정부의 정책 추진에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고,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질문 문항의 구성 자체에 일정한 편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가 정부의 모든 정책 결정 행위에 관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정책이라 하더라도 위의 ‘정책 DB’에 등록된 여론조사 자료가 그 전부를 포괄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이 ‘정책 DB’에 수록된 여론조사를 기초로 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 정부 정책과 직접 연관된 여론조사를 축적하여 공개한 다른 기관의 자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주요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기관 자체 또는 언론사 등의 발주로 무수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기초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관련된 여론조사 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일부를 수집한다고 해도 객관적이고 일관된 선별 기준을

마련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¹²⁾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99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26년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정책 DB’에 등록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여론조사는 모두 554건이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여론조사 114건은 대부분 지역에 국한된 현안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이어서 제외했다. 나머지 440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일반적인 의식 및 현황조사,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이 있으나 표본이 국민 일반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제한된 조사나 비슷한 시기에 중복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 329건도 모두 제외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여론조사는 모두 111건이다. 하지만 하나의 여론조사에서 둘 이상의 다른 정책 이슈를 다룬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사용된 정책 이슈 관련 여론조사 항목은 169건이다. 한편, 2022년 현재까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등록되고 있는데, 2020년 12월까지 등록된 여론조사로 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자료수집이 완료된 2022년 1월 현재 시점에서

12) ‘정책 DB’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두 익명의 심사위원은 ‘정책 DB’가 아닌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교차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도로 2020년 11월에 시행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조사항목과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들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리얼미터, 그리고 엠브레인이 공개한 조사항목을 비교해 보았다. 여론조사기관들이 자체 공개한 조사항목 가운데 정책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평가나 전망, 인식이나 태도가 주류를 이루고 정책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 ‘선제적 개성공단 재가동 찬반’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정책 DB’의 조사항목과 유사한 정책 이슈 항목은 전혀 없다. 교차타당도 검증은 같은 모집단에 대해 서로 다른 표본집단을 구성하는 것에 기초하는데, 전혀 다른 정책 분야에서 전혀 다른 정책 이슈 항목끼리 구성된 다른 표본집단이 모집단의 동질성이라는 전제를 충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시기를 넓히고 자료의 원천을 더 확대하여 표본크기를 대폭 늘린다면 대부분의 정책 분야에서 유사한 정책 이슈를 포괄하면서 모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대한 작업은 현실적 여건상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검증이 생략되었으므로 그 결과의 타당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정책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여론조사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년의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¹³⁾

〈표 2〉 자료의 주요 항목과 내용

항목	내용
정부구분	여론조사를 의뢰한 정부 구분
조사의뢰기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정부 기관
조사제목	여론조사 제목
조사항목	여론조사에서 다뤄진 정책 이슈 항목
조사결과	정책 이슈에 대한 동의와 비동의 비율(%)
모름및무응답	모름 및 무응답 비율(%)
소득수준별동의	소득수준별 동의 비율(%)
정책영역	조사항목의 8개 주요 정책 분야별 구분
정책결과	조사된 정책 이슈에 대한 정책 결과
정책결정단위	조사된 정책 이슈에 대한 정책 결정 단위
여론조사시점	여론조사를 수행한 날짜
정책결정시점	정책 결과가 산출된 시점
정책시행시점	정책 결과가 산출된 이후 실제로 시행된 시점
정책결정소요기간	정책 결정 시점과 여론조사 시점 사이의 기간
여론유지변화	표본오차를 고려한 과반* 동의 또는 비동의가 기존 정책의 유지인지 변화인지를 구분
정책유지변화	정책 결정이 기존 정책의 유지인지 변화인지를 구분
정책일치성	여론 유지-정책 유지 또는 여론 변화-정책 변화는 일치로 구분
정책반응성	여론-정책 일치 사례 중 여론이 정책에 선행하는 경우를 반응으로 구분

* 표본오차를 고려한 과반은 과반 기준인 50%에 개별 여론조사의 95% 신뢰수준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를 합한 비율을 말한다.

13) 여론조사 시점 이후 정책 변화가 일어나 정책 결정 소요기간을 측정할 수 있는 77건의 사례 가운데 그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41건으로 전체의 53.25%를 차지했고, 1년 초과 2년 이하와 2년 초과 3년 이하는 각각 13건(16.88%), 10건(12.99%)이었다.

이 169건의 여론조사 항목을 바탕으로 이에 상응하는 정책 결과를 일일이 추적하여 이를 기록한 여론-정책 연계 자료를 구축했다.¹⁴⁾ 이 자료에 포함된 주요 항목과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여기서 ‘조사결과’는 해당 정책 이슈 항목에 대한 동의와 비동의의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동의와 비동의로 분류하면서 ‘모름 및 무응답’과 일부 여론조사 항목에만 해당하는 동의와 비동의의 중간인 ‘보통’과 같은 응답은 제외했다. 이때 강한 동의 및 약한 동의는 ‘동의’로, 강한 비동의 및 약한 비동의는 ‘비동의’로 묶어 단순화했다. 정책 결정 시점은 정책 시행 시점과 구분되며,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인 경우에는 공포일을 정책 결정 시점으로 간주했고 시행일을 정책 시행 시점으로 보았다. 정책이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경우는 정책 결정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있거나 정책 변화를 거부한 결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여론유지변화’ 변수는 과반인 50%에 개별 여론조사의 95% 신뢰수준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를 합한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비동의가 있을 때 이를 다수 여론이 기존 정책의 유지를 원하는지 변화를 원하는지로 구분한 것이다.¹⁵⁾ 다수 여론

14) 이 여론-정책 연계 자료에 사용된 여론조사와 그 항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정책 DB’에서 여론조사 유형을 선택한 다음 기간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고 (<https://www.korea.kr/archive/expDocMainList.do> 참조), 이 자료 전체는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이 제공하는 아카이브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https://doi.org/10.3886/E178021V3> 참조).

15) 예를 들어, 표본크기가 1,000명일 때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포인트다. 이때 동의 비율이 과반을 넘는지 아닌지를 50%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50%에 표본오차를 더한 53.1%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즉, 동의 비율이 53.1%를 초과해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동의가 과반을 넘긴다고 해석한다. 이때 모름 및 무응답이 없다고 가정하면 비동의의 최대 비율은 46.9%이고, 동의와 비동의 격차의 최솟값은 6.2% 포인트다. 여론조사마다 표본크기가 다르므로 이 최대 허용 표본오차를 이용하여 동의 또는 비동의의 과반을 판단하는 것은 임의성을 제거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홍승현(2007)은 여론과 정책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때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일률적으로 5% 포인트 미만인 경우를 ‘기타’로 분류하여 제외했다.

을 유지와 변화의 이진 변수로 측정할 이유는 변화 요구의 수준을 세분화하기도 어렵고, 세분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정도가 정책에 따라 질적으로 달리 해석되므로 측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여론의 동의 또는 비동의 비율이 50%를 기준으로 최대 허용 표본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 사례는 19건이고, 동의와 비동의 비율 모두가 50%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를 뺀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5건이다. 따라서 169건의 여론조사 항목 가운데 이같이 다수 여론의 향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24건을 제외한 145건으로 정책 일치성을 판별했다.

‘정책유지변화’ 변수는 정책 결정이 기존 정책의 유지로 나타났는지 변화로 나타났는지로 구분한 것이다.¹⁶⁾ ‘여론유지변화’ 변수와 ‘정책유지변화’ 변수 각각에서 유지와 유지 또는 변화와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수 여론과 정책 모두가 유지 또는 변화로 일치하는 것을 가리키고, 이들 변수 각각에서 유지와 변화 또는 변화와 유지가 나타나는 것은 다수 여론과 정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표 3> 참조). ‘정책일치성’ 변수에서 전자는 일치로 후자는 불일치로 구분된다. ‘정책반응성’ 변수에서 반응으로 구분한 사례는 ‘정책일치성’ 변수에서 일치로 구분한 사례 가운데 정책 결정 시점이 여론조사 시점보다 앞서는 48건을 제외한 나머지 97건이다(<표 3> 참조). 즉, 본 연구의 양적 분석에 쓰인 정책 반응성 사례는 정책 일치성 사례 중에서 여론이 정책에 시간상 선행한다는 반응성의 최소 조건만을 충족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례는 시간상 선행이라는 최소 조건을 넘어서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함축한 정책 반응성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정책 반응성과 정책 일치성의 판단은 길런스(Gilens 2009)와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 시점이 여론조사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했다. 4년 이후에 정책이 변화된 사례는 모두 8건인데, 이들 사례는 정책이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16) 본 연구에서 정책 결과는 주로 국회의 법률 제개정이나 정부의 행정적 결정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책 변화를 이진 변수로 측정하는 것이 비교적 단순하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부분적 또는 점진적 변화와 전면적 변화로 세분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2. 양적 분석

양적 분석에서는 분석 기간 전체의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 수준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들 수준이 정부 구분, 정책 분야, 여론 지지율, 이슈 주목도 등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간략히 서술한다.¹⁷⁾

1) 전체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

<표 3>은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현행 정책의 유지인가 아니면 변화인가로 구분된 다수 여론의 선호가 현행 정책의 유지 또는 변화로 드러난 정책 결과와 상응하는 정도를 앞서 정의한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으로 보여준 것이다.

17) 기존 문헌에서 여론과 정책의 관계는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물론 시기나 정책 영역, 이슈 주목도(salience) 등에 따라 분석된다(홍승헌 2007; Monroe 1979; 1998).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덧붙여 여론의 지지 정도에 따라 그 관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살펴 본다. 한편, 한 익명의 심사위원은 여론과 정책의 관계가 사회 집단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을 제안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 집단 구분은 소득수준에 따른 것인데, 소득계층에 따른 정책 반응성의 차이를 살피는 연구가 대표성의 불평등(representational inequality) 또는 불평등한 반응성(unequal responsiveness) 연구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 쓰인 169개의 여론-정책 연계 사례 가운데 소득계층의 정책 선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례는 69개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소득계층에 따른 정책 선호의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사례를 제외하면 그 수는 훨씬 줄어든다. 사례 수의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마다 소득계층 분류가 달라 일관된 비교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지닌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 위 심사위원은 선거 경쟁률이나 여소야대 상황과 같은 정치적 맥락에 대한 고려를 제안했고, 다른 한 익명의 심사위원은 단점정부인지 분점정부인지, 임기 초반인지 후반인지, 그리고 주요 선거 결과 등에 따라 정책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 모든 요인을 고려한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는 일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다. 사실 위에서 언급된 요인 외에도 다양한 잠재적 변수가 관련 문헌에 등장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론적 중요성에 따라 주요 변수를 구분하고 가설 수립 과정을 거쳐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정책 일치성은 73.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표 3>의 왼쪽에서 다수 여론 선호와 정책 결과가 일치하는 사례, 즉 “현행 유지/현행 유지” 또는 “정책 변화/정책 변화” 사례 건수인 10과 96을 합한 106을 전체 사례 건수인 145의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진 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감마 계수(gamma coefficient)도 0.66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¹⁸⁾ 이러한 정책 일치성 수준은 미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된 1960년부터 1979년까지의 정책 일치성 66%와 1980년부터 1993년까지의 정책 일치성 55%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이다(Monroe 1979; 1998). 다만, 미국 사례는 비교적 광범위한 여론조사 자료에 기초한 것이고, 본 연구는 정부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기초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책 반응성은 61.9%로 정책 일치성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고, 감마 계수 또한 0.52로 다소 낮았다. 하지만 이 또한 상당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정책 결정 시점이 여론조사 시점보다 앞서므로 정책 반응성 사례가 되지 못한 48건 가운데 46건은 여론과 정책이 일치하는 경우였다. 여론조사가 정책 결정 이후에 이루어질 때 그 결과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표 3>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

정책 일치성			정책 반응성		
	다수 여론 선호			다수 여론 선호	
정책 결과	현행 유지	정책 변화	정책 결과	현행 유지	정책 변화
현행 유지	10(62.5)	33(25.6)	현행 유지	10(66.7)	32(39.0)

18) 감마 계수는 두 개의 서수형 변수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두 개의 연속형 변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와 마찬가지로 그 계수의 크기는 연관관계의 강도를 보여준다. 감마 계수가 이진 변수 자료에 기초한 경우는 Yule's Q로 불리기도 한다. 감마 계수의 값은 상관 계수와 마찬가지로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절댓값 1에 가까울수록 관계의 강도는 세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절댓값이 0.3에서 0.49 사이에 있으면 보통의 관계, 0.5에서 0.69 사이는 상당한 관계, 0.7 이상은 매우 강한 관계를 나타낸다.

정책 일치성			정책 반응성		
정책 변화	6(37.5)	96(74.4)	정책 변화	5(33.3)	50(61.0)
N	16(100.0)	129(100.0)	N	15(100.0)	82(100.0)
일치성(%)	73.1		반응성(%)	61.9	
감마 계수	0.66		감마 계수	0.52	

2) 정부별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

<표 4>는 여론조사가 시행된 시점의 정부 구분에 따른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의 양상을 나타낸다. 일치성의 측면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항목과 정책 사이의 일치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응성의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항목과 정책 사이의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부록 <표A 1>과 <표A 2>의 모델 1과 모델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부 구분 변수가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169건의 여론조사 항목을 정부별로 구분하여 연평균 정책 관련 여론조사 항목 수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8.7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명박 정부가 3.4건으로 가장 낮았다. 그밖에는 노무현 정부 8.2건, 김대중 정부 6.4건, 박근혜 정부 5.5건, 김영삼 정부 5.0건 순이었다. 보수적인 성향의 정부에서 대체로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여론조사 시점 정부별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

정부 구분	일치성(%)	N	반응성(%)	N
문재인 정부	65.4	26	46.7	15
박근혜 정부	89.5	19	33.3	3
이명박 정부	83.3	12	75.0	8

정부 구분	일치성(%)	N	반응성(%)	N
노무현 정부	78.4	37	74.2	31
김대중 정부	64.3	28	59.1	22
김영삼 정부	65.2	23	55.6	18

여론조사 시점과 정책 결정 시점 사이의 격차가 있으므로 <표 4>의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을 그대로 정부별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정부의 임기 내에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정책 결정 또한 이루어진 여론-정책 항목만을 대상으로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 그 결과를 보여주는 <표 5>를 앞의 <표 4>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일치성과 반응성의 정도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반응성의 경우에는 사례 수가 매우 적으므로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해당 정부가 임기 내에 추진하고 결정한 정책 대부분은 여론의 방향과 부합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결과만을 놓고 여론이 정부 정책을 전적으로 추동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정부가 여론의 향방을 살펴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임기 내에 과감하게 추진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 5> 임기 내 정책 결정의 정부별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

정부 구분	일치성(%)	N	반응성(%)	N
문재인 정부	85.0	20	77.8	9
박근혜 정부	100.0	15	100.0	1
이명박 정부	87.5	8	80.0	5
노무현 정부	88.9	27	85.7	21
김대중 정부	84.6	13	88.9	9
김영삼 정부	100.0	11	100.0	6

3) 분야별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

<표 6>은 개별 여론-정책 항목을 8개 주요 정책 분야별로 구분한 다음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을 각각 살펴본 것이다.¹⁹⁾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일반과 외교/국방 영역의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²⁰⁾ 위의 세 분야에서 70% 이상의 높은 정책 변화 지지율이 나타난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전체의 93.8%, 사회일반 분야에서는 60.1%, 외교/국방 분야에서는 35.7%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변화 선호 여론이 매우 높을 때 이것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 되는 경향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일반 분야는 다른 정책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매우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이슈 대부분은 일반 대중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이 여론과 독립적인 정책 결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배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외교/국방 분야는 다른 국내 정책 분야와 달리 남북관계나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크므로 대중의 여론이 정책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19) 주요 정책 분야 구분은 기본적으로 홍승현(2007)과 몬로(Monroe 1979; 1998)의 구분 방식을 참조했으며, 이에 따라 개별 여론-정책 항목의 내용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기준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항목들은 ‘사회일반’ 분야로 묶을 수 있었다.

20) 부록 <표A 1>과 <표A 2>의 모델 2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 일치성 또는 반응성이 나타날 확률을 기준으로 할 때 정책 일치성에서는 사회일반 분야에서, 정책 반응성에서는 사회일반, 외교/국방, 행정 분야에서 일치성 또는 반응성이 훨씬 낮게 나타날 확률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6〉 분야별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

정책 분야	일치성(%)	N	반응성(%)	N
경제	87.0	23	87.5	16
교육/문화	68.4	19	62.5	16
노동	70.0	10	71.4	7
사회복지	100.0	16	100.0	7
사회일반	58.1	31	45.8	24
에너지/환경	76.5	17	55.6	9
외교/국방	58.3	12	37.5	8
행정	70.6	17	50.0	10

개별 여론 정책 항목을 일차적으로 위의 정책 분야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항목들은 다른 정책 분야와 겹치는 영역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관련 항목은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와도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일차적인 정책 분야 구분에 덧붙여 해당 분야에 이차적으로 관련된 항목을 합산하여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을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 전체 항목을 검토한 결과 169개 항목 가운데 56개(33.1%)가 두 개의 정책 분야에 걸쳐 있고, 여론의 향방을 판단하기 어려운 24개 항목을 제외한 145개 항목 중에서는 44개(30.3%)가 두 개의 정책 분야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 분야별(복합)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

정책 분야(복합)	일치성(%)	N	반응성(%)	N
경제	73.0	37	69.2	26
교육/문화	60.9	23	55.0	20
노동	80.0	20	81.8	11
사회복지	100.0	19	100.0	9
사회일반	58.1	31	45.8	24

정책 분야(복합)	일치성(%)	N	반응성(%)	N
에너지/환경	78.9	19	60.0	10
외교/국방	60.0	15	40.0	10
행정	60.0	25	37.5	16

<표 7>은 두 정책 분야에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여론-정책 항목을 분야별로 모두 합산하여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을 살펴본 것이다. 다만, 하나의 항목이 두 개의 분야에서 계산됨에 따라 과대 대표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표 7>이 보여주듯이 경제와 노동 분야 관련 이슈 항목들이 대폭 증가했다. 일치성과 반응성의 정도를 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다소 낮아졌고 노동 분야에서는 다소 높아졌지만, 이를 의미 있는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즉, 이슈의 중복 분류를 허용하더라도 일치성과 반응성의 정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4) 분야별 변화 지향 편향 지수

<표 8>은 정책 분야별로 ‘변화 지향 편향 지수(index of bias toward change)’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²¹⁾ 이 지수는 대중이 정책 변화를 선호했을 때 실제 원하는 정책 결과를 경험한 사례의 비율에서 대중이 정책 유지를 선호했을 때 실제 원하는 정책 결과를 경험한 사례의 비율을 뺀 수치다. 즉, 이 측정치는 다수 대중이 현상의 유지를 원할 때보다 새로운 변화를 원할 때 이를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확률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표 8>의 전체 사례에 대한 변화 지향 편향 지수 11.9는 <표 3>의 정책 일치성에서 오른편 하단의 백분율 74.4에서 왼편 상단의 백분율 62.5를 차감한 것이다. 이 수치는 여론과 정책의 변화 경향이 유지 경향보다 전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가리킨다.²²⁾

21) 이 지수는 몬로(Monroe 1998)의 ‘변화 저항 편향 지수(index of bias against change)’를 역으로 변형한 것이다.

22) 참고로, 몬로(Monroe 1998)의 ‘변화 저항 편향 지수’는 전체 사례에 대해 각각 17(1960~1979년)과 25(1980~1993년)로 나타나 이와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준다.

〈표 8〉 분야별 변화 지향 편향 지수

정책 분야	변화 지향 편향 지수	정책 분야(복합)	변화 지향 편향 지수
전체	11.9		
경제	90.9	경제	43.1
교육/문화	-37.5	교육/문화	-45.0
노동	87.5	노동	94.1
사회복지	100.0	사회복지	100.0
사회일반	-48.2	사회일반	-48.2
에너지/환경	34.6	에너지/환경	36.7
외교/국방	10.0	외교/국방	-8.3
행정	70.6	행정	-41.7

교육/문화나 사회일반 영역 등에서 보이는 음의 지수는 여론과 정책의 현상 유지 경향이 변화 경향보다 더욱 우세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편향 지수를 <표 6>의 일치성 수준과 비교하면, 편향 지수가 높을수록 일치성도 대체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수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100.0이라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사회복지 분야의 여론과 정책이 없다는 뜻이며, 사회일반 분야의 지수 -48.2는 이 분야의 여론과 정책이 현상 유지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²³⁾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분야별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의 분석 결과를 일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여론 지지율에 따른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

앞에서의 분석은 여론과 정책의 유지 또는 변화에 기초한 이진 변수를 사용한 것인데, 변화를 지지하는 여론의 정도가 실제의 정책 변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23) 하지만 이 경우 여론과 정책의 현상 유지 사례 수가 4건에 불과하고 여론은 유지를 원하나 정책이 변화된 경우의 사례가 없으므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외교/국방 분야에서는 이 사례가 각각 1건이어서 10.0이라는 값이 산출되었다.

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여론의 지지 강도가 더 세다면 그 여론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는 가정에 일정한 합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9>는 169건의 전체 사례를 정책 변화를 지지하는 여론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 각각의 범주에 따른 정책 변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불규칙성은 있으나 변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을수록 실제로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경향도 대체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40%대 변화 지지 여론과 50%대 변화 지지 여론 사이의 정책 변화 비율이 각각 46.7%와 76.7%로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책의 변화가 다수 여론의 방향을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9〉 변화 지지 여론과 정책 변화

변화 지지 여론(%)	정책 변화(%)	N
0% 이상 10% 이하	-	0
10% 초과 20% 이하	-	0
20% 초과 30% 이하	60.0	5
30% 초과 40% 이하	50.0	4
40% 초과 50% 이하	46.7	15
50% 초과 60% 이하	76.7	30
60% 초과 70% 이하	72.4	29
70% 초과 80% 이하	64.9	37
80% 초과 90% 이하	79.5	39
90% 초과 100% 이하	90.0	10

나아가 <표 10>은 여론 지지율에 따른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의 양상을 보여준다. 여론의 지지가 강할수록 정책에 대한 압력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정책 일치성이나 반응성도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10>의 결과는 여론 지지율의 증가가 정책 일치성이나 반응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긴 하나 단순한 비례관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여론 지지율이 90%를 넘는 이슈 항목에서는 정책 일치성이나 반응성이 확연히 높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부록 <표A 1>과 <표A 2>의 모델 3과 모델 5에 따르면, 여론 지지율이 정책 일치성 또는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다.

<표 10> 여론 지지율에 따른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

여론 지지율	일치성(%)	N	반응성(%)	N
50% 초과 60% 이하	64.0	25	55.0	20
60% 초과 70% 이하	78.1	32	65.0	20
70% 초과 80% 이하	66.7	39	56.0	25
80% 초과 90% 이하	76.9	39	66.7	27
90% 초과 100% 이하	90.0	10	80.0	5

6) 이슈 주목도에 따른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

이슈 주목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이슈에 관한 질문에 무응답자의 비율이 낮은 상태를 이슈를 주목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Page and Shapiro 1983), 여러 이슈가 병렬적으로 나열된 상태에서 응답자가 이슈의 중요도에 관해 우선순위를 표시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방법(Monroe 1998), 신문 기사에서 해당 정책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었는가를 계산하여 이를 측정하는 방법(Lax and Phillips 2012) 등이 있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자료수집과 방법론상의 난점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첫 번째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다만, 이 방법에서는 모름 및 무응답 항목이 없는 여론조사를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표 11〉 이슈 주목도에 따른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

이슈 주목도	일치성(%)	N	반응성(%)	N
0% 초과 3% 이하	72.2	36	66.7	30
3% 초과 6% 이하	74.1	27	70.0	20
6% 초과	66.7	15	44.4	9

<표 11>은 모름 또는 무응답 항목이 있는 96개 여론-정책 항목 가운데 여론의 향방을 판단하기 어려운 18개를 제외한 78개 항목을 대상으로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을 살펴본 것이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이 6% 이하인 구간에서는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에 큰 차이가 없었고, 6%를 초과할 때는 예측한 대로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록 방법론상의 차이는 있으나 이슈 주목도가 높을수록 정책 일치성이 높게 나타나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정하게 부합한다(Monroe 1998). 하지만 부록 <표A 1>과 <표A 2>의 모델 4와 모델 5에서는 이슈 주목도가 정책 일치성 또는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IV. 결론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정부가 수행한 여론조사를 기초로 여론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반응성과 일치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 이 탐색적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수 여론의 선호와 정책 결과가 상응하는 정책 일치성은 전체 여론-정책 연계 사례 가운데 73.1%에서 나타났고, 다수 여론의 선호가 정책 결과에 선행하며 이 결과와 부합하는 정책 반응성은 전체 사례 가운데 61.9%에서 나타났다. 즉, 대중의 선호가 정책 결과에 상당한 수준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책 일치성에서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수 여론의 선호가 정책 결과의 다수와 상응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정책 반응성에서

는 사회일반, 외교/국방, 행정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 분야에서 정책 결과 다수가 다수 여론의 선호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은 정부 구분, 여론 지지율, 이슈 주목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책 분야별로 살펴볼 때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책 일치성에서는 사회일반 분야에서, 정책 반응성에서는 사회일반, 외교/국방, 행정 분야에서 일치성 또는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넷째, 정책 변화 지향 편향 지수가 양(+)의 값을 지녀 여론과 정책의 변화 경향이 유지 경향보다 전체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이 현상의 유지를 원할 때보다 새로운 변화를 원할 때 이를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발견은 한국에서도 여론과 정책 사이에 밀접한 연계가 대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편향성 우려 및 제한적인 분석 사례 수를 지닌 이러한 탐색적 연구로부터 여론과 정책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를 단정하거나, 특히 여론이 독립적인 변수로 작용하여 정책에 강력한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일치성과 반응성을 구분하여 분석했으나 이때의 반응성은 단순히 다수 여론의 형성이 정책 결과에 선행하면서 상호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가리킬 뿐 여론과 정책 사이의 엄격한 인과관계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변수의 시간적 선행은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변 측정에 기초한 분석을 포함해 여론과 정책 바깥의 요인들을 충분히 통제한 인과관계 모델 검증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 여론-정책 연계에 관한 연구, 특히 실증연구가 발달하지 못한 현실은 상당 부분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된 탓이 크다. 물론 한정적인 자료라 할지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몇십 년에 걸친 시계열 자료는 물론 주들 사이의 비교가 가능한 횡단면 자료까지 이용한 미국의 관련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연구를 한국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론-정책 연계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서 발전하긴 했으나 수많은 공백 지점 또한 남아 있다. 이는 여론과 정책의 측정과 같은 방법론의 문제나 여론 형성과 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파악 등을 아우른다. 이러한 한계와 공백 가운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및 방법론 문제의 상당 부분은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양적 연구와 직결되는 것이고, 그 밖에 아카이브 자료나 인터뷰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통계학적 분석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가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밖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개별 사례 연구(single case study)’ 또는 ‘비교 사례 연구(comparative case study)’가 한국에서 정책 대표성 연구가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폭넓은 사례 연구를 통해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 및 여론과 정책 각각 또는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부 요인들을 파악하는 일은 이 연구 분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론과 정책의 변화 경향이 유지 경향보다 전체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지 경향이 더욱 우세하게 나타나는 미국 사례(Monroe 1998)와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이는 또한 정책 변동 이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 유지 편향(status quo bias)’(Baumgartner et al. 2009)과도 충돌하는 발견이다. 그 이유가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편향 또는 다른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의 정책 환경이 지닌 특수성 때문인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를 지나고 있으나 정치적 대표의 실제에 관해 끊임없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에서 대표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의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정책 대표성의 현재 수준을 대의 민주주의의 규범적 이상에 비추어 평가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러한 평가의 기준의 되는 규범적 이상에 대해 과연 얼마만큼의 합의가 존재하는가를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대표성에 관한 풍부한 이론적 논의가 요구된다. 나아가 정책 반응성과 정책 일치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

고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일은 한국의 여론-정책 연계 연구 그 자체의 도약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국. 1997. “국회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성: 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6권, 47-101.
- 박영환. 2015.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대표: 18대 국회 사례.” 『현대정치연구』 8권 1호, 5-37.
- 신현기. 2014. “여론과 대통령의 반응성: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차를 대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권 4호, 209-232.
- 장훈. 2003. “한국의 정치적 대표: 유권자-국회의원의 이념적 대표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2집 1호, 71-93.
- 정한울·이곤수. 2011. “한국 정치사회어젠다의 정책 선호 지형: 국민여론과 정치 엘리트의 선택.” 동아시아연구원 『EAI OPINION Review』 No. 201106-01.
- 지병근·신두철·정하윤. 2014. “주요 정당의 선거공약에서 나타난 민주적 반응성: 제6회 지방선거사례분석.” 『의정논총』 9권 2호, 189-209.
- 최광은. 2022. “여론-정책 연계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연구』 31집 3호, 61-96.
- 현재호. 2011.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 정당, 유권자 그리고 정부.” 『한국정치연구』 20집 3호, 81-108.
- 홍승현. 2007. “여론과 정책: 민주화 이후 한국정부의 정책응답성.” 『사회연구』 13호, 9-43.
- Althaus, Scott L. 2003. *Collective Preferences in Democratic Politics: Opinion Surveys and the Will of the Peop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umgartner, Frank R., Jeffrey M. Berry, Marie Hojnacki, David C. Kimball and Beth L. Leech. 2009. *Lobbying and Policy Change: Who Wins, Who Loses, and W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yer, Daniela and Miriam Hänni. 2018. “Two Sides of the Same Coin? Congruence and Responsiveness as Representative Democracy’s Currencies.” *Policy Studies Journal* 46(S1): S13-S47.

- Brooks, Clem and Jeff Manza. 2007. *Why Welfare States Persist: Public Opinion and the Future of Social Provi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rstein, Paul. 1998. *Discrimination, Jobs, and Politics: The Struggle for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in the U.S. since the New De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rstein, Paul. 2010. "Public Opinion, Public Policy, and Democracy." In *Handbook of Politics: State and Society in Global Perspective*, eds. Kevin T. Leicht and J. Craig Jenkins. New York: Springer, 63–79.
- Canes-Wrone, Brandice. 2015. "From Mass Preferences to Polic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8: 147–165.
- Cohen, Jeffrey E. 1999. *Presidential Responsiveness and Public Policy-Making*.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Ideology and Discontent*, ed. David Apter. New York: Free Press, 206–264.
- Cook, Fay Lomax and Edith J. Barrett. 1992. *Support for the American Welfare State: The Views of Congress and the Publ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ahl, Robert A.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 Eckstein, Harry. 1975. "Case Study and Theory in Political Science." In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ume 7: Strategies of Inquiry*, eds.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Reading, MA: Addison-Wesley, 79–138.
- Eom, Kihong and Young Hwan Park. 2016. "Models of Political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Empirical Analyses for the 17th and 18th National Assemblies." *Korea Observer* 47(3): 597–620.
- Erikson, Robert S., Gerald. C. Wright and John P. McIver. 1989. "Political Parties, Public Opinion, and Stat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 Science Review* 83(3): 729–750.
- Erikson, Robert S., Gerald C. Wright and John P. McIver. 1993. *Statehouse Democracy: Public Opinion and Policy in the American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ikson, Robert S., Michael B. MacKuen and James A. Stimson. 2002a. *The Macro Po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ikson, Robert S., Michael B. MacKuen and James A. Stimson. 2002b. “Public Opinion and Policy: Causal Flow in a Macro System Model.” In *Navigating Public Opinion: Polls, Policy, and the Future of American Democracy*, eds. Jeff Manza, Fay Lomax Cook and Benjamin I. P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3–53.
- Fording, Richard C. 1997. “The Conditional Effect of Violence as a Political Tactic: Mass Insurgency, Welfare Generosity, and Electoral Context in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1): 1–29.
- Geer, John G. 1996. *From Tea Leaves to Opinion Polls: A Theory of Democratic Leadership*.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erring, John. 2007. “Is There a (Viable) Crucial-Case Method?”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3): 231–253.
- Gilens, Martin. 2009. “Preference Gaps and Inequality in Representation.”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42(2): 335–341.
- Herbst, Susan. 1998. *Reading Public Opinion: How Political Actors View the Democratic Proc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ber, John D. and G. Bingham Powell, Jr. 1994. “Congruence Between Citizens and Policymakers in Two Visions of Liberal Democracy.” *World Politics* 46(3): 291–326.
- Jacobs, Lawrence R. and Robert Y. Shapiro. 2000. *Politicians Don’t Pander: Political Manipulation and the Loss of Democratic Responsiven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y, Valdimir Orlando, Jr., 1961. *Public Opinion and American Democracy*. New York: Knopf.
- Klingemann, Hans-Dieter, Andrea Volkens, Judith Bara, Ian Budge and Michael McDonald. 2006. *Mapping Policy Preferences: Estimates for Parties, Electors, and Governments in Eastern Europe, European Union and OECD 1990–200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x, Jeffrey R. and Justin H. Phillips. 2012. “The Democratic Deficit in the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6(1): 148–166.
- Manza, Jeff, and Fay Lomax Cook. 2002a. “A Democratic Polity? Three Views of Policy Responsiveness to Public Opin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30(6): 630–667.
- Manza, Jeff and Fay Lomax Cook. 2002b. “The Impact of Public Opinion on Public Policy: The State of the Debate.” In *Navigating Public Opinion: Polls, Policy, and the Future of American Democracy*, eds. Jeff Manza, Fay Lomax Cook and Benjamin I. P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7–32.
- Miller, Warren E. and Donald E. Stokes. 1963. “Constituency Influence in Congr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1): 45–56.
- Monroe, Alan D. 1979. “Consistency between Public Preferences and National Policy Decisions.” *American Politics Quarterly* 7(1): 3–19.
- Monroe, Alan D. 1998. “Public Opinion and Public Policy, 1980–1993.” *Public Opinion Quarterly* 62(1): 6–28.
- Page, Benjamin I. and Robert Y. Shapiro. 1983. “Effects of Public Opinion on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1): 175–190.
- Page, Benjamin I. and Robert Y. Shapiro. 1992. *The Rational Public: Fifty Years of Trends in Americans’ Policy Prefer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itkin, Hanna Fenichel. 1967.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se, Richard. 1974. *Problems of Party Government*. London: Macmillan.
- Soroka, Stuart N. 2002. *Agenda-Setting Dynamics in Canada*. Vancouver: UBC Press.
- Soroka, Stuart N. and Christopher Wlezien. 2010. *Degrees of Democracy: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imson, James A. 1991. *Public Opinion in America: Moods, Cycles, and Swings*. Boulder: Westview Press.
- Stimson, James A., Michael B. Mackuen and Robert S. Erikson. 1995. "Dynamic Represent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3): 543-565.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 Wlezien, Christopher. 1995. "The Public as Thermostat: Dynamics of Preferences for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4): 981-1000.
- Wlezien, Christopher. 2004. "Patterns of Representation: Dynamics of Public Preferences and Policy." *Journal of Politics* 66(1): 1-24.
- Wlezien, Christopher. 2017. "Public Opinion and Policy Representation: O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Policy Studies Journal* 45(4): 561-582.
- Wlezien, Christopher and Stuart N. Soroka.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Opinion and Policy."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eds. Russell Dalton and Hans-Dieter Klingeman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799-817.

An Exploratory Study on the Opinion-Policy Link in South Korea

Choi, Gwang-Eun | Yonsei University

Discussions on the way representative democracy functions focus on the question of how often policy decisions are in agreement with the preferences of the mass public. However,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answer this question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exploratory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opinion-policy link by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public opinion and policy outcomes in South Korea. Using the results of the survey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from 1995 through 2020, public opinion was compared with actual policy outcomes in terms of policy congruence and responsiveness. Overall, about two-thirds of the cases demonstrate that policy outcomes are consistent with majority opinion. While control of government, level of public support, and issue salienc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degree of policy congruence and policy responsiveness, there was some significant variation in congruence and responsiveness among policy areas. However, this provisional finding that the political system substantially produces policy outcomes that the public want requires further work, such as doing cross-validation, revealing its mechanism, and having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normative ideal of democracy against which the level of policy representation can be assessed.

Key Words | Representation, Policy Representation, Policy Congruence, Policy Responsiveness, Opinion-Policy Link

부록

〈표A 1〉 정책 일치성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정부 구분	김대중 정부	0.960 (0.568)				0.383 (0.391)
	노무현 정부	1.933 (1.150)				0.887 (0.724)
	이명박 정부	2.667 (2.381)				4.870 (6.015)
	박근혜 정부	4.533 (3.941)				1.142 (1.396)
	문재인 정부	1.007 (0.608)				0.690 (0.802)
정책 분야	교육/문화		0.325 (0.258)			0.089 (0.126)
	노동		0.350 (0.326)			0.151 (0.227)
	사회복지		-			-
	사회일반		0.208 (0.150)*			0.058 (0.083)*
	에너지/환경		0.488 (0.412)			0.225 (0.405)
	외교/국방		0.210 (0.180)			0.043 (0.067)*
	행정		0.360 (0.295)			0.135 (0.183)
여론 지지율			1.213 (0.186)			0.892 (0.234)
이슈 주목도					1.158 (0.340)	1.111 (0.418)
Pseudo R ²	0.04	0.04	0.01	0.00	0.15	
N	145	129	145	78	75	

* $p < 0.05$; ** $p < 0.01$; *** $p < 0.001$. 정부 구분의 기준점은 김영삼 정부이고, 정책 분야의 기준점은 경제 분야임. 추정계수는 오즈비(odds ratio)이고,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임.

〈표A 2〉 정책 반응성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정부 구분	김대중 정부	1.156 (0.747)				0.711 (0.771)
	노무현 정부	2.300 (1.450)				1.261 (1.273)
	이명박 정부	2.400 (2.278)				4.530 (5.634)
	박근혜 정부	0.400 (0.528)				-
	문재인 정부	0.700 (0.494)				4.332 (6.544)
정책 분야	교육/문화		0.238 (0.219)			0.092 (0.135)
	노동		0.357 (0.405)			0.431 (0.640)
	사회복지		-			-
	사회일반		0.121 (0.105)*			0.081 (0.120)
	에너지/환경		0.179 (0.181)			0.238 (0.413)
	외교/국방		0.086 (0.091)*			0.026 (0.049)
	행정		0.143 (0.142)*			0.096 (0.133)
여론 지지율				1.170 (0.201)		0.807 (0.287)
이슈 주목도					1.513 (0.495)	1.805 (0.837)
Pseudo R ²		0.04	0.09	0.01	0.02	0.21
N		97	90	97	59	56

* $p < 0.05$; ** $p < 0.01$; *** $p < 0.001$. 정부 구분의 기준점은 김영삼 정부이고, 정책 분야의 기준점은 경제 분야임. 추정계수는 오즈비(odds ratio)이고,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임.

능력주의, 체제 정당화, 그리고 정부신뢰*

오하석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한성민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 국문요약 |

본 논문은 '세계가치관조사' 7차 웨이브 자료를 사용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지를 체제정당화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체제 정당화이론에 따르면 시민들이 현재의 체제에 순응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속한 사회체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능력주의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사회적 원인이 아닌 개인의 노력으로 치환한다는 점에서, 체제정당화를 유도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다. 경험적 분석 결과 능력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부를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과 가계재정 만족도가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가계재정에 불만족하는 시민들은 능력주의를 강하게 믿을수록 정부를 신뢰하였지만 가계재정에 만족하는 이들보다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체제 정당화를 유도하며 정부를 신뢰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 체제 정당화, 능력주의, 공정성, 정부신뢰

* 이 연구는 2022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지원 사업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제1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I. 서론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2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022세계불평등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 2022)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상위 10%의 시민들은 전체 부의 76%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의 시민들은 전체 부의 2%만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수준을 비교하더라도 하위 50%는 8.5%만을,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등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hancel et al. 2021). 즉, 경제 여건은 하위계층에게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공평한 상황을 유지하는 기성 정치체제를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현재의 사회 체제가 정당하고 정의로우며, 신뢰할 만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Jost 2020).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시민들이 불평등한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주요한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McCoy and Major 2007).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능력(Merit)을 재능(Intelligence)과 노력(Effort)의 합으로 정의하며(Young 1958), 능력에 따라 시민들이 적합한 지위에 앉고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획득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특히, 능력주의적 가치는 자본주의 논리와 함께 경제적-사회적 성공이 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합리화했다. 그리고 빈곤과 실패를 개인의 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만들었다. 현실적으로 한 개인의 경제적 성공이 온전히 개인의 능력 덕분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우선, 개인의 재능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다양한 교육기회에 노출되고 소득이 높은 직업과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즉, 성공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비능력주의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렵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체제 정당화에 기여하는 주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능력주의적 가치는 시민들이 불공정한 기회와 불평등한 상황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능력주의 가치관에 매몰된 시민들은 자신이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체제의 문제나 모순이 아닌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있으며 현 체제를 긍정하고 지금의 불공정한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성정치세력을 신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능력주의 가치관이 과연 체제 정당화를 이끄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현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져서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능력주의 가치관이 체제정당화의 기제로 작동한다면 정부신뢰에 미치는 능력주의의 효과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II. 정부와 정치신뢰 결정요인

정치신뢰(Political Trust)는 정치 엘리트, 권위기구, 정치체제 등 정치적 행위자들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산출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리키며 (Zmerli and Castillo 2015), 시민들이 정부 및 정치체제에 대해 갖는 인식과 정치적 태도를 보여준다. 정치신뢰 중 기존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것은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정부신뢰이다.

정부신뢰와 정치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번째는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헤더링턴(Hetherington 1998)은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유색인종보다 백인인 경우 정치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특권층들의 경우, 정치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 전반에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경향이 나타났다(Bartels 2008; Verba et al. 1995). 그러나 오늘날의 시민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일관된 정책선호를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계급간 사회적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계급의식이 약화되었고(Diamond 2012; Newby 1977), 탈계급적, 탈물질적 가치가 정치영역에 반영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각자의 정치적 선호를 표현하였기 때문이다(Nieuwbeerta 1996).

두 번째 요인은 시민들의 정치적 가치관이다. 정부신뢰 수준의 차이는 개인의 정치적 이념, 그리고 당파성과 큰 연관이 있다(Hetherington and Husser 2012). 보수적인 시민들은 정부지출이 커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보수적인 정부를 지지하고 신뢰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부지출을 늘리려 하는 진보적인 정부는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Jacoby 2000; Rudolph and Evans 2005). 또한, 정치에 대해 관심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Banwart 2007). 하지만 정치적 가치관의 효과는 정부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특정 정권에 대한 신뢰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스턴(Easton 1965)은 정부신뢰를 특정 정권이 만들어낸 업적과 성과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특정적 지지(Specific Support)와 자국의 정치 시스템과 체제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분산된 지지(Diffuse Support)로 구분하였다. 이념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는 특정적 지지에 편향되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즉,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념성향에 따라서 이를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Jacoby 2000) 정치적 가치관으로 정부에 대한 분산된 지지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와 정치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으로는 이슈에 대한 태도가 있다. 맥라렌(McLaren 2010)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유럽사회조사를 분석해서 이민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정치체제, 정치인 그리고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생적인 정책 이슈의 등장 역시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보건문제는 정부의 대처능력과 시민들의 정부신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박범섭과 신정섭(2021)은 유권자들이 자국의 코로나 방역이 선진국과 비교해 우수하다고 생각할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슈요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고 해서 이를 기반으로 정치신뢰를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정 정치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독일과 스웨덴의 해적당의 사례와 같은 유럽의 단일 이슈정당의 일시적인 정치적 성공이다. 이는 지지기반으로 작용한 이슈가 사라질 때,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드는 이슈의 제한적인 영향력을 보여준다.

정치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요인은 정부의 성과, 특히 경제적 성과이다. 정부의 정당성은 경제성장과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성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Miller and Listhaug 1999). 정부성과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보상과 처벌 기제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Lewis-Beck and Stegmaier 2000). 예를 들어, 국가의 경제상황이 불황일 경우 시민들의 정치신뢰수준은 하락하였다(Citrin and Green 1986). 그러나 때때로,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성과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Levi and Stoker 2000).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정치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Lawrence 1997). 불평등이 증가하면, 빈자와 부자 모두 정부의 분배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진다. 정부가 두 소득 집단 모두의 요구를 충족하는 정책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에 두 소득 집단 모두가 정부를 불신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Lawrence 1997). 유럽국가의 경우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정치신뢰가 낮아졌으며, 평등한 국가에서는 부유한 시민들이 그렇지 못한 시민들보다 더 큰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Goubin and Hooghe 2020). 하지만 시민들은 정부성과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으로 시민들은 국가경제에 대해 회고적-전망적 평가를 바탕으로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Hibbs 1987; Kiewiet 1981). 종합하면 시민들은 객관적인 정부 성과만이 아닌, 정부 활동에 대한 개개인의 주관적 평가와 기대에 기반해서 정부

에 대한 신뢰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정부의 성과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시민들의 기대치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될 수 있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정성 인식이 다.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증가로 인해서 공정성은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그들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대한 인식은 정부나 체제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공정성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와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 재화가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Cook and Hegtvedt 1983). 다른 한편 절차적 정의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나 재화가 분배되는 절차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한다(Lind and Tyler 1988).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책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시행된다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국가가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며, 소득분배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정부, 사법부, 의회 전반을 신뢰하는 경향이 드러났다(Marien and Werner 2019; Schnaudt et al. 2021; You 2005; Zmerli and Castillo 2015). 또한, 자국의 부패가 심각하여 불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할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하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하였다(Linde and Erlingsson 2013; Orren 1997).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논의에서 본 논문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 중 능력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과 정부신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정성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있지만, 어떠한 요인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으며 또한, 공정성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I. 능력주의와 체제 정당화

능력주의란 개인이 위계적인 사회체제 내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재화를 분배 받는다는 원칙으로, 영(Young 1958)이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은 능력주의 가치관에 따라서 국가 내에서 기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여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Kim and Choi 2017; Lipsey 2014; Martin et al. 2014; Panayotakis 2014). 그 이유는 능력주의에서 강조하는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노력과 재능의 가치’는 시민들이 인식하는 공정의 문제 중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성공이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유효한 지표라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개인의 재능에 따라 보상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는 사회 최하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Newman et al.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학자들(Lipsey 2014; Martin et al. 2014)은 사회적 지위와 계층,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회의 평등은 개인이 만들어낸 성과에 따라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는 성과 기반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고려된다(Petring et al. 2012). 왜냐하면, 출발 조건의 평등이 보장된다면 그 이후에 개인의 순수한 노력과 재능에 따라 소득 및 자원의 차등적 분배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능력주의를 신뢰하는 시민들은 정부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며, 이는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설 I. 능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그렇지 않은 시민보다 정부를 신뢰할 것이다.

하지만 능력주의는 양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능력주의는 세습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이행하는 근대의 사회 합리화 과정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성공의 원인을 개인의 순수한 능력 덕분인 것으로 사고하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다(정태석 2021). 후자의 의미로 그동안 능력주의는 미국 사회의 ‘아메리카 드림’처럼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동시에 불평등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주요한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다(Jost et al. 2004; Kluegel and Smith. 2017; Mijs 2021). 능력주의는 평등의 원칙보다는 공정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어(Larsen 2016), 시민들은 능력주의에 대한 높은 믿음이 있을수록 불공정한 평등이 아닌 오히려 공정한 불평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Starmans et al. 2017). 라슨(Larsen, 2016)은 능력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시민들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절차의 공정성을 중시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두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국가의 정책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높은 수준의 믿음이 있는 사회에서는 재분배 수준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Alesina and Angeletos 2005).

능력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공고화될수록 시민들은 국가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을 긍정하며, 재분배 정책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다. 이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면 능력주의는 체제 정당화(System Justification)를 이끄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체제 정당화 이론은 사회 시스템에 분명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왜 시민들이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Jost 2020).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신념과 외부적 상태가 불일치하는 인지 부조화를 겪을 때 자신의 신념체계를 바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Park and Folkman 1997). 이와 같은 심리학적 통찰을 기반으로 체제 정당화 이론은 시민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을 지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한다(Jost 2020). 시

민들의 체제 정당화 동기는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와는 때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자신이 체제 안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체제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능력주의의 체제 정당화 효과는 사회적 약자들에게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체제정당화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시민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옹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Van der Toorn et al. 2015), 고소득층들보다 저소득층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Jost et al. 2003). 즉,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계급에 반하는 정치 행위를 벌인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시민들이 현실에 대한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의식’이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정당화하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이다(Jost 2020). 고전적인 이론에서 맑스와 엥겔스(Marx and Engels 1845)는 허위의식을 바탕으로 지배계급이 사회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통제함으로써 하위계급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권력자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위계질서를 수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람들의 부지런함과 유능함이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 낸다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Jost 2020).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계층들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여 체제 정당화의 논리를 받아드리게 된다.

또한 체제 정당화 이론은 ‘외집단 편애(Outgroup Favoritism)’를 이론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외집단 편애란 하위 계층의 시민들이 무의식적으로 상위 계층과 같은 외집단을 선호하면서 시스템을 보존하고 방어하기 위해 오히려 불평등 문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Jost and Van der Toorn 2012). 그렇다면 왜 사회적 약자가 체제 정당화 논리를 받아들여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상위 계층을 선호하는가? 이에 대한 원인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계급정체성의 약화이다. 산업의 구조 전환이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강한 분야(철강산업, 자동차산업)에서 이들의 계급의식이 약한 분야(통신업, 서비

스업)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노동자들의 소득향상으로 계급이동의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시민들의 계급정체성이 약화되었다(Diamond 2012; Newby 1977). 두 번째 이유는 계급의식의 자리를 국가정체성이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샤요의 연구(Shayo 2009)는 이러한 질문에 중요한 답을 제시한다. 그는 불평등의 증가와 같이 하층 계급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할 때, 하층 계급 입장에서 국가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해서 계급정체성보다는 국가정체성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Shayo 2009). 즉, 사회적 약자들은 불평등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가 떨어지게 되더라도 그것이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국가자부심이 높아지고, 사회 상위 계층을 선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이 복지선호가 낮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Solt 2011)는 점도 약자들이 체제 정당화 논리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계급정체성이 약화된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은 기성사회를 개혁하는 의지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의 경제성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계층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국가정체성이 강화되면서 현재의 상태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체제 정당화를 이끄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적으로 유리한 계층보다 약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능력주의를 신뢰할수록 본인이 저소득층일지라도 현재의 체제를 공정하다고 믿게 되고(McCoy and Major 2007), 현 체제를 만들어낸 정부를 신뢰할 것이다. 즉 기존 정치 세력의 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노력과 공정한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정부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이 결과는 소득이 낮은 시민들이 높은 시민들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가설 II.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능력주의 태도의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이다.

연관되어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능력주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소득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소득수준이 반드시 개인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인의 소득수준이 낮거나 재산이 적더라도 경제적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축적한 부가 많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시민 역시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기존의 체제 유지에 대한 믿음과 기존 질서와 제도를 만드는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이미 현재의 경제상황에 만족하는 시민들은 추가적으로 능력주의를 통해서 체제를 정당화할 동기부여가 적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상황에 불만족하는 시민들은 경제상황에 만족하는 시민들보다 능력주의 가치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설명을 정리하면 가설은 아래와 같이 도출될 것이다.

가설 III. 스스로 가계재정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시민들은 만족하는 시민들보다 능력주의 태도의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이다.

IV. 분석틀

1. 주요 변수의 개념 및 측정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7차 웨이브 자료를 사용했다. 이 자료는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및 시민들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치 이념, 사회문화적 가치체계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세계가치관조사”의 7차 웨이브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됐으며,

2022년 9월 기준으로 59개의 국가가 조사되었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국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에서 동일한 체제정당화의 논리가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들의 체제에 대한 동의가 체제유지에 필수적이며, 시민들은 체제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 정치행위를 통해서 체제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들의 체제정당화 논리에 대한 수용이 체제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주로 국가권력을 통한 강압적인 권력행사로 체제가 유지되며 시민들의 동의에 의한 체제안정의 효과는 민주주의에 비하면 약하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분류 기준으로는 Polity V(2018)와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사용했다. Polity V가 민주주의로 분류한 국가(총 -10점부터 10점 중 6점 이상)와 민주주의 지수에서 결손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국가, 두 범주에 모두 속한 국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독일,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미국, 브라질, 세르비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일본,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키프로스, 튀니지, 페루, 필리핀, 그리고 호주 총 24개 국가이며 총 표본은 38,466개이다.

논문의 종속변수는 정부신뢰이다. 정부신뢰는 행정부만을 대상으로(Citrin and Luks 2001), 혹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하여 고려할 수 있다(Hetherington 1998). 이 중 정부신뢰를 행정부와 입법부(의회)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대통령제 국가와 의원내각제 국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반을 모두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의사가 반영되는 공간이 입법부와 행정부라는 점에서 두 국가기관의 신뢰 지수를 종속변수로 고려하였다. 행정부신뢰는 ‘세계가치관조사’의 “Q71 행정부신뢰”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입법부 신뢰는 “Q73 의회신뢰”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두 문항은 1점부터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은 “매우 신뢰한다.”, 4점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이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를 역코딩하여 4점을 매우 신뢰, 1점을 전혀 신뢰하지 않음으로 변경하였다. 두 변수 사이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0.826이었으며, 피어슨 상관계수는 0.7이었다. 두 변수 사이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두 변수의 평균값으로 정부신뢰 변수 값을 도출하였다.

독립변수인 ‘능력주의’는 ‘세계가치관조사’의 “Q110 성공: 근면(hard work) vs 운(luck)”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의 10점 척도를 역코딩하여 성공배경이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10의 값을, 성공은 운과 사회적 배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1로 분류하였다. 능력주의의 요소인 재능과 노력 중에서 노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우선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재능을 측정할 만한 설문이 부재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재능은 사회적 배경 등 비능력주의적 요소가 개입될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재능은 부모로부터 유전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비능력주의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재능보다 노력을 중심으로 능력주의를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김태심 2020; Jost et al. 2003; Ledgerwood et al. 2011; Mijis 2021; Newman et al. 2015; Reynolds and Xian 2014). 아래 <표 1>은 위의 선행연구가 능력주의를 어떻게 개념화했는지 보여준다.

<표 1> 능력주의 개념화

논문 저	능력주의 개념화
김태심 2020	“성공하는 데 있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운이 좋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Jost et al. 2003	(a) ‘Anyone who is willing to work hard has a good chance of succeeding’, (b) ‘If people work hard enough, they can make a good life for themselves’

논문 저	능력주의 개념화
Ledgerwood et al. 2011	Pro-meritocracy conclusion: hard work and determination lead to success Anti-meritocracy conclusion: hard work does not lead to success.
Mijs 2021	“How important you think it is for getting ahead in life...” (a) hard work
Newman et al. 2015	“Meritocracy: Most people who want to get ahead can make it if they’re willing to work hard ”
Reynolds and Xian 2014	“To get ahead in life what is important?” Meritocracy: hard work , ambition, education Non-Meritocracy: Friends and family

‘소득’은 “Q288 가구 소득수준”의 주관적 소득인식 문항을 사용하였다. ‘세계 가치관조사’는 다양한 국가를 다루기 때문에 각 국가별 통화체계를 고려하기 힘들다는 문제로 객관적인 소득 데이터가 없다. 따라서, 주관적인 소득인식 문항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10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점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층, 10점에 가까울수록 고소득층이다¹⁾.

‘가계재정 만족도’는 “Q50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문항은 피응답자의 가정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며, 10점일수록 만족하고 1점일수록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과 ‘가계재정 만족도’ 사이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0.5, 상관계수는 0.34로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가계재

1) 주관적 소득은 객관적인 소득수준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차 발생의 문제점이 있다(Donnelly and Pop-Eleches 2018).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소득수준은 논문의 목적에 적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중,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오판하여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체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르텔스(Bartels 2008)는 ‘오인된 자기이해(Misguided Self-Interest)’의 개념을 제시하고, 상당수의 저소득층들이 자신의 소득수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artels 2008).

정상상태에 만족하는 경우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크론바흐 알파 값과 상관계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이 낮음에도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시민이 존재하는 반면, 소득이 높음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는 시민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두 경우를 각각 살펴보기 위해서 ‘소득수준’과 ‘가계재정 만족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기타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서 다뤄진 주요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 정치신뢰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Banwart 2007) ‘정치관심’ 변수를 포함하였다. 공정성 문제와 연관되어서 시민들은 자국의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할수록 정치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기 때문에(Orron 1997),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주민 문제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특정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치이념을 추가하였다. 기타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성별, 결혼-동거 여부, 그리고 교육 수준을 고려하였다. 추가적으로 국가의 객관적인 경제성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World Bank 데이터를 통해 각국의 명목 GDP의 로그값과 실업률을 포함하였다²⁾. 국가 수준에서 불평등을 통제하기 위해 솔트(Solt 2020)의 가구 가처분 소득 후의 Gini 계수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강건한 통계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조사연도별 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며, 고정효과모델의 경우 모든 조사 국가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및 기초통계 결과들은 <부록 1>과 <부록 3>에 정리하였다. 본 논문이 사용한 설문문항 원문은 <부록 2>에 첨부하였다.

2. 분석 모델

본 논문의 분석 모델은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이다. 다층모형분석

2) World Bank에는 대만의 GDP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IMF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을 실행한 이유는 ‘세계가치관조사’의 데이터가 개인 수준이 국가 수준에 포함되는 위계구조(Standard Hierarchical Structure)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Steenbergen and Jones 2002). 데이터가 위계구조를 가지게 된다면, 개인 간 분산(Variance)과 함께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분산이 존재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자료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회귀분석을 진행하게 된다면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과소추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층모형을 통해서 개인과 국가 수준의 위계성을 반영한다면 하위 수준의 독립변수의 인과효과가 상위 수준의 독립변수에 의해 조절 혹은 완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teenbergen and Jones 2002). 또한, 개별국가의 특성에 따라, 정부신뢰의 기본적인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수준 변수와 국가 수준 변수를 모두 고려한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1 수준 - 개인

$$Y_{ij} = \beta_{0j} + \beta_{1j}(\text{능력주의})_{ij} + \beta_{2j}(\text{소득수준})_{ij} + \beta_{3j}(\text{가계재정 만족도})_{ij} + \beta_{4j}(\text{능력주의})_{ij}(\text{소득수준})_{ij} + \beta_{5j}(\text{능력주의})_{ij}(\text{가계재정 만족도})_{ij} + \beta_{6j}(\text{통제변수})_{ij} + \dots + e_{ij}$$

2 수준 - 국가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로그 GDP})_j + \gamma_{02}(\text{실업률})_j + \gamma_{03}(\text{Gini 계수})_j + \mu_{0j}$$

$$\beta_{qj} = \gamma_{q0}, \quad q=1 \dots 13$$

Y_{ij} : j 국가의 i 번째 응답자의 정부신뢰

β_{0j} : j 국가의 응답자들의 평균 정부신뢰

e_{ij} : 응답자 수준의 오차, 정부신뢰에 대한 응답자 간의 차이

γ_{00} : 전체 국가의 평균 정부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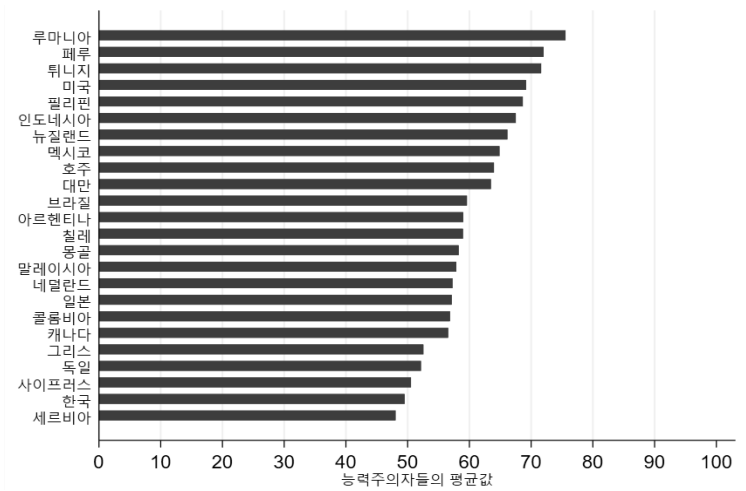
μ_{0j} : 국가수준의 오차, 정부신뢰에 대한 국가 간 차이

β_{1j} : 응답자들의 능력주의 태도가 정부신뢰에 주는 효과

$\beta_{4j} \beta_{5j}$: 응답자들의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과 소득수준, 가계재정 만족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

V. 연구결과

1. 각 국가별 능력주의자들의 평균값



〈그림 1〉 각 국가별 능력주의자 평균값

본격적인 통계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각 국가별로 시민들이 성공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1>은 각 국가별 능력주의자들에게 대한 태도의 평균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 ‘능력주의’의 변수를 0(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부터 100(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 살게 된다)사이로 재코딩하였다. 세르비아와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능력주의자들의 평균값이 과반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능력주의자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선별된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이 원인으로 고려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권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충족시키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권위주의, 독재 국가에 비해 시민들이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실질적으로 자수성가로 성공한 시민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자기만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의 비중이 1996년에 44.7%에서 2001년에는 58.1%로, 2014년에는 69.6%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상속부자들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Freund and Oliver 2016). 미디어의 발달로 이러한 신규 부자들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능력주의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능력주의자들의 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2014년 기준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비율이 약 2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 1>의 결과는 국가 내의 현실과 시민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각 국가별 능력주의자들의 비중이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의 장에서는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사이의 보다 엄밀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2.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분석결과

〈표 2〉 능력주의와 정부신뢰³⁾

	(모델1) 다층모형	(모델2) 다층모형	(모델3) 다층모형	(모델4) 고정효과 모형	(모델5) 고정효과 모형	(모델6) 고정효과 모형
고정효과						
개인수준						
능력주의	0.0187*** (0.00137)	0.0111*** (0.00143)	0.0378*** (0.00414)	0.0187*** (0.00142)	0.0111*** (0.00148)	0.0378*** (0.00446)
소득수준		-0.00287 (0.00202)	0.0186*** (0.00471)		-0.00282 (0.00210)	0.0186*** (0.00501)
능력주의*소득수 준			-0.00327*** (0.000646)			-0.00326*** (0.000693)
가계재정 만족도		0.0331*** (0.00178)	0.0446*** (0.00408)		0.0331*** (0.00190)	0.0446*** (0.00437)
능력주의*가계재 정 만족도			-0.00177** (0.000564)			-0.00177** (0.000610)
부정부패 인식		-0.0853*** (0.00184)	-0.0851*** (0.00184)		-0.0852*** (0.00205)	-0.0850*** (0.00204)
정치관심		0.0888*** (0.00440)	0.0888*** (0.00439)		0.0887*** (0.00463)	0.0887*** (0.00463)

- 3) 논문에서 사용하는 정부신뢰지표는 제도로서의 정부 신뢰와 특정 정권에 대한 신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로서의 정부신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의 당파성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제하고자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2020, 아래 DPI)에서 발표한 정부이념 성향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DPI는 정부의 이념을 1점=우파, 2점=중도, 3점=좌파, 0점=알 수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모델과 결과 값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DPI에서는 대한민국,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일본 그리고 칠레에 대한 정부이념 데이터를 0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세르비아는 조사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추가할 경우, 위의 국가들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부이념 변수를 제외한 모델을 메인모델로 분석한다. DPI의 정부이념 분류와 결과 값은 <부록 4>와 <부록 5>에 첨부하였다.

이주민 문제	-0.0205*** (0.00358)	-0.0199*** (0.00357)		-0.0206*** (0.00373)	-0.0200*** (0.00373)	
보수	0.0146*** (0.00167)	0.0145*** (0.00167)		0.0146*** (0.00180)	0.0145*** (0.00180)	
여성	0.0329*** (0.00767)	0.0325*** (0.00766)		0.0328*** (0.00769)	0.0324*** (0.00769)	
연령대	0.0108*** (0.00256)	0.0109*** (0.00255)		0.0109*** (0.00257)	0.0110*** (0.00257)	
결혼-동거	0.0148 (0.00817)	0.0142 (0.00817)		0.0147 (0.00816)	0.0141 (0.00815)	
대학이상	-0.0147 (0.00925)	-0.0142 (0.00924)		-0.0147 (0.00920)	-0.0142 (0.00919)	
국가수준						
로그 GDP	-0.000703 (0.0383)	-0.000446 (0.0383)		0.00902* (0.00437)	-0.145*** (0.0152)	
실업률	-0.0326* (0.0161)	-0.0327* (0.0161)		-0.0117*** (0.00173)	-0.0935*** (0.00410)	
Gini 계수	0.00620 (0.0101)	0.00603 (0.0101)		-0.00882*** (0.00149)	0.00433** (0.00165)	
상수	1.761*** (0.176)	2.244 (1.203)	2.069 (1.201)	1.878*** (0.0248)	8.79*** (0.749)	8.67*** (0.749)
임의효과						
개인수준 분산	0.497 (0.004)	0.446 (0.004)	0.446 (0.004)			
국가수준 분산	0.123 (0.355)	0.068 (0.019)	0.068 (0.019)			
Prob > chi2	0.00	0.00	0.00			
로그우도값	-39314.872	-31956.738	-31931.377			
개인수준 관측값	36,710	31,403	31,403	36,710	31,403	31,403
집단수준 관측값	24	24	24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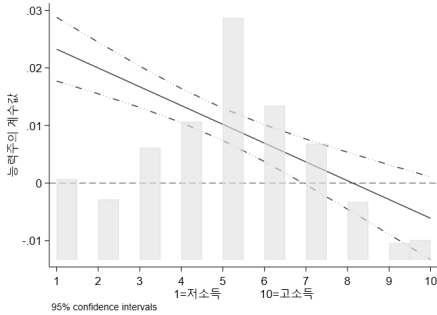
<표 2>는 능력주의, 소득, 가계재정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이다. 모델1부터 모델3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한 다층모형분석 결과이며, 모델4부터 모델6은 국가별, 각 연도 별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고정효과 모델을 사용한 회귀분석 값을 보여준다. 두 분석모델의 결과값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모델1부터 모델3을 중심으로 결과값을 해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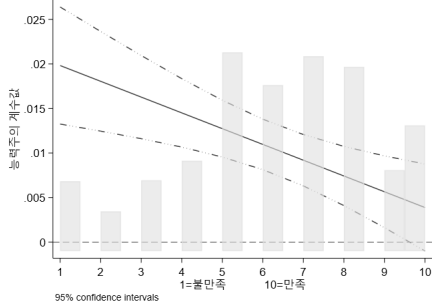
먼저 모델1은 다른 통제변수 없이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사이의 관계만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노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시민들은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델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가설 I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득’과 ‘가계재정 만족도’의 계수값을 살펴보면 소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가계재정에 만족할수록 정부에 대해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위의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가계재정 만족도 변수를 제외할 경우 소득계수는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한다. 이는 소득의 영향력의 상당부분을 가계재정 만족도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델2는 소득수준과 더불어 가계재정 만족도를 고려해야 각 시민들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보다 엄밀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설 II와 가설 III을 검증하기 위해서 능력주의 변수와 소득, 가계재정 만족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델3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능력주의’와 ‘소득’의 상호작용항, 그리고 ‘능력주의와 ‘가계재정 만족도’의 상호작용항이 모두 음수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이전의 모델2과 모델3와 비교해서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경우 능력주의 변수의 계수 값의 크기가 커졌다. 이를 종합해서 해석하면 곧 소득이 증가할수록, 혹은 가계재정에 만족할수록 능력주의가 정부신뢰에 주는 효과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능력주의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대상은 가장 소득이 낮거나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그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소득수준에 따른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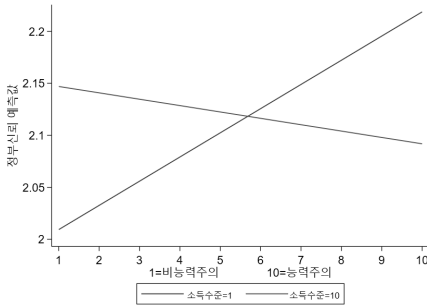
〈그림 3〉 가계재정 만족도에 따른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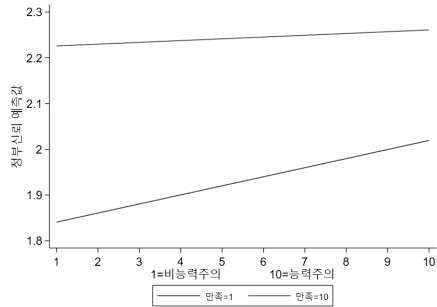
단순한 계수값의 수치만으로는 모델3의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쉽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능력주의 계수값의 한계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모델3의 ‘능력주의’에 대한 ‘소득수준’ 그리고 ‘가계재정 만족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평균한계효과추정치(Average Marginal Effect)로 표현한 그래프이다. <그림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소득이 적은 시민들이 능력주의를 신뢰할수록 소득이 많은 시민들보다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고소득층의 경우(소득수준 7 이상) 능력주의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능력주의에서 제시하는 체제 정당화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고소득층은 이미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부분 감소했지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노력을 통해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사회체제가 유지될 때, 노력과 능력에 기반해 사회 경제적 성공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정부신뢰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을 통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계의 재정상태에

불만족스러운 시민들 중에서 능력주의를 믿을수록 그렇지 않은 시민에 비해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가계재정 만족도=10) 능력주의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체제 정당화 경향이 고소득층과 재정에 만족하는 시민들보다 저소득층 그리고 가계재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소득수준에 따른
능력주의 예측값



〈그림 5〉 가계재정 만족도에 따른
능력주의 예측값



추가적으로 모델3을 토대로 소득수준과 가계재정 만족도의 양 극단(1과 10)에 놓인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능력주의에 따른 정부신뢰 예측값을 계산하였다. <그림 4>과 <그림 5>는 정부신뢰 예측값을 기준으로 소득수준과 가계재정 만족도에 따라서 능력주의와 정부신뢰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4>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시민들은(소득수준=1) 소득수준이 높은 시민들(소득수준=10)보다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낮지만, 능력주의를 신뢰할수록(능력주의 점수 6 이상) 소득이 높은 시민들보다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에 따르면 가계재정에 불만족하는 시민들은 가장 만족하는 시민들에 비해 능력주의를 가치관으로 삼을수록 정부신뢰의 상승폭이 더

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계재정에 불만족하는 시민들은 만족하는 시민들보다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능력주의의 체제 정당화 효과는 가계재정 만족도보다 소득수준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시민들이 능력주의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순전히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도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기성정치체제를 신뢰하게 된다. 하지만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는 체제정당화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가계재정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현하는 시민들은 이미 이 요소로 인해 기존체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계 재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본인의 노력 대비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없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이러한 불만과 불신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계재정 만족도가 높은 시민들에 비해서 낮다면, 신뢰의 격차는 능력주의의 효과를 통해서도 메워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본 논문의 경험적 결과는 가설 II를 지지하며, 가설 III은 제한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개인적 수준에서 통제변수들의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정부신뢰가 하락하며, 정치에 관심이 많을수록 정치신뢰가 증가하였다. 반면 이주민보다 자국민을 취업시장에서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정부신뢰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보수적일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부를 신뢰하였다. 결혼-동거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학력수준(대학이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시민들이 개인의 능력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학력수준과 실무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실제 업무능력을 별개의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측정된 변수인 국가별 로그 GDP와 Gini 계수 그리고 실업률은 다층모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층모형분석을 사용한 결과, 상당 부분 국가수준의

변화가 다층모형에 의해서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표 3〉 행정부신뢰와 의회신뢰 분석

	(모델7) 행정부 신뢰	(모델8) 행정부 신뢰	(모델9) 의회 신뢰	(모델10) 의회 신뢰
고정효과				
개인수준				
능력주의	0.0157*** (0.00166)	0.0417*** (0.00480)	0.00676*** (0.00155)	0.0340*** (0.00451)
소득수준	-0.00549* (0.00234)	0.0167** (0.00547)	-0.000228 (0.00219)	0.0206*** (0.00512)
능력주의*소득수준		-0.00338*** (0.000750)		-0.00317*** (0.000703)
가계재정 만족도	0.0364*** (0.00207)	0.0465*** (0.00474)	0.0298*** (0.00194)	0.0422*** (0.00444)
능력주의*가계재정 만족도		-0.00158* (0.000655)		-0.00193** (0.000614)
상수	2.437 (1.372)	2.267 (1.369)	2.054 (1.099)	1.88 (1.098)
임의효과				
개인수준 분산				
	0.607 (0.005)	0.606 (0.005)	0.531 (0.004)	0.53 (0.004)
국가수준 분산				
	0.089 (0.026)	0.088 (0.026)	0.057 (0.016)	0.056 (0.016)
Prob > chi2	0.00	0.00	0.00	0.00
로그우도값	-37097.48	-37079.064	-34818.234	-34796.359
개인수준 관측값	31,672	31,672	31,530	31,530
집단수준 관측값	24	24	24	24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또한 제도로서의 정부를 보다 엄밀하고 강건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정치신뢰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행정부신뢰 그리고 의회신뢰를 각각의 종속변수로 두

고 분석하였다. <표 3>은 다층모형분석에 따른 계수값을 보여준다. 모델2와 모델3과 동일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층모형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공간상의 제약으로 통제변수는 <표 3>에서 생략하였다. 모델7과 모델8은 행정부신뢰를 종속 변수로, 모델9와 모델10은 의회신뢰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먼저 능력주의의 계수값이 행정부신뢰의 경우에 더 높았다는 점에서 능력주의에 따른 체제 정당화 효과는 행정부 신뢰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수의 방향성은 모두 <표 2>의 모델2와 모델3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능력주의에 의한 체제 정당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는 각 국가기관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Polity V 민주주의 기준 적용

	(모델11) Polity V 모형	(모델12) Polity V 모형
고정효과		
개인수준		
능력주의	0.00882*** (0.00128)	0.0280*** (0.00369)
소득수준	-0.00436* (0.00185)	0.0133** (0.00423)
능력주의*소득수준		-0.00269*** (0.000578)
가계재정 만족도	0.0329*** (0.00163)	0.0396*** (0.00364)
능력주의*가계재정 만족도		-0.00102* (0.000495)
상수	1.963 (1.076)	1.837 (1.074)
임의효과		
개인수준 분산	0.469	0.469

	(0.003)	(0.003)
국가수준 분산	0.069	0.068
	(0.017)	(0.018)
Prob > chi2	0.00	0.00
로그우도값	-39449.092	-39431.703
개인수준 관측값	37,836	37,836
집단수준 관측값	3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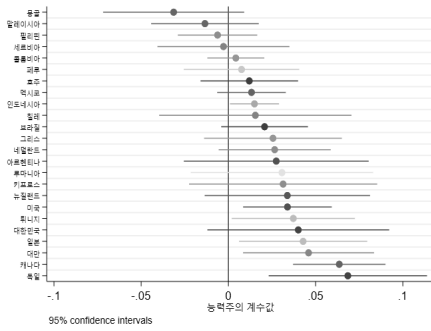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추가적인 강건성 검증을 위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보았다. Polity V에서 민주주의로 분류된 국가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Polity V에 의하면 총 35개 국가가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으며, 이중 정치이념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지 않은 5개 국가를 제외하고 30개 국가만을 고려하였다. 추가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케냐이다. 앞선 모델2와 모델3과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통제변수는 마찬가지로 <표 4>에서는 생략하였다. <표 4>의 결과를 통해 능력주의와 소득수준 그리고 가계재정 만족도 모두 계수의 방향성은 모델2와 모델3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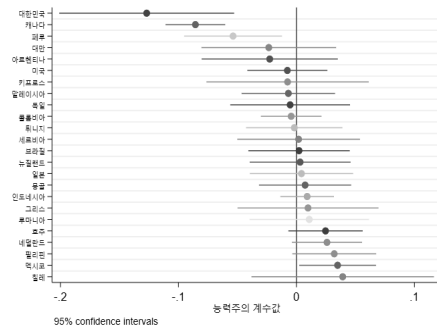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검증하고자 한 가설 중 소득효과가 가계재정 만족도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분석에 포함된 개별국가 수준에서 하위소득과 상위소득의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사이의 회귀계수 값을 계산했다. 국가 수준의 통제변수는 제외하고 모델3과 동일한 변수를 사용해서 국가별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림 6>은 하위소득(소득수준=1)의 능력주의 계수값을 정리하였으며, <그림 7>은 상위소득(소득수준=10)의 능력주의 계수값을 정리하였다. <그림 6>에서는 대만,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튀니지 등의 저소득층들이 능력주의를 강하게 믿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소득층들은 능력주의 가치관이

강할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그림 7>의 상위소득의 결과값은 멕시코만이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은 시민들이 능력주의 태도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림 2>의 결론과 일치한다).

<그림 6> 국가별 하위소득의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그림 7> 국가별 상위소득의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정부신뢰의 상승을 유도하지만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조사 시기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까지

- 4) <그림 6>과 <그림 7>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국가가 적은 이유는 소득 구간이 양극단에 위치한 사례 수가 적기 때문이다. 조사에서 분석한 24개 국가에서 저소득층(소득수준=1)의 평균 비중은 8.4%였으며, 고소득층(소득수준=10)의 평균 비중은 2.3%였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양극단에 놓인 비중이 10% 미만인 국가는 16개 국가에 달했다.

관조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부정부패 논란과 탄핵사태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의 저소득층의 경우 새롭게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드러난 각종 논란과 2017년 말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으로 인해, 시민들은 정부가 과연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적합한 행위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배경으로 능력주의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분명하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수 있다. 즉, 논문의 가설과 일치하는 경향성은 보여주지만 당시의 상황적 맥락으로 인해 능력주의의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들의 경우에는 정부 당파성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경계로 인하여 정부신뢰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을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취임 당시 적폐청산, 재벌개혁, 그리고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여 사회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고소득층은 이러한 정부의 개입정책에 경계를 하고 이를 선호하지 않아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좌파정부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고소득자들이 정부를 불신하도록 만들고 저소득층들은 정부를 신뢰하도록 만드는가? DPI 자료에서 조사기간 당시 정권의 당파성이 좌파로 분류되었던 그리스, 뉴질랜드, 독일, 필리핀, 캐나다를 살펴보면 캐나다를 제외하면 고소득층들에서 능력주의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서도 정부의 이념성향에 따라 일관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그림 6>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캐나다, 독일과 같은 좌파 정권이든, 미국과 대만 등과 같은 우파 정권이든 상관없이 저소득층들은 능력주의를 강하게 믿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능력주의의 정부신뢰 효과가 각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특정 당파성보다는 설문 조사 당시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VI. 결론

본 논문은 능력주의와 정치신뢰 사이의 관계를 체제정당화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모든 경험적 모델에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주의 가치를 믿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득수준과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조절요인으로 가정하고 분석했는데, 이는 저소득층인 경우와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체제 정당화의 효과가 높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능력주의의 효과는 소득수준과 가계재정 만족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는데, 소득수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시민들은 소득이 높은 시민들보다 능력주의 가치관을 신뢰할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은 시민들의 경우 능력주의 가치관의 효과가 사라졌다. 가계재정 만족도도 위와 유사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가계재정상태에 불만족스러운 시민들이 그렇지 않은 시민과 비교해 능력주의 가치관을 신뢰할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졌다. 하지만 재정상태에 불만족하는 시민들은 능력주의를 아무리 강하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재정상태에 만족하는 이들보다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재정상태에 불만족하는 이들은 이미 자신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를 정당화할 유인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능력주의는 체제 정당화를 이끌어내며, 주로 저소득층과 같은 경제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능력주의가 야기하는 체제 정당화하는 주로 사회적 하위계층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능력주의가 체제 정당화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동기이며 경제적 하위계층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받

견했다. 이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요구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만약, 기성체제의 엘리트들이 여전히 노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킨다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은 능력주의에 쉽게 포섭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오히려 기성체제를 옹호하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논문의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먼저 논문에서 사용한 능력주의에 대한 변수 설정에 한계가 있다. 사용한 조사자료의 한계로 능력주의를 단지 성공의 배경이 개인의 노력인지, 혹은 배경과 운인지만을 묻는 문항을 사용했다. 이 경우 성공의 배경이 노력 때문이라고 믿는 시민들의 존재를 과대 추정할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성공한 시민이 자신의 성공의 상당 부분이 본인의 배경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노력이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항을 사용해서 능력주의의 가치관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는 노력과 재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능력주의 지표에 대한 보다 엄밀한 조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보상에 동의 여부, 재능 있는 시민의 중요 관직 진출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이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능력주의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능력주의자들의 평균값이 과반 이하로 나타난 국가와 능력주의의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가 논문의 결론과 다르게 나타난 국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세르비아와 대한민국과 같이 능력주의자들의 평균값이 과반 이하인 국가들의 경우 사회적 성공이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저소득층들이 능력주의를 믿는다고 해서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저소득층들이 새롭게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 밝혀진 정부와 정치 엘리트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어

내는데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경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별국가 차원에서 능력주의와 정치에 대한 신뢰 수준을 파악하여 논문의 결과가 왜 특정 국가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긴 시간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특정 정부에 대한 지지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이념성향을 고려하였고 다층분석을 진행하였지만 국가별 능력주의의 정부신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 긴 시간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기별로 다른 정부에 대한 지지를 통제한 후 분석을 진행한다면 보다 강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태심. 2020. “공정한 불평등?: 체제 정당화와 재분배 선호.” 『평화연구』 28집 1호, 129-167.
- 박범섭·신정섭. 2021. “한국, 일본 대만에서 시민의 코로나 19 정부 대응 평가가 정부신뢰, 민주주의 만족도,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20집 3호, 131-166.
- 정태석. 2021.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경제와사회』 132호, 12-46.
- Alesina, Alberto, and George-Marios Angeletos. 2005. “Fairness and Re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5(4): 960-980.
- Banwart, Mary Christine. 2007. “Gender and Young Voters in 2004: The Influence of Perceived Knowledge and Interes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9): 1152-1168.
- Bartels, Larry M. 2008.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ancel, Lucas, Thomas Piketty, Emmanuel Saez, and Gabriel Zucman. 2021.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Paris: World Inequality Lab.
- Citrin, Jack, and Donald Philip Green. 1986.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4): 431-453.
- Citrin, Jack, and Samantha Luks. 2001. “Political Trust Revisited: Déjà Vu All Over Again?” in Chong, Dennis. eds.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9-2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k, Karen S., and Karen A. Hegtvedt. 1983. “Distributive Justice, Equity, and Equ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217-241.
- Diamond, Patrick. 2012. “From Fatalism to Fraternity: Governing Purpose and the Good Society.” in Cramme, Olaf, and Patrick Diamond. eds. *After the Third*

- Way: The Future of Social Democracy in Europe*. 1-28. London: I.B.Tauris.
- Donnelly, Michael J., and Grigore Pop-Eleches. 2018. "Income Measures in Cross-National Surveys: Problems and Solution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6(2): 355-363.
- Easton, Davi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Y: John Wiley.
- Freund, Caroline, and Sarah Oliver. 2016. "The Origins of the Superrich: the Billionaire Characteristics Databas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16(1): 1-30.
- Goubin, Silke, and Marc Hooghe. 2020. "The Effect of Inequality on the 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ratification and Political Trust in Europe." *Social Justice Research* 33(2): 219-247.
- Haerpfer, Christian W., Ronald Inglehart, Alejandro Moreno, Christian Welzel, Kseniya Kizilova, Jaime Diez-Medrano, Marta Lagos, Pippa Norris, Eduard Ponarin, and Bi Puranen. 2022.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2) Cross-National Data-Set. Version: 4.0.0."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doi.org/10.14281/18241.18.
- Hetherington, Marc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etherington, Marc J., and Jason A. Husser. 2012. "How Trust Matters: The Changing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6(2): 312-325.
- Hibbs, Douglas A. 1987.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Macroeconomics and Electoral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oby, William G. 2000. "Issue Framing and Public Opinion on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4): 750-767.
- Jost, John T. 2020. *A Theory of System Justific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ost, John T., Mahzarin R. Banaji, and Brian A. Nosek. 2004. "A Decade of System

-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6): 881-919.
- Jost, John T., Brett W. Pelham, Oliver Sheldon, and Bilian Ni Sullivan. 2003. “Social Inequality and the Reduction of Ideological Dissonance on Behalf of the System: Evidence of Enhanced System Justification among the Disadvantage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3-36.
- Jost, John T., and Jojanneke Van der Toorn. 2012. “System Justification Theory.” in Van Lange, Paul A. M., E. Tory Higgins, and Arie W. Kruglanski.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Volume 2*. 313-343. California: SAGE Publishing.
- Kiewiet, D. Roderick. 1981. “Policy-Oriented Voting in Response to Economic Issu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2): 448-459.
- Kim, Chang-Hee, and Yong-Beom Choi. 2017. “How Meritocracy is Defined Today?: Contemporary Aspects of Meritocracy.” *Economics & Sociology* 10(1): 112-121.
- Kluegel, James R., and Eliot R. Smith. 2017. *Beliefs About Inequality: Americans’ Views of What Is and What Ought to Be*. London: Routledge.
- Larsen, Christian Albrekt. 2016. “How Three Narratives of Modernity Justify Economic Inequality.” *Acta Sociologica* 59(2): 93-111.
- Lawrence, Robert Z. 1997. “Is it Really the Economy, Stupid” Nye, Joseph S.,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King. 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111-13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edgerwood, Alison, Anesu N. Mandisodza, John T. Jost, and Michelle J. Pohl. 2011. “Working for the System: Motivated Defense of Meritocratic Beliefs.” *Social Cognition* 29(3): 322-340.
- Levi, Margaret, and Laura Stoker. 2000. “Politic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1): 457-507.
- Lewis-Beck, Michael S., and Mary Stegmaier. 2000. “Economic Determinants of

-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1): 183-219.
- Lind, E. Allan, and Tom R. Tyler.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New York: Plenum Press.
- Linde, Jonas, and Gissur Ó. Erlingsson. 2013. “The Eroding Effect of Corruption on System Support in Sweden.” *Governance* 26(4): 585-603.
- Lipsey, David. 2014. “The Meretriciousness of Meritocracy.” *The Political Quarterly* 85(1): 37-42.
- Marien, Sofie, and Hannah Werner. 2019. “Fair Treatment, Fair Play?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 Treatment Perceptions, Political Trust and Compliant and Cooperative Attitudes Cross-Nationall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8(1): 72-95.
- Martin, Gregory, Darryl Dymock, Stephen Billet, and Greer Johnson. 2014. “In the Name of Meritocracy: Managers' Perceptions of Policies and Practices for Training Older Workers.” *Ageing and Society* 34(6): 992-1018.
- Marx, Karl, and Friedrich Engels. 1845. *The German Ideology*. Marxists Internet Archive.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45/german-ideology/ch01a.htm>
- McCoy, Shannon K., and Brenda Major. 2007. “Priming Meritocracy and the Psychological Justification of Inequ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3): 341-351.
- McLaren, Lauren M. 2010. “Cause for Concern?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Political Trust.” *Policy Network Paper* www.policy-network.net/publications/3889/Cause-for-concern
- Mijs, Jonathan JB. 2021. “The Paradox of Inequality: Income Inequality and Belief in Meritocracy Go Hand in Hand.” *Socio-Economic Review* 19(3): 7-35.
- Miller, Arthur, and Ola Listhaug. 1999. “Political Performance and Institutional Trust.” in Norris, Pippa.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ance*. 204-21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ewby, Howard. 1977. *The Deferential Worker*. London: Allen Lane.
- Newman, Benjamin J., Christopher D. Johnston, and Patrick L. Lown. 2015. "False Consciousness or Class Awareness? Local Income Inequality, Personal Economic Position, and Belief in American Meritocra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2): 326-340.
- Nieuwebeerta, Paul. 1996.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in Postwar Societies: Traditional Class Voting in Twenty Countries, 1945-1990." *Acta Sociologica* 39(4): 345-383.
- Orren, Gary. 1997. "Fall from Grace: The Public's Loss of Faith in Government." in Nye, Joseph S.,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King. 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77-10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nayotakis, Costas. 2014. "Capitalism, Meritocracy, and Social Stratification: A Radical Reformulation of the Davis-Moore Thesi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73(1): 126-150.
- Park, Crystal L., and Susan Folkman. 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2): 115-144.
- Petring, A., Jochen Dahm, Tobias Gombert, Christian Krell, Diana Ognyanova, Knut Lambertin, Eva Flecken, Marius R. Busemeyer, and Thomas Rixen. 2012. *Welfare State and Social Democracy*. Bonn: Friedrich-Ebert-Stiftung.
- Reynolds, Jeremy, and He Xian. 2014. "Perceptions of Meritocracy in the Land of Opportunity."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6: 121-137.
- Rudolph, Thomas J., and Jillian Evans. 2005.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3): 660-671.
- Schnaudt, Christian, Caroline Hahn, and Elias Heppner. 2021. "Distributive and Procedure Justice and Political Trust in Europe." *Frontiers in Political Science* <https://doi.org/10.3389/fpos.2021.6422> 32.
- Shayo, Moses. 2009. "A Model of Social Identity with an Application to Political

- Economy: Nation, Class, and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3(2): 147-174.
- Solt, Frederick. 2011. “Diversionary Nationalism: Economic Inequality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Pride.” *The Journal of Politics* 73(3): 821-830.
- Solt, Frederick. 2020. “Measuring Income Inequality Across Countries and Over Time: 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Social Science Quarterly* 101(3): 1183-1199. SWIID Version 9.3.
- Starmans, Christina, Mark Sheskin, and Paul Bloom. 2017. “Why People Prefer Unequal Societies.” *Nature Human Behaviour* 1(4): 1-7.
- Steenbergen, Marco R., and Bradford S. Jones. 2002. “Modeling Multilevel Data Structur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1): 218-237.
- Van der Toorn, Jozanneke, Matthew Feinberg, John T. Jost, Aaron C. Kay, Tom R. Tyler, Robb Willer, and Caroline Wilmuth. 2015. “A Sense of Powerlessness Fosters System Justification: Implications for the Legitimation of Authority, Hierarchy, and Government.” *Political Psychology* 36(1): 93-110.
- Verba, Sidney, Kay Lehman Schlo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You, Jong-Sung. 2005. *Corruption and inequality as correlates of social trust: Fairness matters more than similarity*. Cambridge: Hauser Center for Nonprofit Organizations.
- Young, Michael. 1958. *The Rise of the Meritocracy 1870~2033*. London: Thames and Hubson.
- Zmerli, Sonja, and Juan Carlos Castillo. 2015. “Income inequality, distributive fairness and political trust in Latin America.” *Social Science Research* 52: 179-192.

Meritocracy, System Justification, and Governmental Confidence

Oh, Ha Seok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an, Sung Min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ilding on system justification theor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meritocratic belief on governmental confidence using the 7th wave of the World Value Survey (WVS). System justification theory suggests that citizens become compliant with the current political systems if they believe their systems are justifiable. Given that meritocratic belief induces individuals to have ideas that current economic conditions are natural outcomes of individual efforts rather than sociological conditions, it can function as an ideology for system justification.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ndividuals with a strong meritocratic belief are more likely to have greater confidence in government than others. Additionally, we find that this effect becomes stronger for low-income classes and those with great financial dissatisfac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meritocratic ideology induces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effect of meritocracy are varied by citizens' economic situations.

Key Words | System Justification, Meritocracy, Fairness, and Government Confidence

부록

〈부록 1〉 주요 변수 소개

구분	변수 명	사용 설문	변수 값	측정
종속 변수	정부신뢰	행정부신뢰와 의회신뢰의 평균값 도출		
	행정부 신뢰	Q71: 정부신뢰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매우 신뢰한다.
	의회신뢰	Q73: 의회신뢰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매우 신뢰한다.
신뢰도(Cronbach alpha)			0.825	
독립 변수	능력주의	Q110: 성공: 근면(hard work) vs 운(luck)	1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10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 살게 된다.
	소득수준	Q288: 가구 소득수준	1	하위계층
			10	상위계층
	가계재정 만족도	Q50: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	1	대단히 불만족한다
			10	매우 만족한다
통제 변수	정치관심	Q199: 정치에 대한 관심도	1	전혀 관심 없다.
			4	매우 관심이 있다
	부정부패 인식	Q112: 자국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1	부정부패 없음
			10	만연한 부정부패
	이주민 문제	Q34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더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1	전적으로 반대
			5	전적으로 찬성
	보수	Q240: 진보와 보수	1	진보
			10	보수
	여성	Q260: 성별	0	남성
			1	여성
	연령대	Q261: 연령 연령대로 재코딩	1	20대 이하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대 이상	

구분	변수 명	사용 설문	변수 값	측정
	대학교 이상	Q275: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재코딩	0	대학교 졸업 미만
			1	학사, 석사, 박사
	결혼-동거	Q273: 결혼상태 재코딩	0	미혼, 별거, 이혼, 사별
			1	동거, 결혼
	로그 GDP	각 국가별 설문조사가 이뤄진 시기 GDP의 자연로그값 (GDP (current US\$))		
	실업률	각 국가별 설문조사가 이뤄진 시기의 실업률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Gini 계수	각 국가별 설문조사가 이뤄진 시기 혹은 가까운 시기의 Gini 계수 (Solt 2020)		
	연도 더미변수	세계가치관조사의 조사기간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모든 모델에 포함		
	국가 더미변수	고정 효과모형에서 조사에 포함된 모든 국가들을 각각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통제변수로 포함		

〈부록 2〉 부록 1에 사용된 세계가치관조사 설문문항 원문 및 원자료 값

구분	변수 명	사용 설문	변수 값	측정	
종속 변수	행정부 신뢰	Q71: Confidence: The Government	1	A great deal	
			4	None at all	
	의회 신뢰	Q73: Confidence: The Parliament	1	A great deal	
			4	None at all	
독립 변수	능력 주의	Q110: Success: hard work vs luck	1	In the long run, hard work usually brings a better life	
			10	Hard work doesn't generally bring success – it's more a matter of luck and connections	
	소득 수준	Q288: Scale of incomes	1	Lower step	
			10	Tenth step	
	가계 재정 만족도	Q50: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ituation of household	1	Dissatisfied	
			10	Satisfied	
	통계 변수	정치 관심	Q199: Interest in politics	1	Very interested
				4	Not at all interested
부정 부패 인식		Q112: Perceptions of corruption in the country	1	There is no corruption in this country	
			10	There is abundant corruption in this country	
이주민 문제		Q34: Employers should give priority to people than immigrants	1	Agree strongly	
			5	Disagree strongly	
보수		Q240: Left-right political scale	1	Left	
			10	Right	
여성		Q260: Sex	1	Male	
			2	Female	
연령대		Q261: Age	17	The lowest years old	
			103	The highest years old	

구분	변수명	사용 설문	변수값	측정
	대학교 이상	Q275: Highest educational level	0	Early childhood education
			1	Primary education
			2	Lower secondary education
			3	Upper secondary education
			4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5	Short-cycle tertiary education
			6	Bachelor or equivalent
			7	Master or equivalent
			8	Doctoral or equivalent
	결혼 동거	Q273: Marital status	1	Married
			2	Living together as married
			3	Divorced
			4	Separated
			5	Widowed
6			Single	

〈부록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명	관측치 ⁵⁾	평균/비율 (연령대)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부신뢰	37,083	2.144	0.81	1	4
행정부신뢰	37,625	2.23	0.92	1	4
입법부신뢰	37,304	2.06	0.85	1	4
능력주의	37,852	6.50	2.76	1	10
소득수준	37,064	4.89	2.15	1	10
가계재정 만족도	38,138	6.33	2.36	1	19
정치관심	38,078	2.37	0.95	1	4
부정부패 인식	37,745	7.68	2.34	1	10
이주민 문제	28,031	3.56	1.2	1	5
보수	33,832	5.55	2.36	1	10
여성	20,117 (여성) 18,310 (남성) 38,427 (총계)	0.52	0.5	0	1
연령대	8,144 (20대 이하) 7,517 (30대) 6,959 (40대) 6,391 (50대) 5,527 (60대) 3,788 (70대 이상)	21.25% 19.61% 18.16% 16.68% 14.42% 9.88%	1.63	1	6
대학교 이상	10,442 (학사 이상) 27,490 (학사 미만) 37,932 (총계)	0.28	0.45	0	1
결혼-동거	24,382 (결혼, 동거) 13,722 (미혼, 이별, 별거, 사별) 38,104 (총계)	0.64	0.48	0	1
로그 GDP	38,466	27.25	1.68	23.43783	30.60039
실업률	38,466	6.56	4.02	2.24	19.29
Gini계수	38,466	36.73	6.85	27.2	47.8

5) 연령대의 경우 각 연령대 별 관측치를 정리하였으며, 더미변수로 만든 여성, 대학교 이상, 결혼-동거의 경우 1에 해당하는 관측치와 0에 해당하는 관측치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부록 4〉 DPI(2020)의 정부이념⁶⁾

국가명	조사 연도	정부여당	정부 이념
그리스	2017	시리자(Syriza)	좌파
네덜란드	2022	자유민주국민당 (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	좌파 (2020)
뉴질랜드	2020	뉴질랜드 노동당 (Labour Party)	좌파
대만	2019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우파
대한민국	2018	더불어민주당 (The Minjoo Party of Korea)	정보없음
독일	2018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좌파
루마니아	2018	무소속	정보없음
말레이시아	2018	통일말레이국민조직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정보없음
멕시코	2018	제도혁명당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중도
몽골	2021	민주당 (Democratic Party)	정보없음 (2020)
미국	2017	공화당 (Republican Party)	우파
브라질	2018	민주운동당 (Partido do Movimento Democrático Brasileiro)	중도
세르비아	2017	세르비아 진보당 (Serbian Progressive Party)	조사되지 않음
아르헨티나	2017	캄비에모스 (Cambiemos)	우파

6) DPI의 데이터는 2020년도까지 자료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조사된 네덜란드와 몽골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두 국가는 2022년까지 집권정당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가명	조사 연도	정부여당	정부 이념
인도네시아	2018	민주항쟁당 (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정보없음
일본	2019	자유민주당 (Liberal Democratic Party)	정보없음
칠레	2018	칠레여 가자 (Let's Go Chile)	정보없음
캐나다	2020	캐나다자유당 (Liberal Party of Canada)	좌파
콜롬비아	2018	민주중도당 Democratic Center	우파
키프로스	2019	민주집회당 (Democratic Rally)	우파
튀니지	2019	튀니지의 소리 (Call for Tunisia)	중도
페루	2018	변화를 위한 페루인 (Peruanos Por el Cambio)	중도
필리핀	2019	필리핀 민주당-인민의 힘 (Partido Demokratiko Pilipino-Lakas ng Bayan)	좌파
호주	2018	오스트레일리아 자유당 (Liberal Party of Australia)	우파

〈부록 5〉 DPI 정부이념 추가 모델

	정부이념 모형	정부이념 모형
고정효과		
개인수준		
능력주의	0.012*** (0.002)	0.040*** (0.005)
소득수준	0.005* (0.002)	0.030*** (0.006)
능력주의*소득수준		-0.004*** (0.001)
가계재정 만족도	0.033*** (0.002)	0.043*** (0.005)
능력주의*가계재정 만족도		-0.002* (0.001)
부정부패 인식	-0.093*** (0.002)	-0.093*** (0.002)
정치관심	0.079*** (0.005)	0.079*** (0.005)
이주민 문제	-0.029*** (0.004)	-0.028*** (0.004)
보수	0.017*** (0.002)	0.016*** (0.002)
여성	0.036*** (0.009)	0.035*** (0.009)
연령대	0.009** (0.003)	0.009** (0.003)
결혼-동거	0.013 (0.009)	0.013 (0.009)
대학이상	-0.002 (0.011)	-0.001 (0.011)

	정부이념 모형	정부이념 모형
국가수준		
로그 GDP	0.043 (0.044)	0.043 (0.044)
실업률	-0.004 (0.009)	-0.004 (0.009)
Gini 계수	-0.021 (0.013)	-0.021 (0.013)
정부이념	0.030 (0.070)	0.029 (0.070)
상수	1.199 (1.343)	1.031 (1.347)
임의효과		
개인수준 분산	0.424 (0.004)	0.423 (0.004)
국가수준 분산	0.035 (0.012)	0.035 (0.012)
Prob > ch	0.00	0.00
로그우도값	-21749.284	-21727.988
개인수준 관측값	21,925	21,925
집단수준 관측값	16	16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탈서구중심주의 비교정치이론 방법론의 모색 : 강정인의 ‘상사성’ 비유와 ‘개념적 중립성’*

이관후 | 서강대학교

| 국문요약 |

이 글은 비교정치이론 방법론에서 강정인이 제시한 ‘상사성’의 비유를 ‘개념적 중립성’으로 재이론화 하려는 시도다. 강정인은 달마이어가 제시한 ‘횡단성’과 ‘교차문화적 대화’라는 방법론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대안을 오랫동안 모색해왔다. 그 과정에서 다문명간 대화에서 공간 뿐 아니라 시간적 영역의 확장, 비교 및 매개 개념의 맥락성과 설명력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강정인은 탈서구중심주의의 4가지 전략 중 역전 및 하이브리드 전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생물학의 ‘상사성’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것은 ‘발생학적 동질성’이 아니라 ‘기능적 유사성’을 대화와 비교의 매개로 삼는 것이며, 이 글은 이러한 개념적 중립성을 갖춘 사례로 ‘정당성’과 ‘대표’ 개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탈서구중심주의, 비교정치이론, 교차문화적 대화, 횡단성, 상사성, 개념적 중립성

* 이 제목은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이 제안해 준 것이다. 심사 후 수정과정에서 세분 심사위원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I. 문제 제기: 비교정치이론의 방법론적 난제

근대 사회과학에서 비교정치연구(comparative political studies)는 정치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비교정치학’은 고대로부터 연원을 따지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근대에서는 마키아벨리나 몽테스키외 등의 저작에서 그 전통을 찾아야 하겠지만, 보다 가깝게는 19세기 후반부터 활발해진 각 나라의 헌법과 정치제도에 대한 비교, 20세기에 등장한 행태주의와 근대화 이론, 포스트 행태주의 연구 등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글로벌 시대의 출현과 함께 비교문화 연구, 서발턴 연구, 비교종교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교 연구가 정치학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 ‘비교정치이론(comparative political theory)’, 혹은 ‘비교정치철학’ comparative political philosophy)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연구 분야(이하 CPT)가 등장했다.¹⁾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CPT에서는 특히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질문이 제기되면서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연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March 2009, 531; Williams and Warren 2014, 48). 또한 1990년대 이후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 경제발전이 두드러진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유교와 서양 정치사상을 비교하는 것은 아시아권 CPT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CPT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외부적 변수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세기 후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최근의 정체, 냉전 이후 21세기에 들어 본격화된 미·중 패권 경쟁 같은 요소들이다. 아시아적 가치 논쟁과 유교 민주주의 담론, 중국식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론적 탐구들의 부침은 CPT가 경기변동이나 국제정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다른 하나는 학문 내적 변수로, CPT의 연구방

1) 비교정치이론(comparative political theory)은 제도와 문화, 철학과 사상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그에 따라 학자들 사이에 다소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통칭하여 ‘CPT’로 약칭하고자 한다.

법과 관련된 문제다. CPT에서 제기되는 주장들은 실령 그것이 과거의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도, 많은 경우 현재의 정치와 경제, 문화적 우위성 등과 관련된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CPT 연구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관점들은 방법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국가나 이념, 문명의 차원에서 권력 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CPT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내부적 요인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과거 ‘아시아적 가치 논쟁(Asian value debate)’에서도 잘 드러났다. 당시 논쟁에 참여한 주체들은 동서양과 문명적·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적·문화적 가치에 대해 입장을 달리했는데, 사실 이러한 입장은 각 주체들의 정치적 목표 및 전략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헌팅턴, 리관유, 김대중이 유교와 자유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보여준 태도는, 미국·싱가포르·한국에서 각 주체들이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1993년 사무엘 헌팅턴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그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와 국제적 부상을 인정하면서도, 유교 문화권의 문명적 특성으로 인해 서구 문명과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지속되면서 국제적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1년 후인 1994년, 리관유 싱가포르 총리는 동일한 저널에 「문화는 운명(Culture is Destiny)」을 실어 헌팅턴의 견해를 비판했다. 리관유 이외에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다른 아시아 정치 지도자들 역시 문화 상대주의에 기초하여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했다. 그들은 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제도와 정치적 이념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정당하며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아시아 문화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 사회에서 여러 부정적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Park and Shin 2006. 341).

그러자 김대중은 같은 해에 동일한 저널에 실린 「문화는 운명인가(Is Culture

Destiny?)」에서 이를 재반박했다. 리관유의 주장에 대해 그는, 민주주의가 아시아 국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아시아 문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수많은 자발적 민주화 운동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또한 김대중은 ‘로크 이전(Long before Locke)’이라는 장에서 맹자(孟子)의 역성혁명론을 예로 들며, 민주주의와 유교 정치이론의 친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동학운동 또한 그러한 정치적 전통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라고 불린 이 사건에서,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아시아적 가치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반면, 아시아에서 서구식 민주화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학자와 정치지도자들은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90년대에만 그친 것은 아니다.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 진행된 지 거의 한 세대가 지났지만, 지금도 유교를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는 중국의 학자들과, 유교와 서구민주주의의 접목 가능성을 탐구하는 홍콩과 대만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의 전략적 긴장이 학문적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정치사상을 비교하는 연구들도 이러한 경향성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향성은 CPT의 목적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탈서구중심주의를 통해서 서양에 경도·종속되어 있는 학문적 장과 사고의 체계를 극복함으로써 동양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시도가 존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서양의 시공간적 경계를 넘나들고 허름으로써 정치학 연구에서 보편적 지평을 열고자 하는 목적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연구의 목적에 따른 방법론적 차이가 화해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을 때, 이것이 정치경제적 변수들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정인의 제안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CPT 연구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탈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방법론과 그에 대한 강정인의 평가 등을 살펴보고, 강정인의 미완성 연구에서 제시된 ‘상사성’ 개념을 분석한 뒤, 그 적용 가능성을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것이다.

II. ‘횡단성·교차 문화적 대화’ 개념의 방법론적 진화와 한계

사회과학 연구 중에서 CPT만이 정치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실 대부분의 정치이론이나 사상은 특정한 의도를 갖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와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 다만 그러한 주장이 순전히 정략적·이데올로기적 공방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학문적 논쟁의 필요성과 가치, 일정한 객관성·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CPT에서 그러한 방법론의 하나로 제시된 것은 달마이어(Dallmayr)가 제시한 ‘횡단성(transversality)’과 ‘교차 문화적 대화(cross-cultural dialogue)’ 개념이다. 횡단성은 교차 문화적 대화에서 ‘중심’으로서의 서구라는 매개가 없어도 서로 다른 문화적 영역 사이에서 경험과 가치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인식을 의미하며, 교차 문화적 대화는 각 문화적 영역 간에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에 대한 상호적 대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구의 예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해 ‘낮선 것으로의 선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Dallmayr 2004, 252-4).²⁾

한국에서 CPT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강정인 역시 이 개념들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특히 가타리와 정화열 등이 횡단성 개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화열은 횡단성이 ‘보편으로서의 진리의 투명성 가정에도

2) 간디의 비폭력주의처럼 정치 윤리의 차원에서 비서구의 방법론이 종종 서구의 것들보다 지역적·보편적으로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전하며 서구 근대성에서 진리에 대한 유럽중심적 준칙에 내재한 보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말한다(Jung 2009, 218). 횡단성은 단일한 보편적 정치사상을 부인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변화를 추구하며, 다원성과 소통, 매개를 지향한다. 이처럼 횡단성 개념의 유용성이 분명한 반면, '어떻게 횡단성에 입각한 비교정치사상(철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론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강정인 2013, 37-39).

강정인은 그래서 횡단성의 적용가능한 방법론이 교차문화적 대화이며, 그것이 적절히 활용된 사례로 파레크의 '상호작용적 다문화주의(interactive multiculturalism)'를 제시한다. 파레크는 인도 힌두교의 비폭력 개념을 서구적·기독교적 카리타스와 접목시킨 간디의 사례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존중, 문화 내부의 이질성과 유동성, 상이한 도덕·종교·문화적 전통간의 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강정인은 이 속에서 '확장적으로 진화하는 합의'의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국제적 차원의 대화를 넘어 '교차시간적 대화'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강정인 2013, 49-53).

마치(March) 역시 횡단성과 교차문화적 대화가 경험적 차원에서 서구중심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데서 달마이어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교차문화적 대화에서 더 많은 방법론적 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존의 CPT에서 동·서양의 비교에 대한 과도한 의식이나 집착 자체가 오리엔탈리즘의 징조이며, 이러한 비교에서는 '우리'와 '그들의'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여전히 '비서구에는 서구에 없는 것, 혹은 서구와 다른 것이 있다'는 식의 신비주의나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야 하며, 비서구의 정치사상이 서구 이론과의 비교 없이도 그 자체로 연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마치는 CPT가 지구적 차원의 이론적 논의에 그친다면 CPT가 다루는 국제적 범주와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윤리성과 정당성의 측면에서 이론적, 실천적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고 주장한다. CPT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이론과 실천을 다루며, 이는 단순히 학문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March 2009, 538-565). 따라서 대화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에 머물지 말고,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을 직접적 목표로 해야 한다.

젠코(Jenco) 또한 CPT가 서구와 비서구간의 대화에서 머무른다면 이론적 완결성을 가진 방법론이 되기 어렵다는 데에 동의한다. 젠코는 서구와 비서구라는 공간성을 넘어, 정치사상이 본질적으로 ‘과거와의 항상적인 대화’라는 시간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많은 CPT의 방법론에서 서구 정치사상을 탐구할 때는 서구의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조망하지만, 비서구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는 과거의 전통에만 초점을 맞추는 시공간의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비판한다(Jenco 2016). 이러한 젠코의 주장은 강정인이 ‘교차시간적 대화’라고 부른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두 사람의 주장에 따라 정치사상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시간적 영역을 추가한다면, 비교의 영역은 서구와 비서구라는 공간적 구분을 넘어서 시간을 포함한 ‘2X2 형식’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것이 대다수 CPT 방법론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다.³⁾

서구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화자들, 곧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사상사의 다양한 이론과 아이디어들이 모두 CPT 연구에서 동등한 대화의 주체가 되는 반면, 비서구에서는 특정한 몇 개의 사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평등한 대화의 주체

3) 한 심사자는 엘 아민의 중요한 연구(El Amine 2016)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CPT 연구자들이 동서양의 이분법을 넘어서자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안에 갇혀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니 필자는 엘 아민이 대안적 연구관점으로 제시하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근대성’과 ‘주권자로서 근대 국가의 보편성’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것은 동서양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장점을 갖지만, 동시에 ‘차이’를 무화시킴으로써 기존 개념들의 억압성을 가리기도 한다. 엘 아민이 제시하는 대안적 개념이 현정주의, 인권,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에 대한 논의에는 별도의 글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독자로서는 엘 아민의 현정주의, 민주주의와 이 글의 후반부에서 필자가 제시한 정당성과 대표 개념 중에서 어떤 것들이 CPT에 더 적절한 주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로 인식되지 못한다. CPT에서 전 지구적 대화의 주체로 ‘대상화’ 된 비서구는 근현대의 비서구가 아니라 과거 혹은 그것과 연관된 현재적 유산의 일부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CPT에서 ‘민주화’라는 주제로 한국과 서구 사이의 교차 문화적 대화를 시도할 때, 우리는 대체로 서구 민주주의에서 그리스 전통과 현대 민주주의의 다양한 이론들을 모두 활용한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전통 사상(주로 유교)과 그 특수성이 현대에 미친 긍정적 기여나 부정적 영향 중 한두 가지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⁴⁾ 또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 근현대의 다층적인 사상적 변조와 발전상을 면밀히 살펴보기보다는, 민주주의와 관련한 몇 가지 지표나 민주화의 역사에서 특정한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예외’나 ‘결핍’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⁵⁾ 이런 연구들에서는 현대의 한국인들이 만들어 낸 것을, 서양의 과거와 현재, 동양의 과거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한국의 민주화는 예외적인 것이고, 이에 영향을 미친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서구의 과거나 현재의 개념과 비교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오류는 CPT 분야의 연구자들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상호 공유되기 어려운 탈맥락적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한국적 민주주의(Korean democracy, Korean style democracy)’라는 용어가 이론적으로 설 자리가 많지 않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에서 순수하게 객관적·학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박정희가 독재정권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한 이래로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도 그러한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이 용어는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특정한 역

4) 유교와 한국 민주주의를 접합시키고 있는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5) 비교정치연구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왜곡’, ‘결핍’, ‘과잉’, ‘불구화’ 등으로 묘사하는 연구들 다수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성을 담보한 독특한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CPT 연구자가 이 용어를 국제적인 학문의 장에서 별도의 개념화 없이 사용한다면, 우리는 용어 사용의 부적절함은 물론, 비교 연구 이전에 한국정치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대해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와 젠코의 지적대로, 공간성을 위주로 한 비교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정작 대화와 횡단의 주체이나 배경이 되는 비서구 사회에 대한 이해와 시간성(역사성)을 무시한 채 압축적 도식화를 추구한 결과다. 과연 특정한 시간대를 임의로 선택하여 ‘미국(유럽)의 민주주의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부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다른 문화권의 민주주의와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횡단성과 교차문화적 대화가 CPT의 방법론에서 하나의 전기를 만들어 낸 것은 분명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여전히 일정한 한계도 갖고 있다. 대화의 주체와 주제, 그것을 인지하고 구성하는 방식, 그것을 다루는 범주와 이해의 수준이 서구와 비서구간에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념과 비교의 기준이 서구에서 결정되고 확립되며, 비서구인은 그 기준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간단한 비유로 말하자면, CPT를 논하는 ‘국제’ 회의에서 참여자들이 영어로 말할 때 화자들은 항상 영어로 된 개념만을 사용하는 것이다.⁶⁾ 이것은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지폐가 미국 달러를 통해서만 교환되는 것과 같다.⁷⁾ 이러한 상황에서는 달러로 호환이 어려운 통화가 시장에서 기각되듯이, 영어로의 호환 가능성이 적은 개념들은 교차문화적 대화에서조차 쉽게 사장된다. 즉, 비영어권 정치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요소들이라 할지라도, 영어적 맥락으로 옮기기 어렵거나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많은 개념들은 교차 문화적 대화에서 인지되지 않거나

6) 우리는 이 ‘국제’ 회의를 ‘영어로 하는 회의’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 회의에서 공통되는 언어는 대부분 영어다.

7) 이것은 강정인이 ‘횡단성’과 ‘교차 문화적 대화’를 설명하면서 자주 활용했던 비유다.

무시되기 쉽다.⁸⁾

반면 영어권에서 발전된 개념들은 보다 쉽게 ‘횡단성’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유교는 항상 그것이 ‘민주주의와 자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검토되는 경향이 있다. 이 질문이 편향된 이유는, CPT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족공동체를 강화하고 인간의 선한 본성에 기여하는가?’를 거의 묻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결국 시간성과 공간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에서 진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개념과 비교의 기준이 서구에서 결정되고 확립된다는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비원초성(non-indigenusness)’이야말로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 대한 CPT 연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CPT 연구는 여전히 ‘방법론적 전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강정인의 미완성 연구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II. 강정인의 전략적 탈출구와 방법론적 상상

강정인은 90년대 이후 오랫동안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CPT를 연구해왔다. 특히 방법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2천 년대에 들어서 일정한 체계를 갖추는데 성공했다. 강정인(2004)에 따르면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동화(또는 통합) 전략, (2) 역전(또는 반대) 전략, (3) 하이브리드(혼합) 전략, (4) 해체 전략.

8) 물론 CPT가 속해 있는 ‘정치학’이라고 불리는 학문 영역 자체가 근대 서구에서 발전해왔고, 여전히 강한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치적 이상과 가치 대부분이 서구에서 발견되거나 (재)발명된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합의한 정치적 가치인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인권 등의 가치가 번역과 수용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확립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이 공동체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화적(통합) 전략은 주변이 중심의 핵심적인 제도와 실천, 가치 및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편성을 획득하고 우월성 공유하는 전략이다. 역전 전략은 중심과 주변 사이에 존재하는 제도, 관행, 가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동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차이에 대한 평가와 의미를 뒤집어서 비정상이나 열등하다고 평가받는 요소를 정상이나 우월성으로 바꾸는 전략이다. 혼합 전략은 중심과 주변 모두에서 특정한 긍정적 요소를 선택하고 혼합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해체적 전략은 중심과 주변의 분할, 또는 분할을 가능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대립적 차이를 해체함으로써 중심주의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김대중의 전략과 현재의 홍콩·대만 학자들의 입장은 동화적, 또는 혼합 전략에 가깝고, 리관유나 다니엘 벨, 중국의 주류학자들이 가진 입장은 역전 전략에 가깝다. 그리고 해체를 제외한 나머지 전략들은 모두 교차문화적 대화의 매개를 필요로 한다. 달리 말하면, 횡단성에서 ‘낯선 것’에 해당하는 실체가 요구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맞부딪친 방법론의 장벽이다. 즉, 비교의 기준이 되는 개념 설정의 중립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정인은 ‘상동기관(homologous organ)’과 ‘상사기관(analogous organ)’이라는 생물학적 은유를 통해 그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강정인 2013).⁹⁾ 근대 생물학은 초기에 주로 상동성, 곧 유사한 기관의 발생학적 기원과 그 변태에 초점을 맞췄다. ‘인간의 손에 (발생학적으로) 해당하는 기관을 고래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인간의 손과 고래의 앞 지느러미는 왜 그렇게 다르게 진화했는가?’와 같은 질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생물학의 상동성을 CPT에 관한 질문들에 투영한다면, ‘서구에서 발전된 특정한 정치적 개념(인간의 손)이 비서구

9) 강정인이 이 생물학적 비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강정인 2013, 53-58)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다. 또한 다른 곳에서 이 비유를 이론적으로 더 발전시킨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 설명 부분에서 참고문헌에 대한 주석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 이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본인 스스로 이 비유가 적절한지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후속 연구가 중단되어 안타깝다.

의 다른 개념(고래의 앞지느러미)과 같은 것인가?', '그것들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이 CPT 연구에서 인간의 손에 비유될 만한 개념은 '민주주의' 또는 '자유'일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초기 CPT 연구에서는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핵심적이었다. 예를 들어, 드 베리(de Barry)의 질문은 '유교에 자유와 인권이 존재하는가?'였다(de Barry 1983, 1998).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결론은 주로 '서구에서 발견된 자유(인권)이 비서구에도 있다(없다)', 혹은 '비서구의 과거에 존재한 자유의 초기 개념(배아 초기의 원형기관)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서구의 자유(인간의 손)로 발전하지 못하고 다른 형태(고래의 지느러미)로 변태되었다'는 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질문들은 추후 CPT 연구에서 논란이 될 만한 논쟁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서구(인간)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역시 사실이다.

강정인이 제시한 생물학적 은유의 맥락에서 볼 때, 동화 전략은 확실히 상동성의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역전 전략이나 하이브리드 전략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상동성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를테면, 물속에서 헤엄을 칠 때는 손에 비해서 확실히 지느러미가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¹⁰⁾

생물학의 방법론은 발생 기원의 상동성(homology)에서 발전과정에서 기능의 상사성(analogy)에 대한 연구, 곧 상동기관에서 상사기관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사성에서는 발생계통의 공통성이나 차이점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유전적 기원이 전혀 다른 기관도 환경적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상동성이 '발생학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사성은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10) 물론 지상의 세계와 물속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종종 완전히 다른 어떤 세계를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로 이런 사고의 결과가 반드시 전체주의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권위주의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처럼 맹목적인 체제 옹호론이나 자민족중심주의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신유가 연구 집단(Neo-Confucian study group)'이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조경란(2013)을 참조.

과학계에서 점점 더 많은 생물학자들은 상사성이 상동성보다 진화에 대해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즉, 과거에는 상동성에 비중을 두면서, 박쥐는 새와 다르게 오히려 쥐에 가깝다는 점을 과학적 사실로 강조했다면, 이제는 박쥐가 깃털이 달린 날개는 아니지만 얇게 퍼진 피부를 통해서 어쨌든 새처럼 날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는 것이다(강정인 2013). ‘비행’을 하는 데에 반드시 ‘날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박쥐는 발생학적 분류로는 쥐에 가깝지만, 날아다니는 점에서는 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발생학적 기원’과 ‘기능적 유사성’ 중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사성에 초점을 맞춰서 앞서 물었던 CPT의 질문을 바꾸어 본다면, ‘인간의 앞발(손이 아니라!)과 코끼리의 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인간의 앞발과 코끼리의 코는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진화했는가?’와 같은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상동성에 기반을 둔 질문들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횡단성을 보여준다.

IV. 상사성과 개념적 중립성(conceptual neutrality)

강정인이 제시한 상사성의 비유는 교차 문화적 대화를 할 때 서구 발생 기원의 매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떤 성격의 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상상력의 출발점이 된다. 다만 이 비유를 CPT에서 어떻게 재개념화·재이론화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¹¹⁾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강정인의 4가지 전략으로 돌아가 상사성의 문제를 고민해보자.

강정인(2004)이 지적하듯이 동화 전략과 역전 전략은 실천 전략으로서 명쾌해 보이지만, 논리적 단순성만큼 서구나 비서구의 특정 입장에서 우월성을 전제하

11) 이와 관련한 강정인의 후속 연구는 불행한 사고로 인해 진행되기 어렵게 되었다.

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서구중심주의는 헤게모니 경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교차문화적, 상호적 대화는 형식적 제스처에 그치고 만다. 그 대안으로서의 해체 전략은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인간들이 세계 시민보다는 특정한 공동체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실재의 세계에서 실현되기 쉽다.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넘어서면 곤장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충돌이 예정되어 있다는 헨팅턴의 주장을 재삼 떠올리지 않더라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명 간의 충돌을 근본적으로 해소할만한 전 인류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대안 세계’의 모델이 분명하지 않다면 해체 전략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은 상호성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전략이다. 그러나 이 전략에서도 교차 문화적 대화의 주체들이 비교와 소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횡단성의 차원에서 상호 호환이 가능한 ‘상사기관’에 해당하는 방법론적 실체에 해당하는 개념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이 개념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CPT 이론에서 일부가 제시된 바 있다. 윌리엄스와 워렌에 따르면, CPT에서 방법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시간적으로도 특정한 역사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넓은 범위의 과거·현재·미래 시제에 존재하리라고 예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미래의 정치적 상상까지도 구성할 수 있는 유용성이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다(Williams and Warren 2014, 48).

마치는 ‘횡단성’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CPT를 방법론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벽이, 한편으로는 비서구에 대한 편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상대주의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맥락적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와 ‘설명적 (재)해석(explanatory-(re)interpretative)’을 제시한다. 맥락적 이해란 개념의 발생론적 기원과 본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차원에서 유연하게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고, 설명적 (재)해석은 그러한 개념을 통해

서 기존에 설명되지 못했던 것들이 설명되거나 재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는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역사적 텍스트를 해석할 때, 비교정치 이론이 가진 방법론의 장점을 CPT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March 2009, 549).

이러한 맥락적 이해를 강정인의 상사성 비유를 통해 재음미해보면, 발생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공통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CPT에서 동서양의 다양한 시·공간에서 공통된 기능적 개념들을 포착해 내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 된다. 이것은 특정한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인류 전체의 정치공동체에서 유용한 개념으로서, 비서구에 대한 편견과 완전한 상대주의 사이에 놓인다. 상사성, 곧 기능에 주목하는 이러한 개념들의 속성은 다양한 시공간에서 중립적이며 보편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CPT에서 수행하는 비교의 기준이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으로 ‘개념적 중립성(conceptual neutrality)’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개념적 중립성이란 베버가 ‘가치중립성(Wertfreiheit, value-neutrality)’이라고 부른 것에서 일부는 유비되고 일부는 대조된다.¹²⁾ 베버의 가치중립성은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발견된 사실들이라도 도덕적 가치판단을 피할 수 없으며, 반대로 우리가 도덕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회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것은 과학적 사실과 달리 보편적일 수 없고 특정한 시공간에서만 유효하다’는 두 가지 진술의 쌍으로 이루어져있다(Bisztray 1987, 42). 이를 개념적 중립성에 대입해 본다면, ‘동서양의 여러 시공간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발견된 개념들은 도덕적 가치판단을 피할 수 없지만, 그 판단의 기준은 선형적으로 특정한 시공간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으로 대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개념적 중립성은, CPT에서 대화와 비교의 매개가 되는 개념이 가치, 지리, 역사, 시간적 측면에서 가치중립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적 중립은 상호성과 평등성,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며, 문화적 편견과

12) 한 심사위원이 이 글에서 주장하는 개념적 중립성이 베버의 가치중립성과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다.

우월성(열등성), 발생학적 원초성 등을 극복한다. 즉, 특정한 지역과 시간대에서 동일한 개념이 존재 혹은 부존재하거나, 우선적으로 출현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대신 사회 혹은 공동체가 발생·유지·존속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요소들 간의 유비와 비교가 이루어진다.

이 개념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상사기관을 설명하면서 예로 들었던 박쥐와 새의 비유로 돌아가 보자. 박쥐는 발생학적으로 새가 아니며, 박쥐는 새처럼 날지 않는다. 그러나 박쥐도 날고 새도 난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난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박쥐는 포유류, 새는 조류라는 분류가 아니라 둘 다 '날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날개(wings)'의 존재라는 기준은 깃털을 가진 새의 존재에 기준을 둔 것이지만, '난다(flying)'는 기능은 중립적이다. 이처럼 '날개'와 '난다'는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민주주의, 자유, 인권, 평등과 같은 보편성을 가진 개념이 '날개'처럼 존재에 해당하는 것인지, '난다'는 개념처럼 실제적으로 구현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능하다.

우리가 박쥐와 새를 구분하면서도 동등한 생명체로 인지하는 한, 이 논쟁은 극단적인 상대주의로 귀결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쥐가 새가 아니라는 사실이, 박쥐에 대한 모욕이나 결핍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박쥐가 새처럼 날지 않아도 박쥐의 품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양자의 비교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나는 방법과 날 때 사용하는 기관은 다르지만 모두 날고 있는 점이다. 이제 '난다'는 행위를 추상화하여 '비행(flight)'으로 개념화 해보자. 이제 이 중립적 개념은 상사성을 통해 동등한 상호적 비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¹³⁾

13) 이러한 상사성의 비유에 대해 한 심사자는 “정치적 개념들은 다양한 문화권을 넘나들며 서로 영향을 주는데 반하여, 상사기관에서 설명되는 발생학적 차이와 기능적 유사성은 서로 독립적인 사건에 해당한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주셨다. 예를 들어, 이것은 박쥐가 새가 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얽은 막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즉, 인간들의 정치공동체에서는 상호적 영향이 존재하지만 상사기관의 경우 그러한 영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생물학의 진화가 것처럼 ‘용불용설’의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고 돌연변이와 우연을 통해서 ‘적자생존’이 일어났더라도, 그 과정은 또한 ‘긴 점프를 쉽게 해서 새로부터 먹이지 않거나 새와 먹이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비행’에 해당하는 중립적인 정치적 개념을 찾는 일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CPT에서 이러한 개념적 중립성은 비교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점에 동양과 서양의 여러 문명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다양한 정치 공동체에서 모두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을 때 충족된다.

예를 들어, ‘정당성(legitimacy)’ 개념은 근대 서구에서 발견되고 발전된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와 달리 가치, 지리, 역사에서 개념적 중립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당성은 정치체제나 정부형태, 어떤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모든 지배-피지배 관계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대표(representation)’ 개념 역시 정부가 존재한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립적 개념이다. 어떤 정치공동체에서도 대표가 없는 통치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동시에 현대의 민주주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치를 CPT 연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상기관, 곧 중립적 개념의 사례로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V. 개념적 중립성의 사례

1. 정당성

통치(government)란 정치공동체에서 치자와 피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이며, 정당성은 치자와 피치자라는 두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

경쟁을 한, 혹은 키가 큰 식물을 먹기에 적절하게 목이 긴, 혹은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네발 보행을 포기한’ 것처럼, 의식적이지 않지만 상호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근대의 경험을 돌아볼 때, 과연 동서양에서 정치적 개념들이 다양한 문화권을 넘나들며 ‘서로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서구가 제시한 정답을 따라가기에 바빴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키는 필수적인 매개다. 정당성은 통치자가 정치적 힘을 행사할 때 그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부와 맺는 관계에서 발생하며, “정치권력과 복종 사이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개념 (Coicaud 2002, 10)”인 것이다. 그래서 정당성은 권력, 지배, 통치 등과 더불어 정치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본질적인 개념 중 하나다. 정당성은 통치가 존재하는 모든 시공간에서 정부의 존립을 결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근대 서구기원의 개념에 비해 문명적으로 훨씬 넓은 지리적 보편성과 시간적 중립성을 갖는다(이관후 2015).¹⁴⁾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서 권력이나 권위 이외에 정당성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치란 단지 권력투쟁과 동의어가 된다. 또한 지배권력의 물리력만으로는 통치의 존속이 불가능하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한번 자유를 맛본 인간들은 좀처럼 압제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치에 대한 복종의 기반은 법률과 같은 제도나 물리적 힘, 또는 권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정치구성원들 사이에서 형성된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Barker 1990, 4-5). 어떤 통치도 정당성 없이는 유지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정당성은 정치권력의 행사와 그에 대한 동의와 복종을 통해 정치공동체를 발생·유지시키는 유일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거의 모든 통치는 비민주적이었지만, 여기에도 다수의 정당한 통치가 존재했다. 현대에 들어서도 정당성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할 수

14) 강정인은 이상익과 함께 쓴 논문 '동서양 정치사상에 있어서 政治的 正當性의 비교'에서 정당성 개념을 다룬 바가 있다. 이 연구는 동서양에서 정치적 정당성의 핵심 개념은 모두 동의의 여부와 공동선의 추구이며, 이 두 요소는 긴밀하게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주장한다(이상익·강정인 2004). 물론 여기서 CPT의 다양한 비교 기준 중에서 왜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정치사상을 비교했는지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필자는 강정인과 이상익이 서구중심주의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동서양 비교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오면서, 방법론적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중립적 개념을 찾아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은 그들이 진행해 온 연구들을 방법론적으로 재발견하고 정립하는 의미도 갖는다.

는 없다. 비민주적이면서도 정당한 통치는 가능하며 실제로 그러한 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한 체제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체제에 동의하기 때문이지, 다른 선택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 특정 정치공동체에서 충분히 수의 사람들이 비민주적이지만 다른 가치나 이유로 인해서 그 체제가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이 체제에서는 통치가 작동한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정당한 정치체제로 인정하지 않거나, 민주주의보다 더 정당하다고 여기는 정치체제가 나타난다면, 민주주의는 보편성과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정당성과 달리 자기완결적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정치적 정당성 중에서 ‘통치’의 유지·존속에서 더 본질적인 개념은 정당성이다.

이러한 정당성의 본질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시기는 하나의 물리적 힘이나 정치적 권위에 대항하는 새로운 힘이나 권위가 등장하여 생겨난 권력의 공백 상황, 곧 칼 슈미트가 ‘비상 상황’이라고 부르는 순간이다.¹⁵⁾ 새로운 힘이나 권위가 기존의 권력을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통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정당성은 다른 개념들과 달리, 혹은 그것들보다 더 많은 개념적 중립성을 갖는가? 이 개념이 경험적(empirical) 측면과 규범적(normative) 측면에서 모두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기 때문이다.

먼저 정당성의 근거로 가장 직관적인 것은 경험주의적 증거다. 이것은 어떤 통치 체제를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기꺼이 수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정당성의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이다. 비담은 ‘한 정치 공동체에 정당하다고 여겨질 만한 통치의 규칙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정당성의 경험적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는 사람들에게 정치권력을 행사할 이유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권력이 정당한 규칙과 동의의 증거들에 따라 획득되고 행사될

15) 이것은 물리적 힘이나 권력뿐 아니라, 법과 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정당하다고 여겨지던 법이나 제도가 전복되려면, 새로운 법과 제도가 더 많은 ‘정당성’을 획득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는 그것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규칙에 따른다는 행위를 통해서만 실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 우리는 그 통치가 정의롭거나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Beetham 1991, 3-11). 이 관점에 따르면, 하나의 정치 체제는 그것이 정당하다는 사람들의 믿음 여부에 따라 존속이 가능하다(Schaar 1989, 20; Peter 2009, 56-9; 이관후 2015). 또한 이러한 믿음의 존재가 정당성을 구성한다는 보편적 속성에 더하여, 그 믿음이 확인되는 과정이 각 정치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경험주의적·문화상대주의적 특수성도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정치적 정당성은 또한 경험주의적 증거를 넘어 규범적(normative) 근거를 필요로 한다.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인간들은 자신들을 통치하는 권력에 대해 물리적 힘 이외에도 도덕성과 가치지향성을 요구한다. 가령 한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인민들로부터 충분히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 결과뿐 아니라 방법에서도 윤리적으로 옳다는 평가를 받을 때다. 또한 유사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규범적 인식의 차이에 따라, 어떤 사회에서는 충분히 정당한 것으로,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이관후 2015).

그래서 정당성을 구성하는 규범적 요소에서 나타나는 문화 상대주의적 특성은 제도, 권위, 법률 체계에서 모두 나타난다. 먼저 레펠드는 ‘시민들은 그들을 통치하는 특정한 제도를 수용할만한 충분한 이유(good reasons)’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Rehfeld 2005, 16). 주목할 지점은 시민들이 그들에 대한 통치의 정당성에 대해 ‘이유’를 갖는 것과 규범적으로 ‘충분한 이유’를 갖는 것 간의 구분이다(Bellamy and Weale, 2015). 이것은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규범적 요소들에서도 공통적 ‘이유’를 넘어서 ‘충분한 이유’들이 다를 수 있고, 각 공동체들마다 개별 규범들이 갖게 되는 충분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권위’ 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즈는 ‘권위는 거기에 그것을 받아 들일만 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레펠드와 마찬가지로 정당성의 ‘일반적인 이유’들과 ‘보다 나은, 충분한, 최상의, 결정적인, 타당한, 주요한’ 이유들을 구분한다(Raz 1986, 29-54). 법학자인 하트는 “법을

포함한 실제적 권위들의 역할은 사람들이 권위에 복종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확정하는 것”이라면서, ‘충분한 이유’라는 개념이 그러한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Hart 2012, 54-6). 이처럼 정당성을 구성하는 규범적 요소들 역시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정당성의 의미와 조건, 함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민의 의사(people's mind)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정당성 문제의 핵심인, 지배와 복종의 주체라는 개념은 언제나 전복가능하고 또 전복되어 왔다. 통치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배와 복종, 그리고 그 두 행위의 주체가 경험적, 규범적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지만, 이 모든 개념들의 내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거기에는 공통된 개념(concept)이 있을 뿐, 이 개념들에 대한 해석(conceptions)은 늘 상대적이며, 결국 우리는 정치적 정당성에 대해 관계론적 정의를 통해 그 틀(frame)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내용(contents)을 확정할 수 없다. 이것을 정당성이란 보편적 개념이 갖는 주체와 근거에 대한 불확정성의 원리(principle of uncertainty)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이관후 2015). 그리고 바로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정당성의 개념적 중립성을 가능하게 한다.

요약하자면, 정당성은 동의와 복종을 통해서 통치가 발생·유지되는 모든 곳에서 필연적 개념이면서, 경험적·규범적 차원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 근거들은 정당성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적 규범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시공간의 변화에 따른 지배와 복종의 주체들이 갖는 관계가 중요하며, 이 관계의 본질은 불확정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인민의 의사가 정당성의 핵심인 이상, 그 개념을 충족시키는 내용은 사전에 규정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당성은 다른 개념들에 비교해서 과거와 현재, 동서양이라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개념적 중립성의 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2. 대표

민주주의는 현재 지구상에서 정치적으로 ‘유일한 게임’으로 인정받는 보편성을 지닌다. 그러나 CPT의 관점, 특히 상동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되었다가 근대 서구에서 다시 재발견 혹은 새롭게 창안된 사상이자 제도다. 따라서 역사적·지리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개념은 아니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 형태를 설명할 때, ‘자유’나 ‘사회’와 같은 수식어보다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 개념은 대표제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일 것이다.¹⁶⁾ 그래서 현대의 정치체제는 대표제와 민주주의의 결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민주주의’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대표’를 중립적 개념의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개념을 가치, 지리, 역사의 중립성 측면에서 검토하되, 대표 개념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대표(제)’를 통한 정치의 기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역사적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두 가지는 각각 유럽과 미국의 독창적 발명품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이 관점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표’ 역시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서구의

16) ‘대의민주주의’는 ‘representative democracy’의 번역 용어로 ‘대표제(representation)’와 ‘민주주의(democracy)’의 결합이다. 그런데 그 번역어로는 ‘대표제 민주주의’나 ‘대표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나아가 ‘대표제’를 ‘대의제’로 쓰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우리말에서 ‘대표(代表)’라는 용어는 대표자의 역할에 대해 순전한 대리에서 완전한 자율 사이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대의(代議)’는 대표제나 대표자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 의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용어의 번역 기원은 19세기 후반 일본이다. 1875년 전후에 등장한 일본 번역어 ‘대의’는 1884년 <한성순보>를 통해 한국에 수입되었다. ‘대의’라는 개념에서는 대표되는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대표자들이 의논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맥락이 강하다. 이 논의에 참여하는 대표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어떤 사람들이다. ‘representative democracy’가 ‘대의민주주의’로 번역될 때에는 이러한 함의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이관후 2016a).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표제의 본래적인 개념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대표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개념적 중립성을 갖추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글에서 ‘대표’가 시공간적으로 보다 보편적인 상상성을 보여준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먼저 앞의 두 입장을 살펴보자.

현대 대표(제) 연구의 선구자인 한나 피트킨(Pitkin, 1967)에 따르면 대표제 정치체제는 근대 유럽에서 기원한다. 피트킨은 현재 통용되는 정치적 대표의 개념과 체계는 13~17세기 사이에 중세 유럽에서 대부분 탄생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종교적 권위인 교황권이 현대 정치의 대표제의 기원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교황이 '기독교 신자(들)' 또는 '기독교 공동체'인 '에클레시아(Ecclesia)'를 대표한다는 개념이 수백 년에 걸쳐 정립되었다. 교황들은 이 '종교적 대표' 개념을 곧바로 모든 인류의 세속 사회에 대한 '세속적 대표' 개념으로 확장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에클레시아뿐 아니라 세속 사회인 '레지나(Regina)'의 유일하고 정당한 대표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래서 1509년에 "represent"라는 동사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확실히 종교적으로 신비로운 관념을 함축하고 있었다(Pitkin 1967, 241-4).

이러한 종교적 맥락의 대표 개념은 '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인 하위 종교 공동체들을 대표하는 성직자의 계층 구조를 통해서 확대되었고, 촘촘하게 조직되었다. 이렇게 '대표'의 개념은 교황을 넘어서, 일정한 단위를 통해 구성된 신자들의 단위를 개별 성직자들이 대표한다는 인식으로 확장되었다. 16세기 초의 유럽 봉건제에서는 종교적 단위들이 정치 및 사회 단위와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모든 신자들은 일정한 종교적 단위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단위의 종교적 대표자는 동시에 정치사회적으로 그 집단의 사람들을 대표하게 되었다(Finer 1999, 1029-31; 이관후 2016b).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 속에서 종교적 대표 개념이 점차 세속화되면서, 한 집단의 사람들을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개념이 보다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교황권으로부터 세속적 대표성을 쟁취했던 왕권은 대표의 신성성을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봉건 귀족들의 임의기구였던 '의회'들이 이

세속적 빈틈을 파고들어 대표 개념의 매개체로서 지위를 획득하기 시작했다. 의회 기구가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했던 영국에서는, 17세기 초에 입법자들이 자신이 속한 정치 공동체의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관념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 사이의 관계적 개념이 성립한 것이다(Pitkin 1967, 246-7).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표 개념은 종교적·신화적 차원에서 정치적·실천적 차원으로 변화해나갔다.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 스키너는 르네상스 전후에 일어난 로마 정치사상의 부활과 중세 교부철학의 결합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관여할 수 있으며, 직접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대표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로마법적 관념이 중세적 종교 관념과 결합한 것이다(Skinner 2004).¹⁷⁾ 이론적으로 본다면 근현대의 정치적 대표 개념은 이러한 주장을 과감하게 펼친 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로부터 출발하여, 세속적 주권론을 확립한 장 보댕을 거쳐, 집단으로서의 인민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주권체라는 이론적 전기를 마련한 홉스를 통해 형성되어 갔다.

피트킨은 근대의 대표(제)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명’되었다고 본다. 대표의 기원에 대한 피트킨의 해석은 현대 대표제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직접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설명이지만, 동시에 대표(제)라는 정치 체계는 서구의 중세가 로마라는 고대를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발명되었다는 ‘유럽 중심적’ 설명이기도 하다. 이는 근대의 정치적 ‘대표’ 개념이 다른 지역에서는 출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유럽 이외에서 대표제 정치체제와 대표제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은 유럽의 지적 세례와 제도적 이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두 번째 설명은 이러한 ‘유럽기원설’에 대한 반박이면서 파생이기도 한 ‘미국기원설’이다. 미국의 역사학자 고든 우드(Gordon Wood)는 미국이 영국의 지배

17) 스키너의 관심은 ‘대표’보다는 교황권과 황제권(군주권)의 대립과, 르네상스의 세례를 받은 도시들의 ‘자유’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 모든 이야기는 ‘대표’와 또한 연결된다.

에서 독립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첨과 자치에 의한 ‘순수 민주주의 (pure democracy)’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대표제 민주주의’를 발명해낸 점이라고 주장한다. 즉, 민주주의와 대표제의 결합이라는 근대 대표제 정치체제의 출현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의 건국과 제헌헌법이라는 것이다(Wood 2008, 69-71). 이것은 유럽에서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했던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실현되었다는 토크빌의 미국예외주의적 입장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자유와 평등의 습속과 더불어 ‘대표제’라는 아이디어와 제도가 핵심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역사적 선후를 따져 본다면, 우드의 말대로 미국이 왕이 없는 대표제 정부에 기초한 헌법을 만들었을 때, 영국은 여전히 왕권과 귀족원에 더해 극히 소수의 유권자가 뽑은 평민원이 결합된 중세적 의회제가 유지되고 있었고, 프랑스는 아직 혁명 전이었다. 그래서 우드는 중세적 계급에 따른 세습 지배계급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로만 정부가 구성되는 ‘대표제 민주주의’ 체제가 미국에서 처음 탄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체제가 곧이어 인류 역사상 가장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체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이관후 2016b).

이 주장은 확실히 미국 정치사상에 대한 유럽 대표제 전통의 영향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유럽의 영향은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 잠재적 조건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체제인 대표제 민주주의는 기존의 대표제에 민주주의를 더하려는 유럽인들의 투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인류사에 존재하지 않았다가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에 의해 발명된 독특한 체제다. 우드에 따르면, ‘앙시앙 레짐’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이라는 신세계가 없었다면, 민주주의라는 환상적 개념은 대표제와 만나지 못하고 고대 그리스의 전설로만 남았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창조적 설계자들이 발명한 ‘대표제 민주주의’가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선거권 확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과 세계는 대표제 민주주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위의 두 주장 중에서 무엇이 역사적 진실에 가까운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다만 어느 편이든 대표제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먼저 발생한 개

넘이며, 다른 세계들이 그 영향권 하에서 그것의 원형을 닮아가는 중이라는 사실, 혹은 닮아가야 한다는 당위를 넘어서기는 어렵다. 즉, 상동성의 원형을 탐구하고 있는 이 주장들은 CPT의 방법론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표제의 기원과 본질적 성격에 대해 대안적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는 모든 정치체제 혹은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표제이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거나, 다양한 다른 정치체제와 결합하여 나타난다는 견해다.

역사가 사무엘 피너는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거의 모든 정부를 검토한 뒤, 이 정부들을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대표제 정부(representative government)’를 언급한다. 그는 이 정부 형태가 근대에 들어서 정교한 제도의 수준으로 자리 잡은 것은 서구지만, 대표라는 관념은 어디에나 있었다고 본다(Finer 1999). 즉, 대표라는 개념, 대표제 정부라는 관념은, 그 단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 시공간에서 존재했다는 것이다. 가령 ‘대표’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 그리스에서도 폴리스의 외교사절인 ‘대사(ambassador)’는 존재했다. 만약 대표라는 관념이 없다면,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채택한 아테네의 외교사절이 폴리스를 대표하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의 합법성과 권위, 정당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데 피트킨은 동의한다(Pitkin 1967 2-3; 이관후 2016b).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유럽 이외의 곳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 개념을 종교 영역에서 정치 영역으로, 특히 누군가를 형식적으로 ‘대표(standing for)’하는 것에서 누군가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것(acting for)’으로 발전되었다고 이해한다면, 유가 정치사상은 그것이 시작되는 순간에서부터 ‘대표’의 거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대표의 정치적 정당성을 대표자의 자질에 대한 피대표자들의 동의, 수용, 평가와 만족도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교체할 수 있는 저항권의 포함 여부로까지 확장하더라도 유가 정치 이론은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우선 공자의 군주유덕자론(君主有德者論)과 맹자의 유덕자군주론(有德者君主

論)은 대표자의 자질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다. 민심을 곧 천명으로 해석하는 맹자의 주장은 대표와 위임의 과정과 주체에 대한 해석이며, 민유방본(民惟邦本), 민귀군경(民貴君輕)의 정치사상은 ‘대표-위임’ 관계의 목표와 조건을, 폭군 방벌론(暴君放伐論)은 그 관계가 언제 누구에 의해 종료되는지를 알려준다. 유가 사상에서 정치적 대표자는 백성의 의지와 이해를 하늘 앞에 대표하는 자이며,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은 실은 백성에게서 받는 것이다.

기원전 중국에서 시작된 유가의 ‘대표 이론’ 전통은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 2천 년이 지난 18세기 조선에서 다산 정약용은 이러한 대표제 정치의 개념을 ‘탕론(蕩論)’에서 흥미로운 비유로 재현해 내기도 했다.¹⁸⁾

대저 천자(天子)의 지위는 어떻게 해서 갖게 되는 것인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천자가 되었던 말인가, 아니면 땅에서 불쑥 솟아나 천자가 되었던 말인가. 근원을 따지면 이렇다. 5가(家)가 1린(隣)이 되고, 5가에서 장(長)으로 추대한 사람이 인장(隣長)이 된다. 5린(隣)이 1리(里)가 되고 5린의 장으로 추대된 사람이 이장(里長)이 된다. 5비(鄙)가 1현(縣)이 되고 5비에서 장으로 추대된 사람이 현장(縣長)이 된다. 또 여러 현장들이 추대한 사람이 제후(諸侯)가 되는 것이요, 제후들이 추대한 사람이 천자가 되는 것이고 보면 결국 천자란 것은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생겨난 것이다.

대저 여러 사람이 추대하여 생겨난 것일지라도 사람들이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5가에 불협화음이 있다면 5가가 의논하여 인장을 바꿀 수 있고, 5린이 화합하지 못하면 25가가 의논하여 이장을 바꿀 수 있고, 구후(九侯)와 팔백(八伯)이 화합을 못하면 구후와 팔백이 의논하여 천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구후와 팔백이 천

18) ‘탕론(蕩論)’은 폭군인 하나라의 걸(桀)왕을 제후였던 탕(湯)왕이 폐위하고 상나라를 세운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주제를 다룬 글이다.

자를 바꾸는 것은 5가가 인장을 바꾸고 25가가 이장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느 누가 신하가 임금을 쳤다고 말할 수 있던 말인가(정약용 1818?).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천자’, 곧 정당한 정치적 대표가 통치권을 갖게 되는 원리와 과정, 그리고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조건과 그에 대한 평가다. 특히 정치적 대표의 자격 상실과 관련해서 맹자의 폭군방벌론이 전국시대의 극단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면, ‘탕론’에서 정약용의 서술은 그 관념이 2천 년 뒤의 평화로운 조선에서도 유효하게 유지·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서구에서 대표 개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한다(to act on behalf of some other(s))"는 의미를 획득했는데(Birch 1972, 15), 이러한 위임의 개념은 중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제한 정부’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사회계약 이론의 맥락에서 보면, 정치적 위임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하기로 동의하는 절차와 행위에 의해 규정된다. 그런데 피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위임이 결정된다는 이 제한 정부 관념은, 유가 사상에서 ‘천자의 자리는 하늘이 주는 것이며, 하늘의 뜻은 곧 백성들의 지지 여부에 따라 드러난다’는 주장과 교차한다. 또한 서구의 대표 개념이 상징적 대표에서 실질적 대표로, 곧 형식적 대표(standing for)에서 누군가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것(acting for)으로 발전했다면, ‘위민(爲民)’을 핵심으로 하는 유교 정치이론은 사회계약 이론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에 이러한 대표의 두 요소를 정당한 정부의 필요조건으로 결합시켰다.¹⁹⁾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표 개념은 동서양의 여러 시공간에 존재한 보편적인

19)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통치자라도 피치자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힘이나 다른 권위만으로 자리를 보전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악행만을 일삼은 통치자라도 부재보다는 존재가 더 나은 이유가 있지 않으면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의 개념적 발전은 오히려 동양이 빨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에 따르면, 그러한 발생학적 우선성은 중요하지 않다.

정치 체계이며 CPT에서의 상호적 대화와 비교에서 요구되는 중립성을 갖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대 정치에서 ‘대표(제)’는 민주주의를 정당성의 필수 요소로 수용했기 때문에, 근대 이전의 대표(제)와 여러 면에서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표제 민주주의, 곧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는, 원리적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많은 요소를 포기한 체제라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표제 민주주의는 고든 우드가 지적한 대로 순수한 의미의 민주주의와는 다르며, 마냥이 지적하듯이 대부분의 요소는 실제로 반민주적이다. 대표제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귀족성과 탁월성이 보편성과 유사성을 압도한 체제인 것이다(Manin 1997). 그런 의미에서 근대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승리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귀족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할 수도 있다(Sutherland 2018).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대표제라는 지배형태의 본질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근대 이후 정치적 대표(제)는, 사람들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고, 선출 이후에는 그를 통제한다는 관념을 제도화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런 대표제의 관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으며, 여러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선택된 민주주의의 형태는 대표제와 민주주의의 결합이었다. 이 체제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를 의회에 보낼 수 있으며, 정기적인 선거로 그들을 통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평등한 투표권을 가질수록 더 민주적이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질은 거의 대부분 대표를 뽑는 방식, 통제하는 방식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 민주주의가 현대정치에서 유일한 게임의 룰이라면, 여전히 대표제는 그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제는 현대 정치체제의 핵심적 요소이자 다양한 시공간에서 유효한 개념이다. 최초의 정부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까지, 통치가 작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대표는 인간의 정치공동체와 함께 존재해왔다. ‘대표’는 개념적 중립성 안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포괄한다. 그래서 ‘대표’는 일반

적인 사회과학 영역과 비교정치의 핵심적인 기준이면서, 동시에 CPT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립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VI. 결론

이 글의 목적은 크게 3가지였다. 하나는 정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에서 서구 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정인의 프로젝트를 CPT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그가 4가지 전략을 일정하게 완성하여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로 펴냈던 2004년부터 방법론적 고민을 계속하여 『남나들의 정치사상』을 펴냈던 2013년까지의 고민을 살펴보는 데 집중했다. 두 번째는, 그가 제시했던 생물학적 비유, 곧 상동성과 상사성의 비유가 과연 CPT 이론의 방법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전자가 ‘발생학적 동질성’이라면 후자는 ‘기능적 유사성’에 해당하며, 상사성에서 유래하는 기능적 유사성이 CPT에서 필요한 대화와 비교에서 유용한 ‘개념적 중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개념적 중립성’을 갖춘 사례로서 ‘정당성’과 ‘대표’ 개념을 검토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정당성과 대표는 여러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인민 주권, 정의, 행복,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개인성, 자연권 등의 개념들 역시, 그것의 발생학적 기원이 아닌 정치공동체에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면 모두 또 다른 CPT연구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²⁰⁾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존 킨이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에서 취한 입장처럼(Keane 2017), 그 시공간을 그리스와 서구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역사로 확장한다면 개념적 중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CPT 이론이 요구하는 개념적 중립성이 불가피하게 문화적 상대

20) 이 부분은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다.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성과 만난다는 점이다. 정당성 개념에서 잘 나타나듯이, CPT의 개념들 대부분은 인민의 의지가 그 정치적 가치와 체제에 대한 ‘신뢰’로 발현되는 연표 체계를 ‘익힘’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성의 기반이 되는 신뢰 체계의 형성과 유지는 정치공동체 별로 상이한 문화적 맥락에서 나타나고, 그것은 실천이라는 ‘삶의 방식에 대한 체득’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Winch 1990). 이것은 통치의 메커니즘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주체들이 삶의 일부분으로 상시적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마치가 이야기한 ‘맥락적 이해’ 없이는 특정 개념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여기서 문화적 상대성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호 비교와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교와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 공유되는 가치와 개념이 필수적이며, 다만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범주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 도덕, 인민의 복리 등 정치적 복종의 규범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모든 정치공동체에 존재하겠지만, 한 사회의 도덕의 논리를 다른 사회의 종교의 논리에 들어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관후 2015).

대표 개념 역시 마찬가지다. 피너의 주장처럼 모든 인간의 정부는 ‘대표’를 통해 구성되고 유지되었지만, 그 정치적 대표가 가져야 하는 자질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에 따라 모두 다르고 또 항상 변화해 왔다. 문화 상대주의는 대표 개념의 존재 여부를 넘어서지 않으며,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특정한 대표(제)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적어도 한 정치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정당하게 통치되고 있다는 충분하고 좋은 이유들을 갖추고 있다면, 그 대표(제)는 적절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사성에 기반을 둔 대표 개념을 통한 교차문화적 대화는, 선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상동성 발생론적 기원의 차이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횡단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글은 탈서구중심주의의 이론화를 고민했던 강정인이 파악했던 달마이어의 방법론이 가진 의미와 한계, 그에 대한 다른 CPT 이론가들의 비판적 제언을 개

념적 중립성을 통해 재구성하고 그 사례를 보여주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이론적으로 불완전하며 강정인이 고민했던 한계를 충분히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강정인이 완성하지 못한 연구방법론이 의미 있는 작업이자 더 많은 주석을 필요로 하는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정인. 2004.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 강정인. 2013. 『넘나들의 정치사상』. 서울: 후마니타스.
- 강정인. 2016. “‘반서구중심적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신아세아』 23권 2호, 112-141.
- 이관후. 2015. “정당성은 빌려올 수 있는가.” 『정치사상연구』. 21권 1호, 89-114.
- 이관후. 2016a. “왜 ‘대의민주주의’가 되었는가?: 용례의 기원과 함의.” 『한국정치연구』. 25권 2호, 1-26.
- 이관후. 2016b. “한국정치에서 대표의 위기와 대안의 모색.” 『시민과세계』28호. 1-34.
- 이상의·강정인. 2004. “동서양 정치사상에 있어서 政治的 正當性의 비교,” 『정치사상연구』 10권 1호. 83-110.
- 정약용. 1818?. ‘탕론(蕩論)’. 『여유당전서』.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
- 조경란. 2013. 『현대 중국 지식인 지도』. 서울: 글항아리.
- Barker, Rodney. 1990. *Political Legitimacy and th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etham, David. 1991. *The Legitimation of Power*. London: Palgrave Macmillan.
- Bellamy, Richard and Weale, Albert. 2015. “Political Legitimacy and European Monetary Union: Contracts, Constitutionalism and the Normative Logic of Two-Level Game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2(2): 257-274.
- Birch, Anthony H. 1972. *Representation*. London: Macmillan.
- Bisztray, George. 1987. “The Controversy over Value Neutrality in Sociology and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Studies*. 24(1): 40-57.
- Coicaud, Jean-Marc. 2002. *Legitimacy and Politics*, trans. by David A. Curt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lmayr, Fred 2004. "Beyond Monologue: For a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 Perspectives on Politics*. 2(2): 249-257.
- de Barry, Wm. Theodore 1998. *Asian Values and Human Right: A Confucian Communitarian Perspective*.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de Bary, Wm. Theodore 1983. *The Liberal Tradition in China*.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 El Amine, Loubna. 2016. "Beyond East and West: Reorienting Political Theory through the Prism of Modernity." *Perspectives on Politics* 14(1): 102-120.
- Finer, Samuel E. 1999. *The History of Government from the Earliest Times Vol. 1: Ancient Monarchies and Empi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t, Herbert L. A. 2012 [1961]. *The Concept of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enco, Leigh 2016. "Introduction: Thinking with the past: Political thought in and from the 'non-wes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15(4): 377-381.
- Jung, Haw Yol. 1999. "Postmodernity, Eurocentrism, and the Future of Political Philosophy." *Toward a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ed. Fred Dallmayr. Lanham: Lexington Books, 277-296.
- Kang, Jung-in 2017.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without borders: a journey across Ideological times and spaces*. Sogang University Press: Seoul.
- Keane, John. 양현수 역. 2017. 『민주주의 삶과 죽음』. 서울: 교양인.
- Manin, Bernard. 1997.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ch, Andrew F. 2009. "What Is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The Review of Politics* 71: 531-565.
- Park, Chong-Min and Shin, Doh Chull 2006. "Do Asian Values Deter Popular Support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Asian Survey* 46(3): 341-361.
- Peter, Fabienne. 2009. *Democratic Legitimacy*. London: Routledge.
- Pitkin, Hanna. F. 1967.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az, Joseph. 1990. "Introduction." *Authority*. ed. Raz Joseph.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19
- Rehfeld, Andrew. 2005. *The Concept of Constituen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ar, John. 1989. *Legitimacy in the Modern State*.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Simmon, John, A. 1999.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Ethics*, 109(4): 739-771.
- Skinner, Quentin. 박동천 역. 2004.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I』. 서울: 한길사.
- Sutherland, Keith. 2018. "The Triumph of Election: A Pyrrhic Victory." *Rivista di Storia delle Idee* 7: 135-152.
- Williams, Melissa S. and Warren, Mark E. 2014. "A Democratic Case for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Political Theory* 42(1): 26-57.
- Winch, Peter. 1990. *The Idea of a Social Science and its Relation to Philosophy*. London: Routledge.
- Wood, Gordon S. 2008 [1968]. *Representation in the American Revolution*.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투고일: 2022.10.16.	심사일: 2022.11.25.	게재확정일: 2022.11.25.
------------------	------------------	--------------------

Analogy of ‘Analogous Organ’ of Kang Jung-In and ‘Conceptual Neutrality’ in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Methodology

Lee, Kwanhu | 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re-theorize the analogy of ‘analogy’ suggested by Kang Jung-in in the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methodology to ‘conceptual neutrality’. Kang Jung-in has long sought alternatives to embody ‘transversality’ and ‘cross-cultural dialogue’ presented by Fred Dallmayr in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methodology. Kang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ontextual and explanatory power of the concept of comparison and mediation, as well as the expansion of the temporal domain as well as space in multicultural dialogue. For this, Kang suggested the analogy of ‘analogous organ’ of Biology that can be used in reverse and hybrid strategies among the four strategies of Post-Westerncentrism. This is methodology based on not ‘genetic homogeneity’ but ‘functional similarity’ as a medium for dialogue and comparison, and this article presented the concept of ‘legitimacy’ and ‘representation’ as an example of such conceptual neutrality.

Key Words | Post-Westerncentrism,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Cross-Cultural Dialogue, Transversality, Analogy, Conceptual neutrality

『현대정치연구』 편집 및 심사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현대정치연구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12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임기가 종료되는 편집위원은 본인의 사퇴 의사가 없는 한 자동으로 위촉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소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업무를 총괄할 필요에 따라 연구소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 역할을 할 선임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논문의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나.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
 - 다.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의결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제 3장 현대정치연구 발간

제5조 (기고 논문의 접수)

1. 현대정치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연구소 홈페이지(<https://sips.jams.or.kr/>)나 편집위원장을 통해 투고한다.
2. 현대정치연구 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학문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타 학술지나 잡지 혹은 인터넷 등 매체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3년 동안 현대정치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다.
3. 제출 원고는 현대정치연구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쓴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게재신청 논문의 내용이 현대정치연구 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저자에서 반송할 수 있다.
6. 각 호 논문 접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봄호-2월 15일, 여름호-6월 15일, 겨울호-10월 15일

제6조 (논문 게재 신청 자격)

1.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편집위원회에 의해 정치학 연구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사람
3. 편집위원은 익명성과 공정한 절차의 준수를 전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4.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특수관계(가족 및 친족)일 경우, 교신저자는 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를 심사 이전에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통보한다.

제7조 (논문 게재 횟수)

1. 논문투고자는 각 집(輯)당 1회에 한해 단독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2. 각 집에 이미 단독 논문을 게재한 게재자는 해당 집에 1회에 한해 공동 논문을 추가 게재 할 수 있다.

제8조 (논문 게재자의 의무)

1. 편집위원회는 게재논문에 대해 게재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 게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구 소장이 결정한다.
2.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 투고자는 게재료 300,000원을 부담한다.
3.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현대정치연구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하에 본 연구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현대정치연구는 각 권호에 수록된 최종 출판물에 대해 학술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자 본인이 본인 웹사이트 및 소속기관 혹은 리포지터리 등에 본인 논문을 게재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4. 원고 분량이 150매를 초과할 경우, 1매당 5,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제9조 (발간 예정일)

1. 현대정치연구는 년 3회 발간하며, 봄호는 4월 30일, 여름호는 8월 31, 겨울호는 12월 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 접수는 봄호는 2월 15일, 여름호는 6월 15일, 겨울호는 10월 15일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마감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제 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10조 (초심) 편집위원장은 매달 편집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상황을 알리고, 편집위원들과 심사위원 위촉을 논의한다. 단,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제외한 편집위원들과 논의하도록 한다.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들과 논의하여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3. 기일- 초심 결과는 3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4. 판정기준-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초심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결과
가	가	가	게재 가
가	가	수정 후 게재	
가	가	게재불가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1조 (수정 후 재심)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1.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경우, 저자는 1 주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고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현대정치연구 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를 위해 논문을 제출했던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2.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심사 결과에 대해 논문투고자에 의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지 않는다.

제 5장 기타 규정

제14조 (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3. 현대정치연구는 심사와 출간이 완료되는 대로 현대정치연구소 홈페이지에 무료로 온라인 논문게재를 한다.

제15조 (게재증명과 표절처리)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현대정치연구 저술윤리 강령에 의해 처리한다.

제16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구소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현대정치연구소 정관 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02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현대정치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른다.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의 길이

- (1)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한 180매를 넘지 못한다.
- (2) 제출 논문의 표지에 원고 매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 (3) 원고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 필자는 원고지 초과분의 매 1매당 5,000원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한다.

2. 원고의 구성

- (1) 원고는 국문 요약, 영문 및 기타 외국어 요약, 본문, 각주, 참고 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 (2) 국문 요약은 제목과 저자명/소속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다. 영문 요약은 영문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소속을 포함하여 국문 요약의 분량에 준하여 작성한다.
-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5행(200자 원고지 1장)을 초과하는 각주는 본문 중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에(구두점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 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각주 내에서 각주의 번호는 본문 좌단과 일치시키되 둘째 줄부터는 첫째 줄 각주 번호 뒤에 나오는 첫 글자와 일치시킨다.
- (5)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 (6)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지 않은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 직접 마스터를 뜯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3. 저자의 익명성

- (1)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예: 줄고(拙稿)XXX... 혹은 ...(拙著)YYY...

4. 기타 사항

- (1) 한글 사용: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 (2) 외래 용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 (3) 외국 인명: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마오쩌둥(毛澤東)...;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 (4) 외국 지명: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재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뉴욕(New York)...; ...치앙마이(Chiang Mai)...

- (5) 외국 기관, 단체,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이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는 역내 통화 간의 가치 안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1979년 3월에 창설되었다. EMS에는 현재 유럽공동체의 12개 회원국 모두가 가입하고 있다.

- (6) 출처의 표시: 본문과 각주에서 출처를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처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처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 서양서 및 현대물의 출처 표시 요령 〉

1. 출처는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예
 - (1)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6)은...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무어(Moore 1966)...
 - (2)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 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2)... 혹은 ...(Moore 1966)...
 -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Evans 1979, 56)... 혹은 ...(허생 1990, 12)...

- (4) 국문의 경우, 저자가 2명인 경우 “.”을, 3명 이상인 경우 “외”를 활용하고, 영문의 경우 2명은 “and”를, 3명이 이상인 경우는 “et al.”을 사용하며, 아래의 예를 따른다.

예: ...(한배호 . 어수영 1991), (한배호 외 1995), (Almond and Verba 1963) (Verba et al. 1995) ...

- (5)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하되, 한국 문헌을 외국 문헌 앞에 두고, 한국 문헌은 가나다 순서를, 외국 문헌은 알파벳 순서를 따른다.

예: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Cumings 1981, 72; Lee 1968)...

- (6)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年/月月/日日 (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年/月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중앙일보 93/04/08,5)혹은 ...(신동아 93/5, 233).

-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출판예정’을 사용하고, 미간행 원고는 “미간행”이라고 기재한다.

예: ...잉거정(출판예정); ...홍길동(미간행).

-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외교안보연구원 1992)...

〈 인터넷 자료 인용 〉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1988.10.20).
2. 분량이 많은 경우,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예: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1998.10.20>. (1/10 Bar).

〈 참고문헌 작성 요령 〉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 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 홍길동, 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린위진(林昱君).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 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꺼쇠 (『』)로 표시한다.
 -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 (3) 각 문헌의 첫 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 (hanging indentation)

가.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장서방. 1993. 『변화하는 유권자: 17대 총선의 분석』. 서울: 믿음사.

Tillich, Paul. 1963. *Systematic The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출전 인용 규칙을 따르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홍길동. 허생. 홍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Berelson, V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 이창동. 김명희. 허윤기.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나. 학위 논문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다. 편집된 책 속의 글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장노자. 1991. “국건력과 시민사회.” 김서방 외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호박사.

Schydllowsky, Daniel M., and Juan J. Wicht. 1983. “The Anatomy of an Economic Failure.” Cynthia McClintock and Abaraham F. Lowenthal, eds. *The Peruvian Experiment Reconsidered*.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94-113.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 자본주의의 정치』. 서울: 집현연구소. 261-306쪽.

라.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Bell, Daniel 저. 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개벽사

마.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기재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바.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스코트, 제임즈. 1991. “20세기 초 말레이시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농촌 침투와 농민 운동.” 『집단 선택 이론』 5집 1호, 75-101.

이사마. 1993. “법가의 유가적 기원.” 『계간 춘추』(봄), 101-22.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 No. 1(Winter), 32-65.

사.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김민주. 1988.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이론.” 한국정치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 5월.

Haggard, Stephen. 1996.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San Diego. U.S.A. September.

아.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5.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April 22), 23.

자. 편저

편저에 포함되어 있는 저자가 밝혀진 글을 언급할 경우 해당 저자 중심의 문헌 정보를 제공한다. 단, 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언급될 경우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 정보로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Cox, Robert W. 1979. “Labor and the Multinationals.” *Modleski*(1979), 414-29.

Hymer, Stephen. 1979. “The Multinational Cooperation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Modleski*, 386-403.

Modleski, George, ed. 1979.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World*

Power: Reading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5. 이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편집위원회(705-8616, polsci@sogang.ac.kr)로 문의한다.

현대정치연구 저술 윤리강령

1. 목적

- (1) 현대정치연구소는 저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혹은 게재 신청)하는 회원은 본 저술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3) 본 저술 윤리강령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와 저자들 간 특수관계에 의한 연구논문 출간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표절 및 중복게재의 기준

- (1)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 ①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②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 ③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등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2)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 ②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편집위원회는 모든 독자의 제보 내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 (2)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와 연구위원회가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2차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 및 판정을 한다.
- (4)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가 특수관계(가족 및 친족)일 경우, 교신저자는 두고 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 이전에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통보한다.

4. 제재방식

- (1) 표절에 대한 제재
 - ①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 기간을 통보한다.
 - ③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현대정치연구를 통하여 공지한다.
- (2)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 ①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및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 기간을 통보한다.
 - ③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현대정치연구를 통하여 공지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5. 기타

- (1)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기 출간된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 시 원 출처를 밝혀야 한다.
- (2) 본 강령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게재 신청한 논문에 적용된다.

부록1: 현대정치연구소 학술활동 (2015년 3월~2021년 7월)

1. 2015년 3월 제 3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논문 발표회(현대정치연구소 & BK21Plus 사업팀(정치학의 과학화) 공동주최)

·일자: 2015년 03월 27일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501호

·내용:

가. 발표:

- 여지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 복지균열의 부상에 관한 연구-무상급식부터 경제민주화담론까지의 시기 (2009-2012)를 중심으로
- 김태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균등이념과 제헌헌법
- 김성모(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사회적 자본이 사회신포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네트워크 자본을 중심으로
- 정성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 현상 소고
- 이태규(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 당- 국가 체제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과 위상 변화
- 선민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중국식 민주에서의 사회집단의 역할 고찰’ - 위로부터의 정치개혁과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저항을 중심으로

나. 토론:

- 김찬송(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권도혁(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심은정(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정결(서

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한유동(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한성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다. 사회:

- 전재호(서강대), 이민자(서울디지털 대학교)

2.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4월 29일(수) 16시

·장소 : 다산관 209B호

·내용 : 서구중심주의와 역사교육의 공과 (서강대학교 김민정)

3.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4월 25일(토) 13시

·장소 : 다산관 209B호

·내용 : 중국학술의 주체성과 유럽중심론의 비판 (상해 화동사범대학교 류칭)

4. 현대정치연구소, SSK 좋은 정부 연구단,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후원 “정당정치 의 변화 왜 어디로” 저자와의 대화

·일자: 2015년 5월 28일

·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내용:

가. 발표:

정진민(명지대) : 한국의 새로운 정당모델 - 대안으로서의 유권자 정당

강신구(아주대) :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대중정당론의 적실성에 대하여

최준영(인하대) : 대통령제 정당체제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한계

채진원(경희대) : ‘오픈프라이머리 정당 약화론’과 네트워크정당모델

서정건(경희대) : 후보 선출과 정당 조직의 연계 및 변화: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이현우(서강대) : 미국 정당의 양극화 평가 - 약화(decline)인가 적응(adaptation)인가

안병진(경희사이버대) : 정당정치 혁신에 대한 시론 - 미국과 한국의 민주당 사례를 중심으로

임성호(경희대) : 정당 내 정파(faction) 문제와 정치 양극화 - 탈산업시대 정당의 위협요소와 극복 방향

나. 사회:

김민전(경희대)

5. 현대정치연구소 · SSK 탈서구중심주의연구단 공동주최 세미나

·일자: 2015년 6월 5일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209A호

·내용:

가. 발표:

- 엄한진(한림대) : “서구가 바라본 오리엔트, 오리엔트가 바라본 서구”
- 김은실(성신여대) : “유럽중심주의와 러시아 정체성 논쟁”
- 박은홍(성공회대) : “동남아시아에서 반(反)서구중심주의 ‘아시아적 가치’의 양면성”
- 조경란(연세대) : “서구중심주의와 중국중심주의의 대립과 충돌-역사적 회고와 전망”
- 김광수(한국외국어대) : “아프리카중심주의(Afrocentrism) 시각에서 본 아프리카 르네상스의 역사적 맥락화”
- 김은중(서울대) : “라틴아메리카의 관점에서 본 권력의 식민성, 자본주의 세계경제, 유럽중심주의”
- 이지은(한국외국어대) : “서구와 탈서구, 근대와 탈근대-인도 역사학

의 여정”

- 고희탁(서강대) :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근현대 일본의 동화전략과 역
전전략의 이중주”

나. 토론: 장경섭(서울대), 김태연(서울대), 이한우(서강대), 정수복(사회학자
/작가), 임기대(한국외국어대), 박정원(경희대), 김진영(서강대), 이새봄
(연세대)

다. 전경옥(숙명여대), 장인성(서울대)

6. 현대정치연구소 · SSK 좋은정부연구단 공동주최 해외학자초청 세미나

·일자: 2015년 6월 5일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501호

·내용:

가. 발표:

- Edgar Grande(LMU MUNICH, 뮌헨대학교) : “Globalization and the
Re-Structuring of Political Conflict in Western Europe“

나. 사회:

이현우(서강대)

7.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7월 24일(금) 16시

·장소 : 다산관 603호

·내용 :

- 한국 심리학계의 탈서구중심적 연구동향: 유학심리학의 연구를 중심
으로 (서강대학교 조공호)

- ‘우리성’과 ‘쪽’의 심리학: 한국적 세계관에 바탕한 심리학의 한 모형
(한규석) (전남대학교 한규석)

8.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8월 17일(월) 16시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3호

·발표 :

- ‘가족개인’과 한국의 계층질서: 소소유자의 존재와 의식(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 탈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유교사회학적 모색(이영찬) (계명대학교 이영찬)

9.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4호

·발표 : 제국의 역사는 서구중심주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조선대학교 공진성)

10.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10월 2일(금)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발표 : 보편주의적 한국국제관계이론 구축 시도 속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전북대학교 조영철)

11. 현대정치연구소, 한국사회기반연구(SSK) 좋은정부 연구단 공동 주최 해외학자 초청 강연

·일자: 2015년 10월 16일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209B호

·내용:

가. 발표:

- Sverker C. Jagers(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Gothenburg & 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 : Ecological Citizens - Realism or Utopia?
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values for generating green behaviour and consumption

12. 사회과학연구소, 현대정치연구소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해외학자 초청 강연회

-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15시 30분
- 장소 : 다산관 209B호
- 내용 : “유교민주주의의 가치: 도구적 가치로부터 내재적 가치로” (홍콩시립 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김성문)

13.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16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발표 : “패치워크문명론” (동국대학교 황태연)

14. 현대정치연구소, SSK 좋은 정부 연구단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자: 2015년 11월 27일
- 장소: 다산관 209B호
- 내용:
 - 가. 발표:
 - 이수상(부산대) : 언어 텍스트 자료의 네트워크 분석 방법
 - 나. 사회:
 - 이현우(서강대)

15. 현대정치연구소, SSK 좋은 정부 연구단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자: 2015년 12월 4일

·장소: 다산관 209B호

·내용:

가. 발표:

이남영(세종대) : 지역투표현상은 퇴조하는가

나. 사회:

이현우(서강대)

16.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12월 11일(금)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발표 : 유럽중심주의와 역사학 비판 - 국내 서양사학계의 유럽중심주의 논의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 김택현)

17.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발표 : 소농사회론에서 유교적 근대론으로 (성균관대학교 미야지마 히로시)

18. 2016년 2월 제 4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논문발표회(현대정치연구소 & BK21Plus 사업팀(정치학의 과학화) 공동주최)

·일자: 2016년 2월 24일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603호

·내용:

가. 발표:

- 추정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5.24조치의 정책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 - 2010년 이후 북한의 무역 변화를 중심으로

- 황하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대선 후보 단일화 실패와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 1987년 13대 대선을 중심으로

이석희(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서구중심주의의 극복전략과 정치적 정당성: 역전적 동화주의 분석 -정관웅의 『성세위언』을 중심으로

양해만(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북한변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권도혁(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경제민주화는 어떤 민

주화인가?

나. 토론:

김태영(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한성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유재승(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김찬송(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윤호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다. 사회:

전재호(서강대), 한영빈(서강대)

19.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한국정치사상학회 3월 월례학술회의

·일시 : 2016년 3월 19일(토) 15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101호

·내용 : “존 롤스 정치이론에서 공동체주의적 요소” (국민대학교 이종은)

20.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SSK 좋은 정부 연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일시 : 2016년 4월 29일(금) 13시 00분

·장소 : 서강대 가브리엘관 109호

·내용 : “What is Good Government in Asia”

21.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10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3호

·내용 : “Dynamic lobbying: Empirical evidence from foreign lobbying on free trade agreement”

·발표 : 유혜영 교수 (Vanderbilt University)

22.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선거학회 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5월 20일(금) 17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501호
- 내용 : “The Consequences of Government Ideology and Taxation on Welfare Voting”(정부 이데올로기와 조세수준이 복지투표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신정섭 교수 (한양대학교)

23.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주최 해외학자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6월 27일(월)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내용 : “Rethinking “Capitalism” and Long-Run Paths of Development in East Asia”
- 발표 : 김원익 교수 (Louisiana State University)

24.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선거학회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11월 2일(수)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내용 : “Factories for Votes? How Authoritarian Leaders Gain Popular Support Using Targeted Industrial Policy”
- 발표 : 박선경 교수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25.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주최 “2016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

- 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 09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내용 : “선거제도, 여론조사 그리고 선거결과”, “유권자 지형의 변화와 양대 정당의 미래 / 미국 밖에서의 포퓰리즘.”
- 발표 : 이현우 교수 (서강대학교), 하상응 교수 (서강대학교)

26.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선거학회 공동주최 확대월례 세미나

- 일시 : 2017년 4월 21일(금)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311호
- 내용 : “2017 촛불집회: 누가 그리고 왜”
- 발표 : 이현우, 서복경, 이지호 교수(이상 서강대학교)
- 토론 : 장우영(대구카톨릭대학교), 신진욱 (중앙대학교), 하상웅(서강대학교), 김욱(배재대학교)

27.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특별학술대회

- 일시 : 2017년 6월 30일(금) 13시 30분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311호
- 내용 : “촛불과 태극기의 정치”
- 발표 : 김중범(대전대), 전상진(서강대), 신진욱(중앙대), 도묘연(영남대), 이현출(건국대),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이현우, 이지호, 서복경(이상 서강대)
- 토론 : 전재호(서강대), 김윤철(경희대), 박명호(동국대), 강신구(아주대), 황아란(부산대), 이재묵(한국외대)

28.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월례세미나

- 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내용 : “저자와의 대화: 정당의 과거와 미래를 묻다.”
- 발표 : 정진민(명지대)
- 토론 : 진진영(입조처), 강신구(아주대), 서정건(경희대), 안병진(경희대), 임성호(경희대), 채진원(경희대), 최준영(인하대)

29.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11주년 기념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13시 20분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311호
- 내용 : “한국 정치과정연구의 새로운 아젠다”
- 발표 : 박선경(인천대), 강신구(아주대), 조영호(서강대), 강원택(서울대), 장훈(중앙대), 이지호(서강대), 서복경(서강대)
- 토론: 하상응(서강대), 허석재(입조처), 임성호(경희대)
- 사회: 이현우(서강대), 정진민(명지대)

30. 2019 현대정치연구소 콜로키움

- 일시 : 2019년 4월 12일(금) 16시 2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내용 : “미디어생태계 변화와 시사평론의 세계”
- 발표 : 장희영 시사평론가

31. 한국 선거학회-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21년 여름 공동학술대회

- 일시: 2021 6월 18일(금) 15시 30분
- 장소: 온라인(Zoom)
- 내용: 코로나 시대 정당 및 선거정치
- 발표: 박정훈(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김태심(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황인정(성균관대 SSK 좋은민주주의 연구센터)
- 토론: 신재혁(고려대학교), 장한일(국민대학교), 강우창(고려대학교)
- 사회: 이현우(서강대학교)

32. 2021년 7월 월례발표

- 일시: 2021 7월 28일(수) 15시
- 장소: 온라인(Zoom)

- 내용: 박근혜 탄핵과 여성정치: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연구
- 발표: 이영임(California State University-Sacramento)
- 토론: 오세제(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사회: 이현우(서강대학교)

■ 편집위원회 명단 (가나다 순)

강우진(경북대)	김면희(한국외대)
박범섭(영국레딩대)	박선경(인천대)
박영득(충남대)	송병권(서강대)
우병원(한국외대)	이선우(전북대)
이현우(서강대)	조영호(서강대)
최일성(한서대)	하상응(서강대)
한경준(테네시대)	홍지연(홍콩과기대)

현대정치연구 2022년 겨울호 (제15권 제3호)

인 쇄 | 2022년 12월 25일
발 행 | 2022년 12월 30일

발행인 | 이현우
편집인 | 조영호
편 집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펴낸곳 | 도서출판 (주)북크리 (bookcreer@naver.com)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Sogang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35 Baekbeom-ro, Mapo-gu, Seoul, 04107, South Korea
TEL | (+82)2-705-8616 FAX | (+82)2-705-8617
E-mail | polsci@sogang.ac.kr

ISSN 1976-9466